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

## Analysis of the Budget Proposals of Public Institutions by committee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

###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민석 예산분석관  
안옥진 예산분석관  
오지은 예산분석관  
김정훈 예산분석관

**지원** | 박혜림 행정실무원  
심의영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2. 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정부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2023년도 보조, 출자, 출연 등 정부 지원예산을 활용하고 정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맞추어 보건·복지·고용, 교육, R&D 분야 등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4조원(5.2%)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은 112.4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의 비중은 2019년 15.8%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출연금, 보조금, 부담금 등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수입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350개 공공기관 전체의 정부지원 예산안을 개관하고 공공기관 예산안의 주요 현안을 분석한 「중점 분석」과 위원회별로 개별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사업을 분석한 「위원회별 분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점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예산안, 16개 전문기관의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제도 현황 등 시의성이 높은 현안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 편성 시 산출 근거의 정확성 제고, 사업계획 미흡, 사업 성과분석 필요성, 연례적 집행부진, 예산안 조정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보고서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정책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무부 ]

- 1.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보조금 예산 적정성 검토 필요 ..... 5

## 정무위원회

### [ 국무조정실 ]

-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연례적인 수시연구사업 이월액 발생 과다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 15
  - 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연례적인 수시연구사업 이월액 발생 과다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7
  -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연구사업에 편성된 안식년 연구자 관련 경비 조정 필요 ..... 24
-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남 및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 통합·조정 필요 ..... 30
-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 운영사업 등 예산 조정 필요 ..... 35

## [ 금융위원회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41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 재산정 검토 필요 ..... 50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관련 계획 구체화 필요 ..... 58
4.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의 출자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 66
5. 기후대응기금 산업은행 출자(녹색금융) 사업의 자금 인출 스케줄을 고려한 2023년 계획안 규모 감액 검토 필요 ..... 73

## 기획재정위원회

## [ 기획재정부 ]

1.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적정성 검토 필요 ..... 83
2. 한국투자공사 배당 규모 확대를 통한 외국환평형기금 정부 출자수입 증대 고려 필요 .. 92

## 교육위원회

## [ 교육부 ]

1.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103
2.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 사업의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 10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전문인재양성 사업은 구체적인 성과평가 후 예산안 검토 필요 등 ..... 123
  - 1-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전문인재양성 사업은 구체적인 성과평가 후 신규 컨소시엄 예산안 검토 필요 ..... 124
  - 1-2.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기업멤버십SW캠프 사업방식 개선 필요 ..... 133
  - 1-3.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사업의 운영 보완 필요 ..... 138
  - 1-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이관 필요 · 143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사업의 장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148
3.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안 검토 필요 · 154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초격차 기술 확보 민간-출연연 개방형 R&D 사업의 기업 매칭 계획 및 협의 구체화 필요 ..... 160
5.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시설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등 사업의 예산안 검토 필요 · 164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별성과급 사업비의 지급 대상 및 집행계획 명확화 필요 등 · 170
  - 6-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별성과급 사업비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명확화 필요 ..... 171
  - 6-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 소행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의 예산안 적정성 검토 필요 · 175



# 법제사법위원회







범무부



## 가. 현 황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¹)은 「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²)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행정소송·민사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사업³)은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2⁴)에 따라 정부법무공단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3억 1,900만원) 대비 3,200만원 감액된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355	319	319	287	Δ32	10

자료: 정부법무공단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법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다.

2) 「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2.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3.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4.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3) 코드: 일반회계 1031-302

4)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2(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023년도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2023 예산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경상보조(320-01): 287백만원</li> <li>- 인건비 보조:  <math>[(\text{변호사 } 5\text{명} \times 12,051\text{만원}) + (\text{보조직원 } 3\text{명} \times 4,520\text{만원})] \times 38.8\% = 28,700\text{만원}</math> </li> </ul>

자료: 정부법무공단

나. 분석의견

**정부법무공단의 내부 가용자금이 안정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단 운영지원 보조금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단은 설립 첫해인 2008년에 운영비용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이듬해부터는 자체수입을 통한 기관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보조가 없었으나 설립 초기에는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2011년부터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기 시작하였다.

공단에 대한 보조금은 2011년에 1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시작해 매년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에 대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의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정부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조금	1,000	947	856	586	512	486	462	416	395	395	355	319

자료: 정부법무공단

공단의 주된 수익인 소송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착수금은 14억원(21.7%), 성공보수는 10억원(28.2%) 정도가 증가하였다.

[정부법무공단 사업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A)	2018	2019	2020	2021(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착수금	6,593	7,112	7,211	7,938	8,026	1,433	21.7
성공보수	3,700	3,670	4,040	4,266	4,742	1,042	28.2
수수료	1,094	1,226	1,304	1,427	1,448	354	32.4
기타사업수익	60	80	27	160	85	25	41.7
사업수익 합계	11,446	12,088	12,581	13,790	14,301	2,855	24.9

자료: 정부법무공단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된 사업수익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당기순이익	1,083	491	△2	157	△240 <sup>1)</sup>	155	611

주: 1) 2019년의 경우 청사이전에 따라 일시적인 비용(기존청사 및 신규청사 임차료 중복 발생)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였음

자료: 정부법무공단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단의 유동자산 또한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으로 인하여 최근 5년 동안 10억 700만원이 증가하였다. 특히 현금성 자산의 증가폭(68.7%)이 두드러졌으며, 총자산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도 8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부채 비율 또한 1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주요 부채항목을 보면 부가세나 법인카드납부 예정액 등에 대한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 등이고, 외부차입에 대한 부채는 없다.

[정부법무공단 유동자산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A)	2018	2019	2020	2021(B)	증감액 (C=B-A)	증감율 (C/A)
현금성자산	2,219	2,335	1,775	2,576	3,744	1,525	68.7
단기금융상품	4,500	4,500	4,000	4,000	4,000	-500	-11.1
총 유동자산 (A)	6,914	7,159	6,181	6,920	7,921	1,007	14.6
총자산(B)	8,098	8,383	8,029	8,496	9,486	1,388	17.1
유동자산 비율 (A/B)	85.4	85.4	77.0	81.5	83.5	-	-
부채(C)	487	615	500	813	1,193	-	-
자본(D)	7,611	7,768	7,528	7,683	8,294	-	-
부채비율(C/D)	6.4	7.9	6.6	10.6	14.3	-	-

자료: 정부법무공단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공단은 수익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년 정기예금에 예치(단기금융상품)<sup>5)</sup>하고 있는데, 해당 자금의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40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정부법무공단 단기금융상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단기금융상품(A)	4,500	4,500	4,000	4,000	4,000
이자수입(B) (1년 정기예금)	61	86	86	44	53
평균이자율(B/A)	1.35	1.91	2.15	1.1	1.325

자료: 정부법무공단

5) 연도별 예치 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예치금액	1,120	1,830	2,260	3,290	3,690	4,350	4,500	4,500	4,500	4,000	4,000	4,000

자료: 정부법무공단

공단의 유동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공단의 변호사 및 직원 수는 201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6년 이후부터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단의 소송사건이나 자문사건 등의 업무실적이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5년 이후부터 정체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법무공단 직원 수 및 소송사건 및 자문사건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8
변호사 현원	39	44	49	51	51	51	50	52	53	48
보조직원 현원	43	50	52	52	50	51	54	56	56	55
소송사건	1,867	1,774	2,072	2,021	1,831	1,850	1,947	1,757	1,803	1,060
자문사건	2,079	2,336	2,871	2,795	2,735	2,886	3,010	3,020	2,725	1,444

자료: 정부법무공단

따라서 향후에도 공단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공단의 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안정적인 금융자산이 누적되어 있는 점,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공단의 사업수익(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에 대한 비용에 이미 직원 인건비 등이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보조금은 일부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하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운영지원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연례적인 수시연구사업 이월액 발생 과다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는<sup>1)</sup> 국무조정실 소관 기타공공기관이다. 연구회의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총 26개 소관 기관<sup>2)</sup>에 대하여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 기능 조정 및 정비, 기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연구회 및 26개 소관 기관의 2021년 결산액은 5,080억 8,500만원이며, 2022년 예산은 5,456억 6,500만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총 5,544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87억 5,400만원(1.6%)이 증액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기관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b>합 계</b>	<b>508,085</b>	<b>545,665</b>	<b>545,665</b>	<b>554,419</b>	<b>8,754</b>	<b>1.6</b>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2,034	43,343	43,343	37,206	△6,137	△14.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994	17,075	17,075	17,472	397	2.3
국토연구원	19,988	21,327	21,327	21,783	456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8,896	31,497	31,497	31,474	△23	△0.1
산업연구원	20,579	20,814	20,814	22,408	1,594	7.7
에너지경제연구원	11,213	12,253	12,253	11,930	△323	△2.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6,348	6,348	14,597	8,249	129.9
통일연구원	11,684	14,977	14,977	10,298	△4,679	△31.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한다.

2)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와 같은 부설기관을 포함한 값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개발연구원	40,691	42,841	42,841	44,520	1,679	3.9
KDI국제정책대학원	20,290	20,944	20,944	24,709	3,765	18.0
한국교육개발원	18,549	20,288	20,288	20,677	389	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133	25,499	25,499	25,809	310	1.2
한국교통연구원	17,544	19,440	19,440	19,110	△330	△1.7
한국노동연구원	15,918	16,462	16,462	16,286	△176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093	17,398	17,398	17,566	168	1.0
한국법제연구원	12,969	13,901	13,901	14,064	163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255	24,442	24,442	24,484	42	0.2
육아정책연구소	7,564	7,909	7,909	7,990	81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761	15,525	15,525	16,039	514	3.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2,816	37,551	37,551	37,982	431	1.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2,011	22,984	22,984	23,445	461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705	10,424	10,424	10,365	△59	△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6	21,565	21,565	21,663	98	0.5
한국행정연구원	13,423	13,843	13,843	14,356	513	3.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240	12,258	12,258	12,814	556	4.5
한국환경연구원	20,880	22,777	22,777	23,380	603	2.6
건축공간연구원	11,598	11,980	11,980	11,992	12	0.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연례적인 수시연구사업 이월액 발생 과다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가. 현황

연구회의 「2022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예산운용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연구사업비는 연구기관의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ies)인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비를 말하며, 연구사업은 기관고유사업(기본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sup>1)</sup>)과 일반사업, 수탁용역사업, 정부대행사업으로 분류된다.

수시연구사업은 이 중 기본연구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를 의미한다. 즉, 수시연구사업비는 부처의 요청이나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수시연구비는 각 기관별 기본연구비의 10~30%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기본연구사업 성격의 연구과제 및 비연구사업(동향분석, 홍보자료 발간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일부의 수시연구사업비가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 연구기관은 수시연구사업비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구회 소관 기관의 수시연구사업비 결산 현황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안을 포함하여 5년간 26개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기본연구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을 뜻하고, 연구지원사업은 순수연구는 아니나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등)을 의미한다.

연구회 소관 기관의 수시연구사업비 총액은 167억 1,700만원, 이월액은 68억 8,600만원, 집행액은 125억 4,6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수시연구사업비가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다(전체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는 [별첨] 참조).

예를 들어, 대외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매년 수시연구사업비 규모와 비교하여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

[수시연구사업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2019	175	135	310	173	137	55.8
	2020	142	36	178	65	113	36.5
	2021	142	59	201	113	88	56.2
	2022	192	93	285	33	-	11.6
	2023	142	-	-	-	-	-
산업 연구원	2019	214	178	392	138	253	35.4
	2020	201	127	328	184	144	56.1
	2021	201	176	377	215	162	56.9
	2022	201	164	365	68	-	23.9
	2023	271	-	-	-	-	-
한국개발 연구원	2019	82	123	205	128	77	62.4
	2020	150	41	191	89	102	46.8
	2021	180	79	259	125	134	48.2
	2022	100	105	205	84	-	40.9
	2023	70	-	-	-	-	-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2019	355	154	509	190	319	37.3
	2020	255	307	562	251	311	44.6
	2021	245	411	656	342	315	52.0
	2022	245	414	659	252	-	38.2
	2023	245	-	-	-	-	-
한국노동 연구원	2019	92	98	190	159	96	83.7
	2020	79	96	175	86	179	49.1
	2021	127	180	307	177	205	57.7
	2022	128	206	334	71	-	21.3
	2023	96	-	96	-	96	-

주: 1) 이월액은 예산현액에서 미집행되어 이월된 금액을 의미하며, '전년도 이월액'과 '이월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전년도 이월액'의 경우 기본연구과제 수행 후 남게 되는 잔액 등이 수시 연구사업비로 포함되어 이월되기 때문임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수시연구사업은 기본연구사업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기본연구과제와는 달리 연초에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연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적인 수요가 있는 것이므로, 계획에 맞추어 항상 100%를 집행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수시연구사업비에는 전년도의 기본연구과제비 사용 이후 남는 잔액이 포함되기도 하여, 예산현액이 커져 실집행률 제고가 어려운 점도 있다. 출연연구기관들은 대체로 기본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수시연구과제의 연구 부담, 비일상적 수요의 발생에 따른 과제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월액 발생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연구사업에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여 매년 연례적인 이월을 허용하여야 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수시연구과제는 주로 정책현안 과제인 경우가 많아 정책연구의 시의성을 고려하면 조속히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는 수시연구사업비의 경우 총액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수시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또는 지침상 수시연구사업비의 편성비율을 재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별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 수시연구사업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	2019	130	40	170	163	7	95.9
	2020	175	-	175	160	15	91.4
	2021	160	5	165	158	7	95.8
	2022	110	48	158	102	-	64.6
	2023	110	-	-	-	-	-
국토연구원	2019	140	220	360	302	58	85.8
	2020	122	149	271	232	40	85.4
	2021	159	146	305	223	82	73.1
	2022	125	180	305	130	-	42.6
	2023	125	-	-	-	-	-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2019	175	135	310	173	137	55.8
	2020	142	36	178	65	113	36.5
	2021	142	59	201	113	88	56.2
	2022	192	93	285	33	-	11.6
	2023	142	-	-	-	-	-
산업연구원	2019	214	178	392	138	253	35.4
	2020	201	127	328	184	144	56.1
	2021	201	176	377	215	162	56.9
	2022	201	164	365	68	-	23.9
	2023	271	-	-	-	-	-
에너지경제 연구원	2019	135	21	156	132	24	84.6
	2020	105	60	165	134	31	81.2
	2021	121	10	131	119	12	90.8
	2022	150	-	150	31	-	20.7
	2023	155	-	155	-	-	-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2019	29	-	29	24	5	82.8
	2020	29	3	32	27	5	84.4
	2021	29	4	33	8	25	24.2
	2022	29	3	32	32	-	100.0
	2023	29	-	29	-	-	-
통일연구원	2019	64	47	111	110	1	99.1
	2020	96	1	97	27	70	27.8
	2021	96	70	166	113	53	68.1
	2022	99	53	152	5	-	3.3
	2023	85	-	-	-	-	-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한국개발 연구원	2019	82	123	205	128	77	62.4
	2020	150	41	191	89	102	46.8
	2021	180	79	259	125	134	48.2
	2022	100	105	205	84	-	40.9
	2023	70	-	-	-	-	-
한국교육 개발원	2019	190	60	250	183	67	73.2
	2020	197	45	242	208	34	85.9
	2021	174	25	199	177	22	88.9
	2022	326	56	382	61	-	15.9
	2023	239	-	239	-	-	-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2019	355	154	509	190	319	37.3
	2020	255	307	562	251	311	44.6
	2021	245	411	656	342	315	52.0
	2022	245	414	659	252	-	38.2
	2023	245	-	-	-	-	-
한국교통 연구원	2019	47	32	79	46	33	58.2
	2020	49	54	103	55	48	53.4
	2021	54	75	129	65	64	50.4
	2022	61	56	117	26	-	22.2
	2023	51	-	-	-	-	-
한국노동 연구원	2019	92	98	190	159	96	83.7
	2020	79	96	175	86	179	49.1
	2021	127	180	307	177	205	57.7
	2022	128	206	334	71	-	21.3
	2023	96	-	96	-	96	-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2019	176	24	200	115	85	57.5
	2020	157	85	242	181	61	74.8
	2021	364	39	403	220	183	54.6
	2022	237	104	341	121	-	35.5
	2023	148	-	148	-	-	-
한국법제 연구원	2019	251	-	251	94	124	37.5
	2020	101	124	225	178	71	79.1
	2021	101	71	172	150	35	87.2
	2022	151	35	186	75	-	40.3
	2023	101	-	101	-	-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19	150	188	338	318	20	94.1
	2020	124	107	231	212	19	91.8
	2021	123	19	152	138	14	90.8
	2022	123	-	123	43	-	35.0
	2023	123	-	-	-	-	-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육아정책 연구소	2019	111	-	141	133	8	94.5
	2020	116	-	127	121	6	95.4
	2021	129	-	129	123	6	94.9
	2022	124	-	176	44	-	25.0
	2023	124	-	-	-	-	-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	2019	200	14	214	199	15	93.0
	2020	110	49	159	96	63	60.4
	2021	113	64	177	119	58	67.2
	2022	113	79	192	69	-	35.9
	2023	113	-	-	-	-	-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	2019	69	40	109	97	12	89.0
	2020	69	100	169	163	6	96.4
	2021	75	50	125	108	17	86.4
	2022	69	-	69	34	-	49.3
	2023	103	-	-	-	-	-
한국 직업능력 연구원	2019	256	109	365	334	31	91.5
	2020	169	65	234	223	11	95.3
	2021	169	125	294	250	44	85.0
	2022	169	158	327	89	-	27.2
	2023	169	-	-	-	-	-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	2019	69	14	83	79	4	95.2
	2020	69	17	86	82	4	95.3
	2021	69	17	86	81	5	94.2
	2022	70	20	90	10	-	11.1
	2023	70	-	-	-	-	-
한국 해양수산 개발원	2019	90	-	90	90	-	100.0
	2020	115	-	115	115	-	100.0
	2021	134	-	134	134	-	100.0
	2022	127	-	127	23	-	18.1
	2023	103	-	-	-	-	-
한국행정 연구원	2019	128	3	131	120	11	91.6
	2020	145	50	195	136	59	69.7
	2021	97	102	209	190	19	90.9
	2022	97	94	191	64	-	33.5
	2023	124	-	-	-	-	-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2019	102	17	119	75	44	63.0
	2020	110	4	114	92	22	80.7
	2021	80	14	94	65	29	69.1
	2022	77	53	130	24	-	18.5
	2023	134	-	134	-	-	-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한국환경 연구원	2019	171	-	171	171	-	100.0
	2020	173	3	176	156	20	88.6
	2021	187	55	242	227	15	93.8
	2022	202	33	235	144	-	61.3
	2023	195	-	-	-	-	-
건축공간 연구원	2019	103	5	108	100	8	92.5
	2020	108	22	130	124	6	95.3
	2021	98	28	126	113	12	89.6
	2022	77	41	118	88	-	74.6
	2023	68	-	-	-	-	-
합계		16,649	6,886	21,425	12,546	4,581	

주: 1) 이월액은 예산현액에서 미집행되어 이월된 금액을 의미하며, '전년도 이월액'과 '이월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전년도 이월액'의 경우 기본연구과제 수행 후 남게 되는 잔액 등이 수시 연구사업비로 포함되어 이월되기 때문임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KDI국제정책대학원은 해당사항 없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연구사업에 편성된 안식년 연구자 관련 경비 조정 필요

### 가. 현 황

유급 안식년이란, 연구에 전념할 기간이 필요하거나 연구를 위한 재충전 또는 자율적인 연구 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기관에서 연구원에게 부여하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휴직 또는 휴가를 의미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에서는 대체로 연구연가, 자율연구, 연구년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유급 안식년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휴직 관련 규정에 대해 규율하면서 ‘유급 안식년 휴직’의 경우 연구직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sup>1)</sup>.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작성하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도 유급 안식년을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현재 유급 안식년에 대하여는 일부 개괄적인 내용 외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표준지침을 통하여 세부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분석의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일부가 안식년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생활보조금 등의 경비를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비에 해당하므로 연구사업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휴가·휴직 제도) ③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직의 사유와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2.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 준용
3.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하고, 법령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4. 유급 안식년 휴직: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2019년부터 2023년 안식년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체재비, 생활준비금(이사보조비 등 포함), 항공료, 기타 항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2023년도 예산안에서 안식년 연구자 관련 비용을 경상운영비로 편성하고 있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은 생활준비금과 항공료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항공료를 연구사업비에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기관의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별첨]** 참조).

[안식년 연구자 관련 경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기관명	연도	수입(지출) 과목	체재비	생활준비금 등	항공료	보험료 등 기타	계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2019	연구사업비	61,834	-	10,646	4,660	77,140
	2020	연구사업비	-	-	2,275	304	2,579
		경상운영비	4,595	-	-	-	4,595
	2021	연구사업비	-	-	7,466	580	8,046
		경상운영비	20,242	-	-	903	21,145
	2022	연구사업비	-	-	11,507	3,734	15,241
		경상운영비	36,956	-	-	80	37,036
	2023	연구사업비	-	-	36,028	14,820	50,848
경상운영비		87,990	-	-	-	87,990	
한국개발 연구원	2019	연구사업비	52,660	6,289	19,539	13,789	92,277
	2020	연구사업비	102,763	13,123	18,797	5,838	140,521
	2021	연구사업비	48,795	6,220	15,457	8,846	79,318
	2022	연구사업비	108,295	20,376	36,840	20,640	186,151
	2023	연구사업비	109,080	21,816	36,895	15,600	183,391

주.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경우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연구학생경비라는 특수한 경비를 편성함. 출연금 외에도 자체수입으로도 구성되어 있으며, 장학금, 초빙교수 연구인건비 등으로 사용됨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연구회의 「2022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예산운용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연구사업비는 연구기관의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ies)인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비를 말하며, 연구사업은 기관고유사업(기본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sup>2)</sup>)과 일반사업, 수탁용역사업, 정부대행사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안식년 연구자의 연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지역 이동이나 생활에 필요한 경비인 항공료, 생활준비금 등은 경상운영비나 인건비 성격이 강한 경비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를 연구사업비에 편성·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안식년 연구자의 항공료·생활준비금 등 관련 경비는 경상운영비로 이관하는 등 조정할 필요가 있다.

---

2) 기본연구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을 뜻하고, 연구지원사업은 순수연구는 아니나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등)을 의미한다.

## [별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 안식년 연구자 관련 경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기관명	연도	수입(지출) 과목	체재비	생활 준비금 등	항공료	보험료 등 기타	계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	2019	경상운영비	-	-	2,534	1,418	3,952
	2022	경상운영비	-	-	2,647	1,040	3,687
	2023	경상운영비	-	-	6,998	4,500	11,498
국토 연구원	2019	경상운영비 (인력관련경비)	24,150	-	7,015	5,715	36,881
	2020	경상운영비 (인력관련경비)	-	-	2,143	22,153	24,297
	2021	경상운영비 (인력관련경비)	12,500	-	2,336	18,577	33,413
	2022	경상운영비 (인력관련경비)	39,000	-	13,494	9,280	61,774
	2023	경상운영비 (인력관련경비)	19,500	-	7,500	12,500	39,500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2019	연구사업비	61,834	-	10,646	4,660	77,140
	2020	연구사업비	-	-	2,275	304	2,579
		경상운영비	4,595	-	-	-	4,595
	2021	연구사업비	-	-	7,466	580	8,046
		경상운영비	20,242	-	-	903	21,145
	2022	연구사업비	-	-	11,507	3,734	15,241
		경상운영비	36,956	-	-	80	37,036
	2023	연구사업비	-	-	36,028	14,820	50,848
경상운영비		87,990	-	-	-	87,990	
산업 연구원	2019	경상운영비	-	-	1,566	4,206	5,772
	2020	경상운영비	-	-	4,141	1,974	6,115
	2022	경상운영비	-	-	895	1,004	1,899
에너지 경제 연구원	2019	경상운영비 (자체수입)	3,572	7,749	2,676	-	13,997
	2020	경상운영비 (자체수입)	8,180	27,264	6,891	-	42,335
	2021	경상운영비 (자체수입)	5,015	33,937	13,251	-	52,203
	2022	경상운영비 (자체수입)	11,900	7,000	33,000	-	51,900
	2023	경상운영비 (자체수입)	14,560	22,424	16,000	-	52,984

(단위: 천원, %)

기관명	연도	수입(지출) 과목	체재비	생활 준비금 등	항공료	보험료 등 기타	계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2019	국내외 교류협력	85,312	6,872	1,270	-	93,454
	2020	경상운영비	60,275	7,267	5,759	-	73,301
	2021	경상운영비	41,613	3,370	1,574	-	46,557
	2022	경상운영비	75,600	8,400	7,000	-	91,000
	2023	경상운영비	75,600	8,400	7,000	-	91,000
통일 연구원	2019	연구사업비	2,110	-	2,850	17	4,977
한국개발 연구원	2019	연구사업비	52,660	6,289	19,539	13,789	92,277
	2020	연구사업비	102,763	13,123	18,797	5,838	140,521
	2021	연구사업비	48,795	6,220	15,457	8,846	79,318
	2022	연구사업비	108,295	20,376	36,840	20,640	186,151
	2023	연구사업비	109,080	21,816	36,895	15,600	183,391
KDI국제 정책 대학원	2019	연구학생경비	90,676	28,235	18,252	12,239	149,402
	2020	연구학생경비	26,942	3,362	4,040	1,518	35,862
	2021	연구학생경비	-	-	5,452	628	6,080
		경상운영비	-	4,780	-	-	4,780
	2022	연구학생경비	-	-	15,000	7,000	22,000
경상운영비		-	27,168	-	-	27,168	
한국교통 연구원	2019	경상운영비	-	3,900	2,620	2,269	8,789
		경상운영비	-	2,001	1,400	1,882	5,283
	2020	경상운영비	-	2,820	1,471	2,293	6,584
	2021	경상운영비	-	4,180	1,615	2,223	8,018
한국노동 연구원	2019	경상운영비	-	-	2,739	30	2,769
		경상운영비	-	-	1,764	704	2,468
		경상운영비	-	-	375	-	375
	2020	경상운영비	-	-	2,080	935	3,015
	2021	경상운영비	-	-	833	569	1,402
	2022	경상운영비	-	-	9,000	500	9,500
	2023	경상운영비	-	-	9,000	300	9,300
한국조세 재정 연구원	2019	연구사업비	84,839	7,047	10,039	2,793	104,718
	2020	연구사업비	29,249	-	-	-	29,249
	2021	경상운영비	17,731	3,471	4,692	2,062	27,955
	2022	경상운영비	40,752	3,396	8,000	3,000	55,148
	2023	경상운영비	72,720	7,272	15,000	6,000	100,992
한국 직업능력 연구원	2019	연구사업비	-	-	4,922	-	4,922
		경상운영비	-	-	-	3,000	3,000
	2020	경상운영비	-	-	3,215	2,100	5,315
	2021	경상운영비	-	-	1,744	1,254	2,998
	2022	경상운영비	-	-	10,000	5,000	15,000
2023	경상운영비	-	-	10,000	5,000	15,000	

(단위: 천원, %)

기관명	연도	수입(지출) 과목	체재비	생활 준비금 등	항공료	보험료 등 기타	계
한국 해양수산 개발원	2023	경상운영비	6,060	-	5,000	3,500	14,560
한국환경 연구원	2019	경상운영비	-	-	1,662	-	1,662
	2021	경상운영비	-	-	7,869	-	7,869
	2022	경상운영비	-	-	6,000	-	6,000
	2023	경상운영비	-	-	8,000	-	8,000
건축공간 연구원	2020	경상운영비	4,628	-	2,234	900	7,762
합계			1,481,066	298,139	515,774	238,977	2,533,957

주.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경우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연구학생경비라는 특수한 경비를 편성함. 출연금 외에도 자체수입으로도 구성되어 있으며, 장학금, 초빙교수 연구인건비 등으로 사용됨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 가. 현 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sup>1)</sup>는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sup>2)</sup>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연구회의 국책연구기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sup>3)</sup>사업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국회 업무 및 국내외 학술행사, 대규모 회의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과 동일한 5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국책연구기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책연구기관 스마트워크 센터 운영	492	529	529	529	-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 1) 국무총리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 3) 코드: 일반회계 1531-301

[2023년도 국책연구기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2023 예산안(529,000천원)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등: 458,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및 관리비 등(강남): 267,6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13,000천원×12월=156,000천원(2022년 기준)</li> <li>· 관리비: 6,000천원×12월=72,000천원(2022년 기준)</li> <li>· 예비비: 39,600천원(2023년 임차료 및 관리비 인상 대비)</li> </ul> </li> <li>- 임차료 및 관리비 등(여의도): 16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7,000천원×12월=84,000천원(2022년 기준)</li> <li>· 관리비: 5,000천원×12월=60,000천원(2022년 기준)</li> <li>· 예비비: 18,000천원(2023년 임차료 및 관리비 인상 대비)</li> </ul> </li> </ul> </li> <li>- 고속복합기 렌탈료: 1,200천원×2개소×12월=28,800</li> <li>○ 공공요금: 35,600천원</li> <li>○ 수용비: 25,200천원</li> <li>○ 회의비: 480천원</li> <li>○ 외부용역비: 9,3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예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9,320천원</li> </ul> </li> </ul>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연구회는 현재 2개 지점(강남 및 여의도)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워크센터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1개 지점으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회는 2014년 연구회 본사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행정효율 제고를 위하여 강남 및 여의도에 2곳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에 대하여 국회 업무 및 국내외 학술행사, 대규모 회의 등을 개최하기 위한 공동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 현황]

구분	스마트워크센터
강남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6 부영빌딩 8층</li> <li>○ 운영기간: 2015년 3월 ~ 현재</li> <li>○ 연면적: 380m<sup>2</sup>(사무실 1개, 대회의실 1개, 중회의실 1개, 소회의실 2개)</li> <li>○ 계약기간(현재): 2022. 1. ~ 12.(임차보증금: 1억 4천만원, 임차료: 월 1,300만원)</li> </ul>
여의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8층</li> <li>○ 운영기간: 2019년 6월 ~ 현재</li> <li>○ 연면적: 314m<sup>2</sup>(사무실 1개, 대회의실 1개, 중회의실 1개, 소회의실 2개)</li> <li>○ 계약기간(현재): 2021. 1. ~ 2022. 12.(임차보증금 8천만원, 임차료: 월 700만원)</li> </ul>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최근 5년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된 회의 내역 등을 보면 주로 이사회나 일반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을 뿐, 학술행사나 대규모 회의 등은 개최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스마트워크센터의 면적을 고려<sup>4)</sup>할 때 향후에도 대규모 회의 등의 개최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이사회 및 세미나 개최실적을 보더라도 이사회 53건, 세미나 18건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주로 이사회 개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스마트워크센터 전체 연면적  
 - 강남센터: 380m<sup>2</sup>(사무실 1개, 회의실 4개)  
 - 여의도센터: 314m<sup>2</sup>(사무실 1개, 회의실 4개)

[최근 5년간 스마트워크센터 회의 등 개최 실적]

(단위: 건, 천원)

구분		이사회		세미나 또는 특강	
		개최건수	건당 평균 개최 비용	개최건수	건당 평균 개최 비용
2018	강남센터	13	2,960	5	2,936
2019 <sup>1)</sup>	강남센터	7	2,930	6	3,545
	여의도센터	6	2,842	0	0
2020	강남센터	3	3,267	4	4,010
	여의도센터	9	3,641	0	0
2021	강남센터	3	2,805	1	6,326
	여의도센터	8	2,806	2	3,801
2022.8	강남센터	0	0	0	0
	여의도센터	4	3,698	0	0
합 계		53	-	18	-

주: 1) 2019년 6월에 여의도센터 신규 설치(기존 강북센터에서 여의도센터로 이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는 연구회가 스마트워크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연 평균 6억 8,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상주인원 <sup>1)</sup>	인건비(A)	사업예산 운영비(B)	합 계(A+B)
2018	2	60	638	698
2019	2	48	699	747
2020	2	56	777	833
2021	2	57	492 <sup>2)</sup>	549
2022.7	2	34	299	587
평균		55	627	682

주 1) 상주인원 2명은 각각 강남센터 및 여의도센터의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

2) 예산현액 610백만원 중 49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8백만원은 차년도로 이월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회는 이에 대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연구회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도 국회 출장이나 재택근무 시 등에 스마트워크센터의 사무공간 및 PC 등을 활용하고 있어 2개 지점의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5)

그런데 연구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6)를 포함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 105개 기관 중 국회와의 업무협의 등을 위해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은 연구회가 유일하고,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 목적7)을 고려할 때 센터를 2개 지점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연구회는 스마트워크센터의 활용도를 감안하여 현재 2개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남 및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를 1개 지점으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현황]

(단위: 명)

강남스마트워크센터						여의도스마트워크센터					
2020		2021		2022.8.		2020		2021		2022.8.	
회의	근무	회의	근무	회의	근무	회의	근무	회의	근무	회의	근무
101	1,639	53	1,084	185	540	348	953	295	743	105	52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

7) 소속 직원의 재택근무 공간을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목적(국회 업무 및 국내외 학술행사, 대규모 회의 개최)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가. 현 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sup>1)</sup> 사업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하기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1년 결산액은 336억 600만원, 2022년 예산은 375억 5,1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안은 379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606	37,551	37,551	37,982	431	1.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나. 분석의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교육 운영사업 및 공공기관 채용 수기공모 사업은 사업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수행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379억 8,200만원으로, 이는 기본사업비(305억 5,400만원), 특수사업비(74억 8,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기본사업비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로 구성되며, 특수사업비는 일반사업비와 시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2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기관고유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서 기본연구사업과 연구지원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8-301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일반사업이란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 사업,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을 의미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교육 운영사업’ 및 ‘공공기관 연구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에 특수사업비<sup>2)</sup> 중 일반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이다. ‘조세교육 운영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신규 사업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다. ‘공공기관 연구사업’의 2022년 예산은 10억 6,400만원이며 2023년 예산안은 10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연구사업’의 사업비에서는 ‘공공기관 채용 수기공모’ 사업비를 내역으로 편성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2예산	2023예산안
조세교육 운영사업	-	300
공공기관 연구사업	1,064	1,012
공공기관 채용 수기공모 사업	16	16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조세교육 운영사업은 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조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및 자료를 개발하여 조세교육을 실시하고, 글짓기 및 표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시상식 개최 및 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공공기관 연구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공공기관 채용 수기공모’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실시된 동 사업의 안내문에 따르면,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채용, 청년인턴, 고졸채용, 지역인재채용, 장애인채용 등 공모주제를 구분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본인이 해당하는 분야에 맞춰 취업 수기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취업 수기가 제출되면,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시상작을 선발하여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와 같은 조세교육 운영사업, 공공기관 채용 수기공모 사업과 같은 교육·행사 또는 홍보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2) 일반사업비와 시설비를 포함한다.

첫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정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관을 보면, 제2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미션에 비추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교육·행사 또는 홍보 목적의 대국민 교육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

제2조(목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세 및 재정분야의 제도·행정·정책에 관한 종합연구
2.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4. 재정사업 평가 등에 관한 조사·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관」(2021.3.25. 전문개정)

둘째, 정관 제4조제5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근거로 홍보성 사업, 행사 등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또는 ‘연수’는 동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 자체를 위해서 해당 기관의 연구자나 관계 직원을 교육·연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확장하여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해당 표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정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구이다.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모두 정관에 “(제1호에서 제○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한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을 두

고 있다. 만약 이를 근거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사업, 행사 등을 수행하는 것이 정관상 정당하다고 본다면, 이러한 해석론에서는 모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이 노동·교육·법제·청소년·여성 등 모든 분야에서 수필이나 글쓰기 공모전, 교육교재 개발, 취업이나 대입 성공 시기 공모 등의 행사·홍보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되어 역시 적절하지 않다.

셋째, 설령 기관의 설립 목적과 정관의 해석상 대국민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조세교육 운영사업과 공공기관 채용 수기공모 사업이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교육·연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조세교육 운영사업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조세 분야의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이것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분야에 직접 관련된 교육 또는 연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기관 채용 수기공모 사업 역시, 공공기관 입사 성공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공공기관 제도 개선이나 공공기관 현황 분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 일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기관의 조세 또는 공공기관 연구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국가재정 또는 공공기관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것이라면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거나, 연구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현황 분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대국민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의 필요성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아니라 관계된 다른 부처 또는 교육·행사 또는 홍보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다른 기관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교육 운영사업과 공공기관 채용 수기공모 사업은 기관의 미션과 역할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논의하고, 관련 예산을 감액하거나 사업수행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3)</sup>

---

3) 이에 대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교육 운영사업은 정관상 본원의 기능인 교육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한 납세의식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 수기공모 사업은 사회형평적 채용, 직무중심 채용, 공정채용 등 다양한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성과를 수기집 형태로 제시하고 더불어 사업수행의 경험을 관련 정책연구 및 정부정책 수립자문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홍보성 사업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 가.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sup>1)</sup>은 저리의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 비용 절감 및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공급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정 지급보증배수 유지 등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한 유동화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안에는 2022년 추가경정 예산 1,590억원 대비 290억원(△18.2%) 감소한 1,3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50,000	50,000	159,000	130,000	△29,000	△18.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정책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예산안은 최근의 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 감소를 위해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대환<sup>2)</sup>해 주는 제3차 안심전환대출의 공급을 반영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에 31.7조원 규모로 1차로 진행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소득기준을 적용<sup>3)</sup>한 서민형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2632-301

2) 5년 이상 만기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대상 대출에서 제외되며, 2022년 8월 16일까지 제1·2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금리상승기 과도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9.15일부터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2022.9.15.)

3) 2015년 제1차 안심전환대출은 별도의 소득요건이 없었으나, 2019년 실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단, 신희부부 또는 2자녀 이상인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공급되었다. 제3차 안심전환대출은 2022~2023년에 걸쳐 총 45조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1조4)에 따라 정책모기지 유동화증권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배수(지급보증잔액 ÷ 자기자본)는 5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19년 2월 자체 용역을 통해 산정한 적정지급보증배수는 40.7배 수준<sup>5)</sup>이다.

2023년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예산 1,300억원은 2023년 정책모기지 공급액을 44조원(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적격대출 포함) 24조원 및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이에 따른 2023년 말 41.9배의 지급보증배수를 적정지급보증배수 수준인 40.7배<sup>6)</sup>로 낮추기 위한 자본 규모로 산정되었다.

[2023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예산 소요 상세 근거]

(단위: 조원, 억원, 배)

구 분	결 산	추 정	
	2021	2022 (예산)	2023 (예산안)
정책모기지(기초자산) 공급액	31.8조원	44.0조원	44.0조원
유동화증권 지급보증잔액(a)	1,492,524	1,669,444	1,893,382
자기자본(b)	37,604	41,044 <sup>1)</sup>	45,220 <sup>2)</sup>
지급보증배수(a/b)	39.7	40.7	41.9
2023년 정부 출자 예산안 반영	-	-	1,300
지급보증배수(출자 후)	39.7	40.7	40.7

주: 1) 2022년 정부 출자예산(1,590억원) 및 한국은행 출자(1,200억원) 반영

2) 2023년 한국은행 출자액(3,300억원 수준, 현재 협의 중) 반영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3차 안심전환대출은 2022년 9월 출시된 25조원 규모의 소득기준을 적용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과 2023년도 공급 예정인 약 20조원 규모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도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시장 상황 및 2022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5) 2019년 2월 자체용역을 통해 산정한 적정 지급보증배수는 39.4~40.7배 수준이다.

6) 2023년 말 자기자본 추정액 4조 5,220억원은 현재 출자 협의 중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출자금액 3,300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제외할 경우 자기자본 추정액은 4조 1,920억원으로, 1,300억원의 2023년 정부 출자 예산안을 반영한 지급보증배수는 40.7배에서 43.8배로 상승하게 된다.

년도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대출 요건을 결정할 예정으로, 2022년 9월 현재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세부 조건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2년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 및 2023년 추진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비교]

구 분	2022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023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공급목표	· 약 25조원	· 약 20조원	
예측수요	· 20 ~ 30조원	· 20조원 내외	
대환대상 대출요건	· 제1, 2금융권 변동금리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	· (좌동)	
차주 요건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2.5억원 (단, 기존대출 잔액 범위 이내)	· 5억원 (단, 기존대출 잔액 범위 이내)
	주택보유	· 1주택	· (좌동)
만 기	· 10, 15, 20, 30년	· (미정)	
금리수준	· 3.8% ~ 4.0% 수준 ※ 저소득 청년층(만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은 10bp 추가인하	· 신청당시 보금자리론 금리 대 비 0.1%p인하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미정)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2년 8월까지의 정책모기지 공급액 11.2조원이 계획된 19.0조원 대비 58.9%에 불과하는 등 최근의 정책모기지 공급 감소 추세 등 감안 시 2023년 계획안 상 반영된 정책모기지 공급이 계획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 규모의 적정성 평가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3년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 예산안 1,300억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존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sup>7)</sup>의 정책모기지 공급액 24조원과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합한 총 44조원의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것이다. 또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기존의 정책모기지 공급액을 19조원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액을 25조원으로 하여 총 44조원의 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예산규모를 산정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예산(안) 상 정책모기지 공급액 반영(2022, 2023)]

(단위: 조원)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안
기존 정책모기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19.0	24.0
안심전환대출	25.0	20.0
합 계	44.0	44.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1년 1월~2022년 8월간의 월별 정책모기지 공급액을 살펴보면, 최근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정책모기지 대출금리 상승<sup>8)</sup>, 주택

7)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차이]

구 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7,000만원)	연 7,000만원 (신혼 8.5천만원,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이상 1억원)	제한없음
대출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주택가격	5억원(전용면적 85m <sup>2</sup> 이하) 2.5억원	6억원	9억원
대출한도	(신혼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3.6억원 이내 (3자녀 이상 가구 4억원)	5억원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8)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의 2021년 1월 ~ 2022년 8월간의 각 월별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4.28%, 적격대출의 경우 4.83%로, 2021년 1월 대비 각각 2.0%p, 2.23%p 상승하였으며, 2022년 1월과 비교 시 각각 1.12%p, 1.35%p 상승하는 등 2021년 1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입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월별 공급액이 2021년 1월 3조 2,458억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2년 8월에는 1조 1,901억원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2022년 8월까지의 2022년 총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11조 2,075억원으로, 최근의 감소 규모 확대를 별도로 감안하지 않고 단순 12개월로 환산하더라도 연간 16.8조원 수준의 정책모기지 공급이 예상되는 바, 이는 2022년 예산 상의 공급액 19조원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2023년 예산안 상의 안심전환대출 외 기존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2022년 19조원 대비 5조원 증가한 24조원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존 정책모기지 공급 추정 규모인 2022년 19조원과 2023년 24조원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이를 2023년 예산안 적정 규모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월별 정책모기지 공급액(2021.1~2022.8)]

(단위: 억원)

구분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합계	
2021	1월	24,174	3,188	5,096	<b>32,458</b>
	2월	25,506	4,129	9,805	39,440
	3월	25,077	4,287	7,894	37,259
	4월	22,930	3,843	3,685	30,458
	5월	20,491	3,728	2,276	26,495
	6월	16,413	3,593	1,887	21,893
	7월	16,692	4,390	2,498	23,580
	8월	17,141	4,542	3,960	25,643
	9월	16,892	4,318	3,515	24,726
	10월	18,122	2,889	2,858	23,869
	11월	16,830	888	1,033	18,752
	12월	13,139	22	181	13,342
합계	233,409	39,817	44,689	317,91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급자리론 및 적격대출의 가중평균 대출금리 (2021~2022.8.)

(단위: %, %p)

구분	2021년											
	1월 (a)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급자리론	2.28	2.39	2.45	2.48	2.58	2.69	2.76	2.80	2.82	2.85	2.95	3.08
적격대출	2.60	2.60	2.70	2.97	2.99	3.06	3.05	3.03	3.16	3.43	3.63	3.43
구분	2022년											
	1월 (b)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c)	차 이		-	
								(c-a)	(c-b)			
보급자리론	3.16	3.16	3.21	3.37	3.61	3.81	4.13	4.28	2.00	1.12	-	
적격대출	3.48	3.60	3.90	3.99	4.42	4.74	4.97	4.83	2.23	1.35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위: 억원)

구분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합계	
2022	1월	10,354	1,272	1,477	13,104
	2월	11,089	2,562	1,971	15,623
	3월	10,631	3,189	1,218	15,038
	4월	9,605	3,338	2,425	15,368
	5월	8,929	4,111	1,464	14,503
	6월	10,637	4,801	493	15,930
	7월	6,772	3,556	281	10,610
	8월	6,693	4,844	365	<b>11,901</b>
	합계	74,709	27,673	9,693	<b>112,075</b>
12개월 전환	112,064	41,510	14,540	<b>168,113</b>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둘째,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년 25조원, 2023년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의 일시 공급에 따른 MBS 발행금리 상승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이자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조달원가인 MBS(주택저당증권,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발행금리에 대출 상품 운영에 필요한 MBS 발행비용 등 제비용 항목을 더한 손익균형금리에 연동하도록 운영된다. 해당 대출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의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연간 운영안을 심의·의결하며, 매월 금리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9)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산정 방식]

$$\text{보금자리론 금리} = \text{손익균형금리(MBS 발행금리 + MBS 발행비용 등 제 비용)} + \text{유동화 마진}$$

주: [ MBS 발행금리 = 국고채 금리 + MBS 스프레드 ]이며, MBS 발행 시점과 금리결정 시점의 기간차를 고려하여 실제 MBS 발행 금리가 아닌 국고채 5년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를 최근 기준에 맞춰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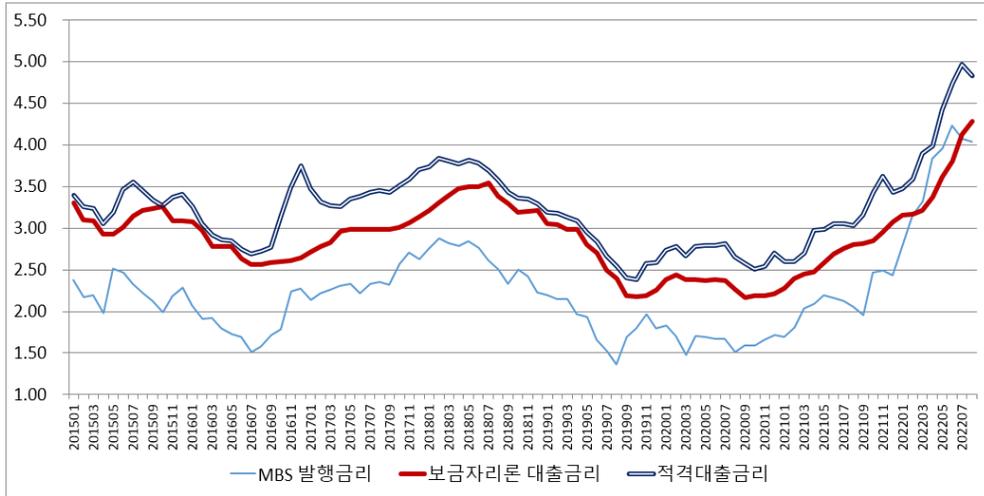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9) 또 다른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의 대출 이자율은 금리의 최종 결정권이 은행에 있으며, 은행은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적격대출 이자율을 결정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대출이자율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S발행을 통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하는 자금을 마련하므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해당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MBS 발행금리에 연동되는 구조이다.

[MBS 발행금리와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및 적격대출금리 추이(2015~2022.8)]

(단위: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런데, 급격한 MBS 발행물량의 증가는 공급증가에 따라 MBS 발행금리를 상승시키며, 이는 정책모기지의 대출이자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2015년 및 2019년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전후로 한 MBS 발행금리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월별 가중평균 대출금리를 나타낸 것이다.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은 31.7조원 규모로 3월에 출시되었으며, 5월부터 7월까지 해당 대출채권의 매입을 위한 MBS가 발행되었다. 또한, 2019년 20조원 규모로 출시되었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019년 9월에 출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MBS 발행이 2019년 12월~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런데 해당 대규모 MBS 발행을 전후로 MBS 발행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으며(음영표시 부분 참조), 이로 인해 관련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및 적격대출 금리 또한 영향을 받아 일시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전후로 한 MBS 발행금리, 보증자리론 대출금리, 적격대출 대출 금리]  
(단위: 억원, %)

구 분	MBS 발행금액	MBS 발행금리	보증자리론		적격대출		
			전월대비 증감	대출금리	전월대비 증감	대출금리	
2015	1월	23,171	2.38	-	3.30	-	3.40
	2월	16,810	2.17	△0.20	3.10	△0.20	3.26
	3월	24,313	2.20	0.02	3.09	△0.01	3.24
	4월	32,406	1.98	△0.22	2.93	△0.16	3.06
	5월	<b>76,198</b>	2.52	<b>0.54</b>	2.93	<b>0.00</b>	3.19
	6월	<b>198,339</b>	2.46	△0.05	3.01	<b>0.08</b>	3.47
	7월	<b>84,539</b>	2.34	△0.13	3.15	<b>0.14</b>	3.56
	8월	21,606	2.21	△0.12	3.21	<b>0.06</b>	3.45
	9월	24,378	2.12	△0.09	3.24	<b>0.03</b>	3.34
	10월	20,834	1.99	△0.13	3.26	<b>0.02</b>	3.27
	11월	20,501	2.18	0.19	3.09	△0.17	3.37
	12월	9,098	2.28	0.10	3.09	0.00	3.41
2019	1월	18,972	2.19	△0.04	3.05	△0.16	3.19
	2월	15,396	2.15	△0.05	3.04	△0.01	3.18
	3월	13,471	2.15	△0.00	2.99	△0.05	3.13
	4월	19,868	1.97	△0.18	2.99	0.00	3.09
	5월	16,084	1.93	△0.04	2.80	△0.19	2.95
	6월	13,276	1.66	△0.27	2.70	△0.10	2.84
	7월	13,816	1.53	△0.14	2.50	△0.20	2.67
	8월	17,424	1.37	△0.16	2.39	△0.11	2.54
	9월	21,370	1.69	<b>0.32</b>	2.19	△0.20	2.41
	10월	23,167	1.80	<b>0.11</b>	2.17	△0.02	2.38
	11월	35,676	1.96	<b>0.16</b>	2.18	<b>0.01</b>	2.58
	12월	<b>65,710</b>	1.79	△0.17	2.26	<b>0.08</b>	2.59
2020	1월	<b>55,155</b>	1.83	0.04	2.38	<b>0.12</b>	2.74
	2월	<b>76,021</b>	1.70	△0.13	2.43	<b>0.06</b>	2.78
	3월	34,884	1.48	△0.22	2.38	△0.06	2.66
	4월	20,143	1.70	0.22	2.38	△0.00	2.78
	5월	37,907	1.69	△0.01	2.37	△0.00	2.79
	6월	50,019	1.67	△0.02	2.38	0.00	2.80

주: 위의 보증자리론 및 적격대출의 대출금리는 금액 가중평균 대출금리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MBS 발행금리와 정책모기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MBS 발행 물량 외에도 기타 국내외 금리상황 및 부동산 경기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와 같이 2015년과 2019년 대규모 안심전환대출의 공급을 전후로 하여 관련 금리를 분석해 볼 때, 2022~2023년간 각각 25조원, 20조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총 45조원의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따른 MBS 물량 급증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규모 안심전환대출의 일시 공급에 따른 MBS 발행 금리의 변동성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 재산정 검토 필요

### 가. 현 황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sup>1)</sup>은 청년층 저축 장려 및 안정적 자산 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sup>2)</sup>으로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2022년 대비 3,126억 1,800만원(657.4%)이 증액된 3,601억 6,800만원의 금액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0	47,550	47,550	360,168	312,618	657.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사업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sup>3)</sup> 및 청년특별대책(2021.8.25.)<sup>4)</sup> 등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해당 상품은 인당 월 납입 한도가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으로, 만기까지 유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하여 1년차 납입액은 2%, 2년차 납입액에 대하여는 4%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sup>5)</sup>하

안옥진 예산분석관(ojan@assembly.go.kr, 6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1831-880

2)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 시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

3) 관계부처 합동,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2021.6.28.

4) 관계부처 합동, “청년세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보도자료, 2021.8.25.

5) 따라서 1인당 최대 36만원(50만원 × 12 × 2% + 50만원 × 12 × 4% =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고, 관련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2023년의 예산안 3,601억 6,800만원은 저축장려금 지원금액 3,600억원과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임금 1억 6,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저축장려금 3,600억원의 편성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 편성 시에는 과거 시중은행 재형저축 청년층 계좌 수 등을 고려하여 38만 계좌로 추정하였던 가입 계좌 수가 2022년 2월 21일~3월 4일 간의 가입기간 동안 실제 287만 계좌로 7.5배 이상 급증하였다.<sup>6)</sup> 이에 3월말 기준 계좌당 평균 납입액 41.1만원에 해지율 10% 수준을 적용한 저축장려금(1년차 2%+2년차 4%=6%) 최대 필요 추정 금액 7,640억원에서, 22년 예산 수령액 456억원을 제외한 금액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50% 수준인 3,600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안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저축 장려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납입금 50만원 × 12개월 × 2%* × 38만 계좌** = 45,600백만원</li> <li>* 1년차 장려율 2%, 2년차 장려율 4%</li> <li>** 과거 시중은행 재형저축 (13~15년) 운영 시 청년층 계좌 추정규모 33만~43만의 평균치</li> </ul>	45,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2.21~3.4일 중 가입자 287만명 중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하는 인원이 80~90%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만기시 지급 예상 총 저축장려금은 679,432~764,400백만원*</li> <li>* [2022년 3월말 기준 월 평균 납입액 41.1만원 × 12 × 1년차2%(2년차4%) × 287만 계좌 × 예상 중도해지율 10~20%] = 679,432~764,400백만원</li> </ul>	360,000

6)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은행 제공 금리는 연 5%(우대금리 최고 연 1% 추가 가능)로,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적용할 경우 연 9.31% 금리의 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금융위원회, “2.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가 시작됩니다. -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보도자료, 2022.2.7.) 일반적인 적금에 비해 높은 이자율 수준 등으로 인해 실제 가입 계좌 수가 최초 상품 추정 계좌 수에 비해 7.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안	
	내용	금액	내용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중 '22년에 저축장려금으로 既 편성된 45,6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 중장기 재무관리 및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24년과 균분하여 50% 수준인 360,000백만원 산출</li> <li>* [764,400백만원 - 45,600백만원] × 50% ≒ 360,000백만원</li> </ul>	
운영 시스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시스템 구축</li> <li>일반연구비(개발비): 640백만원</li> <li>자산취득비: 1,301백만원</li> </ul>	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산보수 비용</li> <li>전산 상주 유지보수인력 임금 : 84백만원 × 2명 = 168백만원</li> </ul>	168
합 계	-	47,550	-	360,168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2022년 2~3월에 가입이 이루어진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저축장려금 지급은 실제 2024년에 이루어지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여 2023년의 저축장려금 지원 예산 3,600억원의 일부를 2024년으로 이연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시 지급 예상 저축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가입 총 계좌 287만 계좌에 대하여 2022년 3월 말 기준 계좌당 월 평균 납입액 41.1만원과 저축장려금 지급율(1년차 2%, 2년차 4%)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예상 중도 해지율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율 25%) 및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중도해지율 13.7%) 등 타기관 자산형성 수신상품 중도해지율을 고려하여 10~20%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중도해지율 20% 반영 시 만기 저축장려금은 6,794억원으로, 10% 반영시에는 7,644억원으로 추정된다. 2023년 예산안 규모 산정시에는 중도해지율 10%로 반영되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지급 저축장려금 추정액]

- 2022년 3월말 기준 계좌 당 월 평균 납입액 41.1만원 × 12개월 × 저축장려금 (1년차 2%+2년차 4%) × 총 287만 계좌 × 예상 중도해지율 10~20%

중도해지율	저축장려금 추정액 (백만원)
20%	679,432
10%	764,400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의 적금 상품으로, 일부 특별중도해지자<sup>7)</sup>에 대한 지급을 제외하고 저축장려금을 포함한 원금 및 이자가 가입 2년 후 만기에 일시 지급된다. 따라서 287만 계좌가 2022년 2월 21일~3월 4일 간 가입되었는 바, 만기 까지 유지되는 계좌에 대한 저축장려금은 2024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은행 청년희망적금 특약 중 저축장려금 지급 내용]

제12조 저축장려금의 지급 등

① 저축장려금은 「서민의 금융생활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제2조의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적금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1.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
2. 이 적금의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및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율 10%를 가정한 만기 저축장려금 필요 추정 금액(7,644억원)에서 2022년 예산 수령액 476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2024년과 균분하여 50%인 3,600억원 규모로 2023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7) 특별중도해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가능하다. (은행 약관 참조)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가. 천재지변
  - 나. 가입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 마.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의 2019~2021년간 결산 및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재무현황 추정을 살펴보면, 2019년 부채가 2조 6,031억원, 자본이 3,032억원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58.6%에서, 2024년에는 부채 3조 9,009억원, 자본 1조 1,054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52.9%로 2019년 대비 505.7%p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부채비율 감소는 주로 신용보증사업과 관련한 정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에 따른 이익발생에 기인한다. 8)9)

[서민금융진흥원 연도별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결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2~2026)			차이 (b-a)
	2019 (a)	2020	2021	2022	2023	2024 (b)	
자산 (a)	29,063	31,706	36,469	43,850	52,900	50,063	21,000
부채 (b)	<b>26,031</b>	27,651	29,444	35,835	43,444	<b>39,009</b>	12,978
자본 (c=a-b)	<b>3,032</b>	4,055	7,025	8,016	9,456	<b>11,054</b>	8,022
부채비율 (b/c)	<b>858.6</b>	681.8	419.1	447.1	459.4	<b>352.9</b>	△505.7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8) 2022~2026년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보증관련 출연금 수입은 2022년 4,487억원에서 2026년 4,277억원으로 해당 기간 동안 총 1조 8,579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당기순이익이 2022년 991억원에서 2026년 1,883억원으로 총 8,058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다.

[중장기 재무전망 추정 시 보증관련 출연금 수입 및 당기순이익 추정 (2022~2026년)]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보증관련							
출연금	복권기금 출연금	2,065	2,125	2,200	2,200	2,200	8,590
수입	금융회사 출연금	2,400	2,431	2,528	2,630	2,051	9,989
추정	햇살론 I 이관금	406	241	63	-	-	710
	합계	4,487	4,579	4,752	4,855	4,277	18,579
	당기순이익	991	1,440	1,598	2,146	1,883	8,058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9) 다만, 청년희망적금 관련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어, 관련 회계처리 방법 변경 시,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2022~2024년간의 부채비율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회계법인이 작성한 서민금융진흥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회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목적에 따라 보수적으로 사업종료시점(2024년)에 출연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나 최종 예산 지원 시점에 따라 재무제표 및 주요재무비율의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위의 2022~2024년간의 서민금융진흥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청년희망적금 사업과 관련한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각 기간 동안의 정부 출연금 수입 및 장려금 지급 비용, 관련 미수금(자산) 및 장려금 미지급액(부채)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즉,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한 저축장려금 정부출연금<sup>10)</sup>은 2022년도에 받은 456억원<sup>11)</sup>을 제외하고 2024년 2월에 받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2024년 2월 정부 출연금 수령 전 발생한 정부출연금 수입 미수금 및 저축장려금 미지급액은 각각 자산(미수금) 및 부채(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22~2026) 상 청년희망적금 관련 반영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합계	비고
연도 중 수익 비용	수익 (이전수입)	2,201	4,801	877	7,8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87만명, 월평균 납입액 38만원 가정</li> <li>비용 중 26억원은 관련 전산구축 등 사업비 지원금 비용임</li> </ul>
	비용 (장려금 지급액 등)	2,201	4,801	877	7,879	
연도 말 자산 부채	자산(미수금)	1,725	6,526	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축장려금 지급 관련 정부출연금 수입 미수금 계상</li> <li>저축장려금 미지급액 부채 계상</li> </ul>
	부채(미지급금)	2,181	6,980	0	-	
정부지원금 수령금		476	0	7,403	7,879	'24.2월에 저축장려금 지급 관련 정부출연금 잔액 수령 가정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2022년도 출연금 477.5억원 중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한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장려금 지급을 위해 단기성(6개월)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있어 2022년 10월 현재 연 2.95%의 금리로 운용되고 있다.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정부로부터 출연받을 저축장려금 또한 2024년 2월 실제 지급 되기 전까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관련 여유자금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10) 월평균 납입액을 38만원으로 가정하는 등, 2023년 예산안 규모 추정을 위한 가정과 일부 차이 (2023년 예산안 상 저축 장려금 총 발생액은 7,644억원이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는 7,879억원으로 반영)가 있다.

11) 운영시스템 구축비용 20억원을 추가할 경우 총 476억원이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관련 출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총 출연금	특별중도해지지급액	여유자금 운용	비고
47,550	2	43,300	* 예치기간
(저축장려금 45,600)			: 2022.5.12.~11.22.
			* 예치금리: 2.95%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서민금융진흥원의 여유자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자금관리규정」 내규에 따라 원본의 안정성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며, 주로 금융회사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여유자금 자산운용 기준]

<p><b>「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b>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회사에의 예치</li> <li>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li> <li>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li> <li>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li> </ol> <p><b>「자금관리규정」(내규)</b> 제4장 자금의 운용 제17조(운용원칙) ① 여유자금은 운용자금 원본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정 유동성 확보 및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여야 한다.</p>
--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그런데, 정부 출연금 예산 조달금리라고 볼 수 있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최근 상승하여 2022년 5월 3.18%, 8월 3.17%으로, 청년희망적금 관련 별도계정에서 운용 중인 금리수준(2.95%)보다 높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전체 여유자금 자산운용 수익률도 2022년 6월말 기준 1.2%에 불과하여 당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3.42% 대비  $\Delta 2.22\%p$  차이가 발생하였다.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단위: %)

구 분	2021	202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1.79	2.95	2.61	3.15	3.18	3.42	3.40	3.17
서민금융진흥원 자산운용 수익률	1.33	-	-	-	-	1.20	-	-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실제 2024년에 이루어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증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정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지원 예산 3,600억원 중 특별중도해지 지급<sup>12)</sup> 금액 등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2024년으로 이연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13)</sup>

12) 2022년 3월~7월간의 각 월별 특별중도해지로 인한 저축장려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만원, 건)

구 분	'22.3월	'22.4월	'22.5월	'22.6월	'22.7월	계
저축장려금 지급액 (건수)	4.1 (4)	6.2 (4)	28.4 (15)	45.1 (17)	94.1 (25)	178.0 (65)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13)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2년에는 1년차 저축장려금 456억원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2023년에는 예산 신청에서의 일관성과 건전재정기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확대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된 1, 2년차 필요 저축장려금의 1/2 수준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가. 현황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sup>1)</sup>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운영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수준의 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가입 대상 청년이 한도 내에서 본인 납입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3,527억 7,2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0	0	0	352,772	352,772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본 사업의 2023년도 예산 3,527억 7,200만원은, 아래와 같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관련 2023년 6개월분 지원 예산<sup>2)</sup> 3,440억 3,700만원, 인프라구축 예산 85억 8,100만원, 청년도약계좌 운영지원을 위한 홍보·운영 예산 1억 5,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n@assembly.go.kr, 6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1831-882

2)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2023년 6월 가입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예산안 산출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내용
기여금 지원	344,0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입요건을 만족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한도내에서 본인 납입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하여 기여금 지급</li> <li>① 가입자 (306만명) × ② 월 지원금 (2.34만원) × ③ 예상 납입률 (80%) × ④ 6개월 = 약 3,440억원</li> </ul>
인프라 구축	8,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소득 심사시스템 구축 및 금융회사와 전산연결 전담 '소득심사센터' 설립</li> <li>① 서민금융진흥원 소득심사센터 인건비(3~5급 및 상담직 총 18명) 617백만원</li> <li>② 민원상담 용역비(외주인력 200명) 3,780백만원</li> <li>③ 경상운영비 4,184백만원</li> </ul>
청년도약계좌 운영지원	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도약계좌 출시 준비 및 출시 후 관리 등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li> <li>일반수용비 4백만원 / 일반용역비 70백만원 / 국내여비 2백만원 / 사업추진비 8백만원 / 정책연구비 70백만원</li> </ul>
합계	352,772	-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sup>3)</sup>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월 기여금 지급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40~70만원, 기여금 정부 매칭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6% 매칭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5년 만기의 장기 금융상품으로, 금리수준 및 월 납입방식 등 상품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2022년 10월 현재 미정이며, 향후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품을 2023~2027년간 판매할 계획에 있다.

3)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조(안)]

구 분	내 용
가입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 병역이행 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월 기여금 지급 한도	소득 구간별 한도 40~70만원
기여금 정부 매칭	소득 구간별로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6% 매칭
만기	5년 만기 (2023~2027년 판매 예정)
금리수준, 월 납입방식 등 상품 세부 사항	상품 판매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임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2022.8.30.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2032년까지 발생 가능한 최대 10년간의 증장기 소요 예산인 바, 금융위원회는 향후 예산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 상품 유지 기간 동안의 총 정부 부담 기여금 등 세부 내역이 국회 예산안 심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032년까지 지출되는 정부 재정 부담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3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여금 지원 금액 3,440억원은 다음과 같이 가입자, 월 지원금, 예상 납입률 추정 등을 통해 산정되었다.

[청년도약계좌 2023년 예산안 상 기여금 지원 규모 산출 세부 내역]

구 분	내 용
• 기여금 지원 금액	① 가입자 (306만명) × ② 월 지원금 (2.34만원) × ③ 예상 납입률 (80%) × ④ 6개월 = 약 3,440억원

구 분		내 용
1.가입자	306만명	① '21년 말 기준 만 19~34세 인구수는 약 1천만명 ② 개인소득, 가구소득 자료를 '21년 말 기준으로 조정하여 추정 ③ 전체 청년 인구 중 조정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변수를 만족하는 청년 인구수 추정치를 산출(470~500만명) ④ 기존 유사상품 사례(청년희망적금 287만명), 지원비율,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인원 예상치(65%) 추정 = 470만명 × 65% = 306만명
2.월 기여금	2.34만원	정부예산안 기준 모든 소득구간별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 매칭 기여금 지원금액(본인 납입금 40~70만원, 매칭비율 3.0~6.0%)들의 가중평균
3.예상 납입률	80%	기존 청년희망적금 납입률 사례 등 고려 80%로 추정 (2022년 3월 말 기준 월 평균 납입금액 41.1만원은 납입 한도 50만원의 80% 수준임)
4.개월 수	6개월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6개월 간 정부기여금 지원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 상품으로, 2023~2027년간 판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2023년 상품 출시 이후에는 상기 정부 기여금 지원 예산 또한 향후 5년 이상 지출될 예정<sup>4)</sup>이다. 따라서 2032년까지의 향후 10년간 총 정부 기여금 등 정확한 정부 지출 규모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에서 이와 관련한 중기재정계획 상 재정투자 규모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sup>5)</sup>

또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의 표에서 예를 들어 1.가입자 수 추정 시 ③ 6,000만원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변수를 만족하는 470~500만명의 청년 인구수 추정치에, 기존 청년희망적금 사례 등을 적용하여 65%를 적용하여 가입자

4) 만약, 금융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2027년까지 청년도약계좌 상품 판매 시, 만기가 5년인 상품이므로 정부 지원 예산은 2032년까지 지출될 수 있다.

5)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 21일자로 아래와 같은 2023~2026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였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정부 예산금액	-	352,772	688,446	693,152	696,381
기여금 총계	-	344,037	670,420	680,126	683,355
기여금 외 총계 (전산 제외)	-	8,735	13,026	13,026	13,026

주: 전산구축비는 미반영 됨(현재 관련 ISP 진행 중으로 추후 반영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수를 306만명<sup>6)</sup>으로 추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65%의 비율은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대상자 대비 가입자 비율 50%<sup>7)</sup>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월 평균 기여금 수령액이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월 평균 기여금의 1.56배<sup>8)</sup> 정도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50%에 대략적으로 1.3배 정도를 고려한 65%를 적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기 소요 예산에 대한 정교한 추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해당 추정 비율이 65%에 미달 또는 초과할 경우, 중장기 소요 지출 예산의 특성 상 총 필요 정부 예산 금액이 추정치와 크게 달라져, 적정 예산 산정을 통한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한다.

즉, 다음과 같이 2023년 예산안에서와 같이 65% 가정 시의 가입자 306만명 추정에 따른 2023년의 6개월 기여금 예산은 3,440억원이며, 만기 5년(60개월) 간의 예산은 3조 4,401억원으로 추정되나, 100% 가정시에는 2023년 예산 5,293억원 및 만기 5년(60개월) 예산 5조 2,925억원으로 소요 예산 범위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에 추가하여, 금융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2027년까지의 상품 판매를 고려할 경우에는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정부 기여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 때, 2024~2027년간 19세 신규 연령 해당자 등 신규 가입자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품 출시에 따른 정부 기여금 부담 규모는 보다 확대될 수 있다.

[가입인원 예상치 비율 추정 가정에 따른 기여금 2023년도 예산 및 5년(만기) 예산 추정액]

구 분	가입자 (만명)	월 지원금 (원)	예상 납입률 (%)	2023 예산 (6개월) (억원)	5년(만기) 예산	
					(60개월) (억원)	65% 가정시 와의 차이
55%	259.16	23,400	80%	2,911	29,109	△5,293
60%	282.72	23,400	80%	3,176	31,755	△2,646
65%	306.28	23,400	80%	3,440	34,401	0
70%	329.84	23,400	80%	3,705	37,048	2,646
75%	353.40	23,400	80%	3,969	39,694	5,293

6) 470만명 × 65% = 306만명이다.

7)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50%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87만명 ÷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자 584만명] 으로 산정되었다.

8)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월 평균 기여금은 위의 표에서 2.34만원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청년희망적금의 월 평균 저축장려금 1.5만원(50만원 × 12개월 × 6%(1년차 장려금 2% + 2년차 장려금 4%) ÷ 24개월)의 1.56배 수준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 분	가입자 (만명)	월 지원금 (원)	예상 납입률 (%)	2023 예산 (6개월) (억원)	5년(만기) 예산	
					(60개월) (억원)	65% 가정시 와의 차이
80%	376.96	23,400	80%	4,234	42,340	7,939
85%	400.52	23,400	80%	4,499	44,986	10,585
90%	424.08	23,400	80%	4,763	47,633	13,231
95%	447.64	23,400	80%	5,028	50,279	15,878
100%	471.20	23,400	80%	5,293	52,925	18,524

주: 월 평균 지원금(2.34만원) 및 예상 납입률(80%)은 2023년 예산안에서 적용된 수치와 동일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된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022년 최초 예산 편성시에는 과거 시중은행 재형저축 청년층 계좌 수 등을 고려하여 계좌수를 38만 계좌로 추정하였으나, 2022년 2월~3월의 가입 기간 동안 실제 총 가입 계좌가 287만 계좌로 예산편성 기준 계좌 수의 7.6배)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만기 2년의 해당 상품 총 정부 장려금 지급 예산 추정액 또한 2022년 예산에서는 1,368 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나, 2023년 예산안 편성시에는 7,644억원으로 5.6배 급증하게 되었다.

[청년희망적금 2022, 2023년 예산안에서의 계좌 수 및 총 정부 장려금 지원액 추정  
(단위: 계좌, 억원)]

구 분	계좌 수	2년간 총 정부 장려금 지원액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a)	380,000	1,368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b)	2,870,000	7,644
비율 (b/a)	7.6	5.6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2032년까지 발생 가능한 최대 10년간의 증장기 소요 예산으로 향후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 바, 금융

9)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은행 제공 금리는 연 5%(우대금리 최고 연 1% 추가 가능)로,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적용할 경우 연 9.31% 금리의 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금융위원회, “2.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가 시작됩니다. -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보도자료, 2022.2.7.) 일반적인 적금에 비해 높은 이자율 수준 등으로 인해 실제 가입 계좌 수가 최초 상품 추정 계좌 수에 비해 7.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향후 예산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 세부 내역이 국회 예산안 심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032년까지 지출되는 정부 재정 부담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의 장기 상품으로,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상품을 판매할 금융기관과 상품 세부사항 협의 등을 통해 정교하고 구체적인 상품 세부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금리수준 등 세부 상품, 세부 사항 등에 대하여 상품 판매 등 금융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기존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단리 적용상품으로, 기본금리 5%를 적용하며, 금융기관별로 1%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2년간 금융기관의 총 이자 지급액은 아래에서와 같이 약 1.2~1.3조원 수준(우대금리 적용 제외)으로 추정된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금융기관 이자 지급액 산출]

내 용
<p>□ 청년희망적금 최초 가입자 기준 286.8만명 기준 2년 만기까지 금융기관(은행)에 적립되는 원금액은 총 22.6 ~ 25.5조원 예상</p> <p>○ <b>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 지급액은 총 1.2 ~ 1.3조원 예상</b></p> <p>(산출근거) [(월 평균납입액 41.1만원 × 24개월 × 기본금리 5%) * × 286.8만 계좌 × 예상 중도해지율 10~20%] = 1,178,748 ~ 1,326,091백만원</p> <p>* 5% 기본금리의 적금상품에 매월 41.1만원씩 24개월 납입 시 이자 513,750원이며, 금융기관별 우대금리는 제외함</p>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그런데,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기존 청년희망적금 2년의 2.5배인 5년의 장기 상품이다. 만약 위의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한 이자율 가정(5% 단리이율 적용)을 적용할 경우, 만기 5년간 금융기관의 이자 지급액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추정되는 1.2~1.3조원의 6~7배 수준인 8.6조원 수준 정도로 추정되는 등, 금융기관 이자도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다.<sup>10)</sup>

[청년도약계좌 금융기관 이자 지급액 추정 (5년, 청년희망적금과 동일 이자율 적용 가정시)]

인당 적립액 (만원)	가입자 (만명)	납입률 (%)	총적립액 (억원)	이자 (억원)
2,762	306	80	676,078	85,918

- 주: 1. 인당 적립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소득구간별 본인납입금 한도(안)를 적용한 가중평균 금액을 적용하였으나, 자유적립식으로 변동 가능  
 2. 이자율은 연 5% 단리(월 0.42%) 이자율 적용하여 추정  
 3. 가입자(306만명) 및 납입률(80%)은 2023년 예산안 상의 가정을 그대로 적용  
 4.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 이자 지급액 추정은 청년도약계좌 투자형 상품 고려시 하락 가능함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적금 금리 또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적금 금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바, 만기 5년인 장기 상품에 대해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1.10~2022.8)]

(단위: %)

2021 /10	2021 /11	2021 /12	2022 /01	2022 /02	2022 /03	2022 /04	2022 /05	2022 /06	2022 /07	2022 /08
0.75	1.00	1.00	1.25	1.25	1.25	1.50	1.75	1.75	2.25	2.5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만기 5년의 장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금리 수준 등 상품 세부사항에 대해 상품을 판매할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교하고 구체적인 상품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 이에 추가하여, 금융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2027년까지의 상품 판매를 고려할 경우에는 2032년까지의 향후 10년간 관련 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이 때, 2024년~2027년간 19세 신규 연령 해당자 등 신규 가입자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품 출시에 따른 금융기관 이자지급 추정액은 증가 할 수 있다.

## 가. 현황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sup>1)</sup>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신산업·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 지원 목적의 혁신성장펀드<sup>2)</sup> 조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이다. 혁신성장펀드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따른 혁신산업 등 지원을 위해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sup>3)</sup>를 재편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안에는 2022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6,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50.0%)한 3,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510,000	600,000	600,000	300,000	△300,000	△5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혁신성장펀드는 2023~2027년의 5년간 연간 3조원씩 15조원의 펀드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의 예산안 3,000억원은 2023년 펀드 조성 규모인 3조원 중, 정부 재정투입 비율을 10%로 하여 산정되었다. 2022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6,000억원의 예산에서는 정부 재정투입 비율이 15%(펀드 조성 규모 4조원)로 반영된 바 있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n@assembly.go.kr, 6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2414-318

2) 펀드(Fund)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집합투자기구)를 말하며,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한다.

3) 관계부처 합동,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보도자료, 2020.9.3.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예산(안) 산정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안	
600,000	○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 펀드 조성규모 4조원 × 정부재 정비율 15% = 600,000백만원	300,000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 펀드 조성규모 3조원 × 정부재 정비율 10% = 300,000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 나. 분석의견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혁신성장펀드는 기존의 뉴딜펀드를 재편하여 운영하는 것이나, 지원 분야 및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액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혁신성장펀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14.)」 및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2020.9.3.)」 등에 따라 조성된 정책형 뉴딜펀드를 재편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1~2025년에 걸쳐 연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정부예산으로 3조원, 한국산업은행이 3조원, 성장사다리 펀드(운용사: 한국성장금융<sup>4)</sup>)가 1조원 출자할 것을 계획하는 등, 정책자금으로 총 7조원 투자를 계획하였으며, 민간자금으로 13조원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4) 한국성장금융은 2013.8. '성장사다리 펀드'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출자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 '성장사다리 펀드 사무국'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6.2.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식회사'로 확대, 설립되었으며, 주주는 증권유관기관 출자회사인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 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2021~2025)]

(단위: 억원)

사업년도	정책자금				민간자금	조성목표
	재 정	한국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소 계		
2021	6,000 <sup>1)</sup>	6,000	2,000	14,000	26,000	40,000
2022	6,000	6,000	2,000	14,000	26,000	40,000
2023	6,000	6,000	2,000	14,000	26,000	40,000
2024	6,000	6,000	2,000	14,000	26,000	40,000
2025	6,000	6,000	2,000	14,000	26,000	40,000
합 계	30,000	30,000	10,000	70,000	130,000	200,000

주: 1) 당초 계획 대비 900억원 감소한 5,100억원 예산 확정  
 자료: 한국산업은행

또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분야는 2020년 9월 발표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sup>5)</sup>과 2020년 12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sup>6)</sup>에서 확정된 ‘뉴딜투자 공동기준’<sup>7)</sup>에 따른 디지털 및 그린뉴딜의 총 40개 분야로 구체화 되어 있다.<sup>7)</sup>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분야]

구 분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세부분야
디지털 뉴딜 (31개)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소재,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첨단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실감형콘텐츠, 가용성강화, 지능형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차세대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디바이스, 차세대컴퓨팅,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핀테크
그린 뉴딜 (17개)	신제조공정, 로봇, 차세대동력장치,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실감형콘텐츠, 차세대반도체, 능동형조명, 객체탐지

주: 중복(밀출) 8개 제외 시 40개 분야임  
 자료: 한국산업은행

5)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9.28.

6) 혁신성장을 담당하는 4개 정부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다.

7) 상기 뉴딜펀드 투자분야는 기 운용 중인「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하여 선정된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별첨2〉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보도자료, 2020.9.28.) 「혁신성장 공동기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산업 분야별 전문가 리서치 등을 거쳐 정책금융의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율적 금융지원을 위해 미래 유망산업 분야를 선별한 공동매뉴얼이다. 현재 투자 운용사의 혁신성장분야 자금 지원 기준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혁신성장 분야는 9개 테마, 46개 분야, 296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기존의 뉴딜펀드 재편을 통해 조성되는 혁신성장펀드의 지원 분야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6.16.)<sup>8)</sup> 및 국정과제<sup>9)</sup> 등을 반영하여 ① 혁신산업 및 ② 성장지원 분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해당 분야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① ‘혁신산업’ 지원 분야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반도체, AI 등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의 신산업·전략산업을, ② ‘성장지원’ 분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금 지원 분야로 대략적으로만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성장펀드 지원 분야]

구분	국정과제	내용
혁신산업	18. (1)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2) 미래핵심기술/탄소중립/ESG 분야 지원 확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신산업·전략산업(반도체, AI 등의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혁신산업) 중소벤처·중견기업 지원
성장지원	31. 재정 및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혁신 스케일업 펀드를 신규 조성	역량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중견·유니콘(기업가치 10억불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금 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혁신성장펀드의 조성 규모 및 출자기관 등과 관련하여서도 2023~2027년의 5년간 연간 3조원씩 총 15조원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존 뉴딜펀드에서 이루어졌던 한국산업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 등의 출자 규모, 비중 등에 대하여도 현재 협의 중으로,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지원 분야 및 타 정책금융기관 출자 규모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펀드의 지원 분야 및 타 금융기관 출자금액 등을 구체화하여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보도자료, 2022.6.16.

9)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7.

둘째, 금융위원회는 기존 뉴딜펀드의 펀드 미결성금액, 미투자금액 및 뉴딜펀드와 투자분야가 유사한 금융위원회 성장지원펀드의 미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출자 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산업은행 출자 예산을 통해 조성 예정인 혁신성장펀드를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재편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래의 표는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의 2021년~2022년 8월까지의 펀드 조성금액 및 해당 펀드의 미투자금액 등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1~2022년간 총 1조 1,100억원의 정부 재정출자를 통해 각 연도별로 4조원씩 총 8조원의 펀드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 (2021, 2022), (2022.8.31.기준)]

(단위: 억원, 개)

구분	펀드 조성 목표						펀드 조성실적		목표대비 펀드미결성 금액	투자실 적 (e)	미투자금액	
	정책출자				민간 출자 (b)	합계 (c= a+b)	금액 (d)	(펀드 수)			설정액 대비 (d-e)	목표대 비 (c-e)
	재정	산업은행	성장 사다리	소계 (a)								
2021	5,100	6,000 <sup>1)</sup>	2,000	13,100	26,900	40,000	63,188	(60)	-	19,087	44,101	44,101 <sup>3)</sup>
2022	6,000	6,000	2,000	14,000	26,000	40,000	4,464 <sup>2)</sup>	(16)	35,536 <sup>2)</sup>	200	4,264	39,800
합계	11,100	12,000	4,000	27,100	52,900	80,000	67,652	(76)	35,536	19,287	48,365	83,901

주: 1) 한국산업은행의 뉴딜펀드에 대한 2021년 출자금액은 실제 6,122억원이며, 추가 122억원은 기업 투자형 1개사 투자촉진 인센티브로 인한 것임

2) 2022년 펀드 중 조성 완료액 4,464억원 외 2조 2,200억원 규모의 펀드가 2022년 8월 현재 조성 진행중에 있음

3) 2021년 펀드조성 목표는 4조원이나, 조성 실적이 목표 금액을 초과한 6조 3,188억원인 바, 미 투자금액을 총 조성실적에서 투자실적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위의 표에서, 해당 펀드의 조성 등을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4조원 설정 목표를 초과한 6조 3,188억원의 60개 펀드가 조성되었으나, 이 중 2022년 8월 말까지의 투자금액이 1조 9,087억원으로, 펀드 조성 금액 중 미투자금액이 4조 4,101억원 남아있다. 그리고, 2022년 6,000억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조성예정인 뉴딜펀드의 조성 목표 또한 4조원이나, 2022년 8월까지 조성 완료된 펀드 규모는 4,464억원으로, 목표 조성 금액 4조원과 비교시 3조 5,536억원 규모의 펀드가

펀드 조성 중(2조 2,200억원) 또는 미설정 상황에 있다.

또한, 2022년의 4,464억원의 펀드 조성 금액 중 2022년 8월까지의 투자 완료 금액은 200억원으로, 조성금액 4,464억원 대비 4,264억원, 그리고 총 조성 목표 규모 4조원과 비교 시 3조 9,800억원의 투자여력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21년과 2022년의 총 뉴딜펀드 조성 완료 및 목표 금액에서, 2022년 8월까지의 투자 완료 금액 1조 9,287억원을 차감한 규모는 8조 3,901억원으로,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해당 금액(8조 3,901억원) 만큼의 투자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혁신성장펀드는 기존의 뉴딜펀드를 재편하여 조성되는 바, 해당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평가 시,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의 펀드 미설정 금액 및 미투자금액으로 인한 추가 투자여력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분야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2018~2020년에 걸쳐 조성되었던 금융위원회 성장지원펀드<sup>10)</sup>의 주목적 투자대상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등을 영위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해당 산업 기업 등이다.

[정책형 뉴딜펀드, 성장지원펀드 비교]

구 분	정책형 뉴딜펀드	성장지원펀드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조성기간	2021~2025년	2018~2020년
조성규모	연간 4조원 씩 총 20조원	9.9조원 (조성 완료)
투자분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및 관련 전, 후방 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 해당 산업 영위 기업 등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2023년 예산안 상의 혁신성장펀드의 투자분야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투자 분야가 성장지원펀드와 중복될 가능성 또한 있는 바, 아래와 같이 2022년 8월 말 현재 성장지원펀드의 미투자금액 1조 6,913억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금융위원회 성장지원펀드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2017.11)」에 따라 2018~2020년에 걸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예산 출자 3,200억원을 바탕으로 결성된 펀드이다. 이는 성장·회수단계 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로, 총 8조원(재정·정책자금 2.6조원 + 민간자금 5.4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운영되었다.

[성장지원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 (2018~2020), (2022.8.31.기준)]

(단위: 억원, 개)

구분	펀드 조성 실적							투자 실적 (d)	미투자금액 (c-d)
	정책출자				민간 출자 (b)	합계 (c= a+b)	(펀드 수)		
	재정	산업 은행	성장 사다리 등	소계 (a)					
2018	1,700	5,608	2,000	9,308	20,043	29,351	(18)	27,282	2,069
2019	1,000	4,929	2,171	8,100	23,934	32,034	(19)	28,043	3,991
2020	500	6,100	2,200	8,800	28,849	37,649	(18)	26,796	10,853
합계	3,200	16,637	6,371	26,208	72,826	99,034	(55)	82,121	<b>16,913</b>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책펀드 조성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 자금 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민간시장의 구축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시장 육성을 위해 민간 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이 효율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한 펀드 조성 목표 금액 달성을 위해 정책펀드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에 무리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기존 정책펀드의 미조성 금액 및 투자여력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뉴딜펀드 및 성장지원펀드 등의 펀드의 미투자금액 10.1조원<sup>11)</sup>(펀드 미조성금액 3.5조원<sup>12)</sup> 포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의 미투자금액 8조 3,901억원과 성장지원펀드의 미투자금액 1조 6,913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12) 이 중 2.2조원 규모의 펀드는 2022년 8월 현재 펀드 조성 진행 중에 있다.

## 기후대응기금 산업은행 출자(녹색금융) 사업의 자금 인출 스케줄을 고려한 2023년 계획안 규모 감액 검토 필요

### 가. 현황

기후대응기금<sup>1)</sup>의 산업은행출자(녹색금융) 사업<sup>2)</sup>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초기단계 탄소중립 핵심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정책금융인 ‘KDB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이하 ‘KDB 넷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기후대응기금에 500억원의 계획안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2년의 계획 금액 1,300억원 대비 800억원 감소(△61.5%)한 규모이다.

[2023년도 산업은행출자(녹색금융)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산업은행출자(녹색금융)	0	130,000	130,000	50,000	△80,000	△61.5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은행의 KDB 넷제로 프로그램 지원분야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나, 민간참여 여건이 미성숙단계에 있어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이다. 즉, 초기단계 녹색기술 사업은 상업적 위험 등으로 민간자금만으로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자금 조달 부족(Funding Gap)이 발생하는 바,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탄소중립 핵심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KDB 넷제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n@assembly.go.kr, 6788-3731)

1)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계획안 심의는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2)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2-300

2023년 계획안에서는 타 기금과의 중복 지원 배제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지원분야 중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수소인프라 및 그린혁신기술·기업을 지원분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용규모는 1,200억원이며, 이에 재정분담률 41.6%를 반영하여 출자 규모를 500억원으로 산정하였다. 재정분담률 41.6%를 제외한 나머지 58.4%(700억원)는 한국산업은행이 자체자금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출자(녹색금융) 계획(안) 세부 산출 근거(2022,2023)]

'22년 계획	'23년 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운용규모 3,000억원</li> <li>기후대응기금 출자 1,300억원 = 3,000억원 × 43.3% (재정분담률 43.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운용규모 1,200억원</li> <li>기후대응기금 출자 500억원 = 1,200억원 × 41.6% (재정분담률 41.6%)</li> </ul>
(지원분야) ①재생에너지, ②수소인프라, ③그린혁신기술기업	(지원분야) ①수소인프라, ②그린혁신기술기업 ↳ '22년 지원분야 중 재생에너지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의 KDB 넷제로 프로그램 운용규모 1,200억원은 아래와 같이 수소인프라 및 그린혁신기술·기업 분야의 시장동향 및 지원분야별 사업 계획 등을 감안한 지원 가능 예상 물량의 예상 총 사업비 5,200억원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이 중,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Funding Gap 해소를 위해 약 25%(23.1%) 수준인 1,200억원을 후순위 대출, 직·간접 투자 등의 정책금융으로 지원할 예정이다.<sup>3)</sup> 1,200억원 중 정부 재정 지원 금액은 500억원이다.

3)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용규모(1,200억원) 한도 내 지원분야·지원방식별 금액은 실제 금융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통합운용)할 계획이다.

[2023년 KDB 넷제로 프로그램 예상 총 사업비 및 프로그램 활용 예시]

(단위: 억원)

구 분		예상 총사업비			KDB 탄소 넷제로 <sup>1)</sup>			민간투자 <sup>1)</sup>		
		금액	물량	단가 <sup>2)</sup>	계	대출 (후순위)	투자 (간접직접)	계	대출 (선순위)	투자 등
수소	소계	4,150	-	-	900	500	400	3,250	2,440	810
인프라 <sup>3)</sup>	연료전지	3,775	60MW	63	800	400	400	2,975	2,250	725
	수소충전소	375	25기	15	100	100	0	275	190	85
그린혁신기술·기업		1,050	25개	42	300	0	300	750	650	100
계		<b>5,200</b>	-	-	<b>1,200</b>	500	700	4,000	3,090	910

주: 1) 각 분야별 지원방식과 비율은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구조를 예시한 것임

2) 선행·유사사업 사례 등 참조(ex. 연료전지: K사업(55.2억/MW), G사업(70.7억/MW)의 평균 등)

3)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전 분야에 대하여 지원 할 예정이며, 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소는 대표 예시임

1. 민간투자 유치효과: 3.3배(민간투자 4,000억원 ÷ 프로그램 운용규모 1,200억원)

2.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연 7만톤(국가 전체 감축량 291백만톤의 약 0.02% 수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 나. 분석의견

기후대응기금의 산업은행 출자(녹색금융)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22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자금 인출 일부가 2024년도 이후에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를 고려하여 2023년도 계획안 규모를 일부 감액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 계획 금액 1,300억원을 바탕으로, KDB 넷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중인 사업은 2022년 7월 말 현재 아래의 3건이다. 총 사업비는 1조 3,240억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22.7% 수준인 3,000억원이 KDB 넷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될 계획이다. 해당 3개 사업의 금융약정은 2022년 4분기에 체결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2022년도 지원예상 주요 사업(2022년 7월 말 기준)]

(단위: 억원)

지원분야	사업명	금융약정 체결 예상시기 <sup>1)</sup>	예상 총사업비 <sup>2)</sup>	KDB 넷제로 프로그램 <sup>2)</sup>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J 99MW 해상풍력	'22.4분기	7,000	1,500
수소인프라	I 액화수소 플랜트	'22.4분기	5,540	1,300
그린혁신기술기업	D 탄소포집 CCUS 사업	'22.4분기	700	200
합 계			13,240	3,000 (22.7%)

주: 1) 금융약정 체결 예상시기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 변동 가능

2) 예상치로, 실제 금융구조 검토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기 3개 사업의 2022년 7월까지의 주요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금융실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실사 및 금융약정 진행은 ① 금융실사 수행 → ② 금융조건 확정 → ③ 사업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 배포 → ④ 금융약정서 협의 및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사업 특성 및 사업주,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 진행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상이하나, 금융실사 수행 시작부터 금융약정 체결까지는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3개 사업은 모두 2022년 4분기 또는 11~12월에 금융약정 체결 및 최초 자금 인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2022년도 KDB 넷제로 프로그램 지원예상 사업의 주요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안)<sup>1)</sup>]

구 분		일자	주요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J 99MW 해상풍력	진행 경과	'21. 5월	■ 금융실사(Due Diligence) 착수
		'21. 12월	■ 주민(어업조합) 동의 완료
		'22. 4월	■ 환경영향평가 완료 ■ 예비 대주단 앞 잠정 금융조건(Indicative Term Sheet) 배포 및 협의 완료
	향후 계획	'22. 9월	■ 금융실사 완료 및 사업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 배포
		'22.10월	■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세부조건 협의 ■ 주기기(풍력터빈) 구매계약 세부조건 협의

구 분		일자	주요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I 액화수소 플랜트	진행 경과	'22.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li> <li>주기기(풍력터빈) 구매계약 체결 및 주기기(풍력터빈) 발주</li> <li><b>금융약정 체결 및 최초인출</b></li> </ul>
		'21.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주사 설립</li> <li>주기기(수소액화설비) 발주</li> </ul>
		'21.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지 정지공사 착수</li> </ul>
		'22.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공사 착공</li> </ul>
	향후 계획	'22.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금융실사(Due Diligence) 착수</b></li> </ul>
		'22.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 대주단 앞 잠정 금융조건(Indicative Term Sheet) 배포</li> <li>금융실사 완료 및 사업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 배포</li> </ul>
		'22. 4Q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금융기관 LoC(Letter of Commitment) 제출</li> <li><b>금융약정 체결 및 최초인출</b></li> </ul>
D 탄소포집 CCUS 사업	진행경과	'22.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금융실사(Due Diligence) 착수</b></li> </ul>
	향후 계획	'22.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도급(EPC) 계약, 유틸리티 공급계약 주요사항 협의 완료</li> <li>예비 대주단 앞 잠정 금융조건(Indicative Term Sheet) 배포</li> </ul>
		'22.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실사 완료 및 사업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 배포</li> </ul>
		'22.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도급(EPC) 계약, 유틸리티 공급계약 체결 및 기자재 발주</li> <li><b>금융약정 체결 및 최초인출</b></li> </ul>
		'23. 2Q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관련 인허가 완료</li> <li>부지굴착 및 공사 개시</li> </ul>

주: 1)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부일정 일부 변동 가능

자료: 한국산업은행

정부가 KDB 넷제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한 것은, 탄소중립 핵심기반의 조기구축을 위해 관련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소요 자원의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금융 해당 금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기 3개 사업의 각각의 자금 수요에 따른 향후 자금 인출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 기후대응기금 계획에 따른 KDB 넷제로 프로그램(후순위 대출)을 통한 지원 금액 3,000억원 중 2022년까지의 소요 예상 금액은 317억원에 불과하며, 26.6%에 해당하는 797억원은 2024년 이후에 인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출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운영성과, 경영수지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출자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2024년 이후에 인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797억원 중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이루어진 2022년 기후대응기금 계획상의 재정분담률 43.3%에 해당하는 345억원은 2023년까지도 사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해당 금액의 활용을 고려하여, 2023년도 출자 계획안 규모를 일부 감액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5)6)</sup>

[2022년도 KDB 넷제로 프로그램 지원대상 사업의 향후 각 사업별 자금 수요 및 인출 스케줄 계획(안)<sup>1)</sup>

(단위: 억원)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22. 하반기	'23. 상반기	'23. 하반기	'24. 상반기	'24. 하반기~	
J 99MW 해상풍력	0	407	296	387	410	1,500
I 액화수소 플랜트	317	827	156	0	0	1,300
D 탄소포집 CCUS 사업	0	200	0	0	0	200
합계	317	1,434	452	387	410	3,000
넷제로 (후순위대출) (각 연도별 합계)	317		1,886		<b>797</b> (26.6%)	3,000
재정분담 (43.3%)	138		817		<b>345</b> (26.6%)	1,300

주: 1) 잠정치이며, 총 사업비 변동, 금융구조 협의과정, 사업 진행경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9. 출자금 (460목)

2. 세부지침

□ 일반출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운영성과, 경영수지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출자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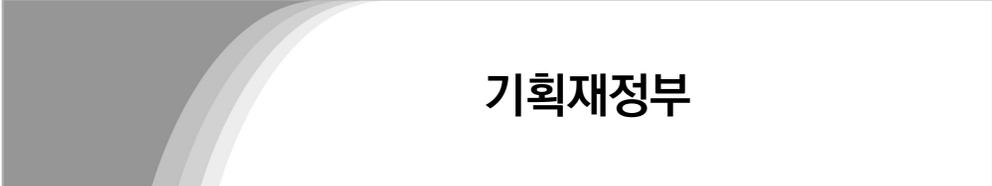
5)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예산감액을 검토할 경우 실제 건설진행 상황 등에 따라 해당시기별 분할 인출금의 규모가 변동 가능한 점(금융기관은 기성에 따라 통상 향후 3개월 이후에 소요되는 건설자금을 기표하며, 자금 기표시기는 차주의 필요시마다 가능), 금융약정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대출의무를 부담하므로 감액된 예산이 차년도에는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6) 또한,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약정 체결 시 약정 한도 내에서 대출금 제공을 약속하며, 차주가 인출 선행요건 충족 시 해당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기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본 사업의 성과평가는 자금인출이 아닌 금융약정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설명하였다.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가. 현황

기후대응기금<sup>1)</sup>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근거하여 2022년에 설치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탄소중립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기후대응기금 수입 계획안 중 일반회계 전입금<sup>2)</sup>은 「탄소중립기본법」 제71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것인데, 2023년도 계획안에는 2022년 대비 4,591억 1백만원(60.2%) 증가한 1조 2,22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일반회계 전입금	0	1,076,635	763,154	1,222,255	459,101	60.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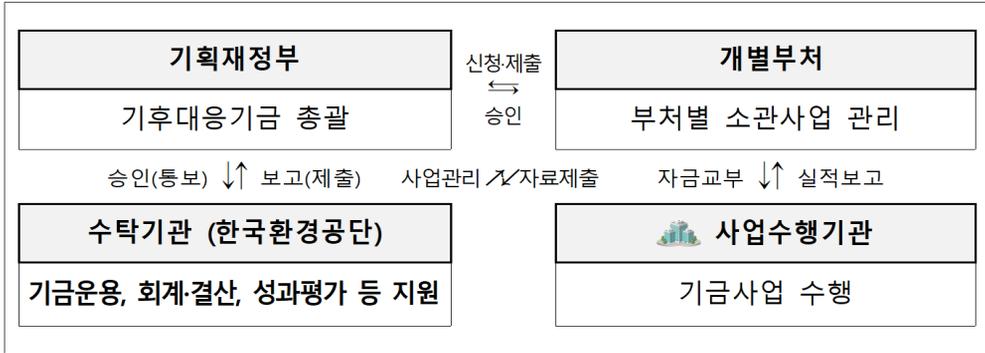
「탄소중립기본법」 제72조<sup>3)</sup>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며, 해당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22년 9월 현재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8호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위탁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지정되어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64조<sup>4)</sup>에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 1)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계획안 심의는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2) 코드: 기후대응기금 91-911
- 3) 「탄소중립기본법」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 「탄소중립기본법」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

따라 다음과 같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처리, 기금 자산운용 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체계도]



자료: 한국환경공단

## 나. 분석의견

기후대응기금 수입 계획안 중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2023년 기후대응기금 총 수입 계획안의 49.2%의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수입 예산의 7% 초과분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기금의 2023년도 수입 계획안 중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1조 2,222억 2,500만원으로, 2023년 전체 수입 계획안 2조 4,867억 2,300만원의 49.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금 자체수입인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sup>5)</sup>의 2023년 계획안 규모가 4,008

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의 자산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탄소중립기본법」

억 9,600만원으로, 2022년 계획금액 7,305억 8,400만원 대비 3,296억 8,800만원 감소<sup>6)7)</sup>한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바탕으로 한 2023년 계획안 상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022년 대비 4,591억 1백만원(60.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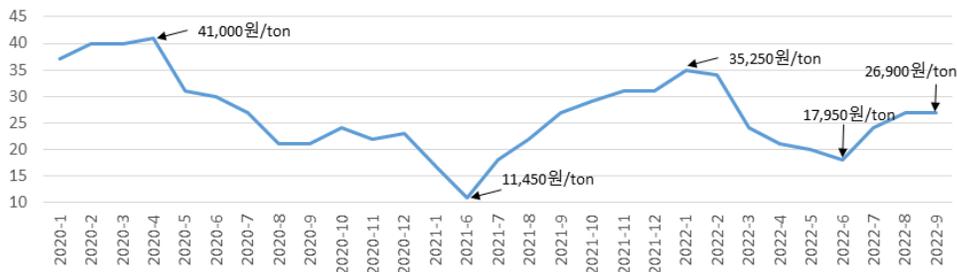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6)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각 업체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 중 일부를 유상할당 경매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입이다. 2022년에는 계획 대비 낙찰률 하락 및 경매단가 하락 등에 따라 2022년 7월 말 기준 수납액이 1,425억원으로, 2022년 수입 계획 금액 7,306억원 대비 19.5%의 낮은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경매금액의 톤당 낙찰 가격은 2020년 4월 4만 1,000원에서 점차 낮아져 2021년 6월에는 톤당 1만 1,450원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이후 2022년 1월에는 톤당 3만 5,250원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2022년 6월에는 다시 톤당 1만 7,950원까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낙찰 가격은 톤당 2만 6,9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톤당 낙찰가격(2020.1~2022.9.)]

(단위: 천원/ton)



주: 2021년 2월~5월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 및 배출권 공급과잉 등에 따라 경매를 일시 중단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7)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의 2022년 계획 대비 2023년 계획안 규모 감소는 경매예상 공급량 감소(△520만톤) 및 예상 낙찰률 감소(△30.0%), 그리고 예상 공급단가 감소(△1,317원/톤) 등에 기인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계획안 세부 산출 근거(2022, 2023)]

구분	2022 계획 (가)	2023 계획안 (나)	차이 (나-가)
합계 (A+B) (백만원)	730,584	400,896	△329,688
경매예상 수익금 (A = a x b x c) (백만원)	730,584	389,340	△341,244
예상 공급량 (톤) (a)	25,800,000	20,600,000	△5,200,000
예상 낙찰률 (%) (b)	100.0	70.0	△30.0
예상 공급 단가 (원/톤) (c)	28,317	27,000	△1,317
시장조성 예비분 수익금 (B = d x e) (백만원)	-	11,556	11,556
예비분물량 (톤) (d)	-	600,000	-
예상 공급 단가 (원/톤) (e)	-	19,260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기후대응기금 수입 계획(안) (2022, 2023)]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안(b)	(비중)	증감 (c=b-a)	증감율 (c/a)
자체수입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730,584	<b>400,896</b>	(16.1)	<b>△329,688</b>	<b>△45.1</b>
내부수입	<b>일반회계</b>	<b>763,154</b>	<b>1,222,255</b>	<b>(49.2)</b>	<b>459,101</b>	<b>60.2</b>
	교통개선특별회계	300,000	300,000	(12.1)	0	0.0
	전력산업기반기금	200,000	200,000	(8.0)	0	0.0
	복권기금	0	90,975	(3.7)	90,975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70,885	272,597	(11.0)	△98,288	△26.5
	소계	1,634,039	2,085,827	(83.9)	451,788	27.6
합 계		2,364,623	<b>2,486,723</b>	(100.0)	122,100	5.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후대응기금 수입 계획 상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 및 제71조에 근거한 것으로, 동법 제71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법적 근거]

<p>「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p>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2022년과 2023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국세수입 예산(안) 상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예산(안)편성 금액과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계

획(안) 금액의 연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기금 설치 연도인 2022년에는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수입 예산의 7%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023년 계획안 상에는 실제 11.0%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즉, 2023년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안 1조 2,222억 5,500만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수입 예산안 11조 1,471억원의 11.0% 규모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수입 예산(안) 및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안)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예산(계획)		2023 예산안 (계획안)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수입 (a)	15,380,500	10,902,200	11,147,100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b)	1,076,635	763,154	1,222,255
비율 (b/a)	7.0	7.0	11.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만약 「탄소중립기본법」 제71조에 따라 2023년 기후대응기금 수입 계획안 상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가 배부될 경우, 해당 금액은 아래와 같이 7,802억 9,700만원으로, 2023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반영된 1조 2,222억 5,500만원 대비 4,419억 5,800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기후대응기금 2023년 총 수입(지출) 계획안 2조 4,867억 2,300만원의 17.8% 수준을 차지한다.

[기후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재계산]

(단위: %, 백만원)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예산 (a)	비율 (%) (b)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a×b)
11,147,100	11.0%	1,222,255
	7.0%	780,297
차이 금액 (A)		441,958
기후대응기금 2023년 총 수입(지출) 계획안 (B)		2,486,723
비율 (A/B)		17.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후대응기금의 2023년도 계획안 상 여유자금 운용 금액은 2022년 대비 523억 5,400만원 감소한 460억 7,400만원으로, 위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할

경우 기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추가 차입 등 부족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여야 할 가능성 또한 발생하게 된다.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여유자금 운용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	101,271	98,428	46,074	△52,354	△53.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탄소중립 생태계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신규로 설치된 기금으로,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금 수입 예산의 정확한 추정 등을 통한 적정 기금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 기후대응기금 총 수입 계획안의 49.2%의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제71조를 고려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수입의 7%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sup>8)</sup>

**둘째,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 상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이상의 추가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기획재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제3항에서와 같이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을 위한 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기후대응기금 수입 계획안 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예산안의 11% 수준으로 설정된 것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제71조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7%에 추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입하였다는 입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sup>9)</sup>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

8)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 제2항 제3호(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따라, 당해연도 기금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입장이다.

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성,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그리고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고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후대응기금에 7.0%, 교통시설특별회계에 68.0%, 환경개선특별회계에 23.0%,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가 배부되고 있다.<sup>10)</sup>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각 기금 및 회계로의 배부 비율]

(단위: %)

관련 기금, 회계	배부 비율	관련 법령
기후대응기금	7.0	「탄소중립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b>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b> 하여야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	68.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b>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b> (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	23.0	「환경정책기본법」부칙<법률 제10893호, 2011.7.21.>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b>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30에 해당하는 금액</b> (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b>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b> 하여야 한다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9~2021년의 기간 동안 연간 13.9~16.6조원이 수납 완료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결산 내역(2019~2021)]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본예산	추경(A)					
2019	14,776,600	14,776,600	14,776,600	14,608,084	14,562,707	98.6	99.7
2020	15,727,270	15,463,600	15,463,600	13,973,839	13,937,883	90.1	99.7
2021	15,690,300	15,690,300	15,690,300	16,631,175	16,598,390	105.8	99.8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 %)

관련 기금, 회계	배부 비율	관련 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b>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b> 하여야 한다.
합 계	100.0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68%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교통시설특별회계<sup>11)</sup>의 경우, 아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제3항에서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특정 세입으로부터의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추가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 내용]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1)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라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된다. 각각 계정의 세입은 동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등에 따라 1. 동법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각 계정과 관련한 사용료, 부담금 등 3. 융자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차입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 상 「탄소중립기본법」 제71조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이상의 추가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기획재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제3항에서와 같이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을 위한 법적 보완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투자공사 배당 규모 확대를 통한 외국환평형기금 정부 출자수입 증대 고려 필요

### 가. 현 황

한국투자공사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1,000억원을 출자 받아 2005년 7월에 설립되었다.<sup>1)</sup> 외국환평형기금은 2023년 계획안 상 한국투자공사로부터의 정부 출자수입<sup>2)</sup> 계획안으로 38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2년 계획 391억 2,000만원 대비 10억 8,000만원 감소( $\Delta 2.8\%$ )한 금액이다.

[2023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정부출자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정부출자수입	57,990	39,120	39,120	38,040	$\Delta 1,080$	$\Delta 2.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외국환평형기금)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하고 있다. 해당 위탁자산은 2005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 말 현재 기준으로 1,171억 달러 규모(기획재정부 871억 달러, 한국은행 300억 달러)이다.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연도별 자산 위탁 현황]

(단위: 억달러)

구 분	2006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기획재정부	0	165.1	435.3	100	50	25.7	5	40	50	871
한국은행	10	160	30	50	0	0	50	0	0	300
합계	10	325.1	465.3	150	50	25.7	55	40	50	1,171 <sup>1)</sup>

주: 1) 2021년 말 기준 환율 1,185.5원/USD 적용 시, 138.8조원 수준임

1. 위탁 원금 기준이며, 계약기준이 아닌 실제 수령 받은 금액 기준임

자료: 한국투자공사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1)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전액(100%) 출자하였다.

2) 코드: 외국환평형기금 52-521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 받은 한국투자공사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2019년 15.2%, 2020년 13.5%, 2021년 8.9% 수준으로, 최근 5년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9.8%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위탁자산 투자수익률]

(단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수익률 (2017~2021)
운용수익률	16.3	△3.8	15.2	13.5	8.9	9.8

주: 상기 운용수익률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수수료 차감 후 수익률임  
자료: 한국투자공사

## 나. 분석의견

외국환평형기금은 연례적으로 정부출자수입을 과소계상하고 있으며, 한국투자공사는 지속적인 위탁자산 확대에 따라 안정적으로 수수료 수입 및 순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에서 배당성향을 높이는 등 정부 배당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정 정부출자수입 계획안 규모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및 2023년 외국환평형기금 정부출자수입의 수입계획(안) 세부 편성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연도별 한국투자공사 예상 당기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 정부출자수입 계획(안) 세부 산출내역 (2022, 2023)]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년 계획	39,120	'21년도 예상 당기순이익 × 60% 이상을 배당하는 것으로 상정
2023년 계획안	38,040	'22년도 예상 당기순이익 × 60% 이상을 배당하는 것으로 상정

자료: 기획재정부

그런데 2013~2022년간의 외국환평형기금의 각 연도별 정부출자수입 계획금액 및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2019년의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실제 수납액이 계획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2021년도의 수납액은 579억 9,000만원으로, 계획금액 252억 6,000만원의 229.6%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도의 수납액은 1,176억 1,700만원으로, 계획금액 391억 2,000만원의 3배 이상(300.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 정부출자수입 계획금액 및 실제 수납액]

(단위: 백만원, %)

연도	당초(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율(B/A)
2013	7,200	7,700	7,700	106.9
2014	7,200	12,400	12,400	172.2
2015	7,700	36,000	36,000	467.5
2016	10,000	14,982	14,982	149.8
2017	14,900	17,609	17,609	118.2
2018	20,706	26,671	26,671	128.8
2019	30,432	26,177	26,177	86.0
2020	32,760	36,654	36,654	111.9
2021	25,260	57,990	57,990	229.6
2022	39,120	117,617	117,617	300.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투자공사는 위탁자산의 확대 및 수익률 증가·달성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외국환평형기금)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위탁운용 수수료 수익이 2021년 4,037억원으로, 2017년 2,006억원 대비 2,031억원(101.2%) 증가하였다. 2021년 수수료수익 중 기본수수료가 3,172억원 규모이며, 성과수수료는 865억원이다.<sup>3)</sup>

이와 같은 수수료 수익 증가에 따라 한국투자공사의 당기순이익 또한 2017년 333억원에서 2021년 1,680억원으로 1,347억원(403.9%) 증가하였다. 2022년 6월 말 기준 6개월간의 당기순이익은 522억원 발생하였으며, 단순 12개월 환산 시 1,044억원으로 2020년의 당기순이익 수준 정도로 산정 되고 있다.

3) 한국투자공사의 수수료수익은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수수료는 위탁기관별 순자산 평가금액에 기본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성과수수료는 [운용수익률 - 기준수익률(Bench Mark) - 기본수수료율]을 계산한 초과수익률에 각 연도의 순자산 평가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초과 성과 금액에 성과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성과수수료는 [운용수익률 - 기준수익률(Bench Mark) - 기본수수료율]의 초과수익률이 "0"미만일 경우 "0"으로 반영한다.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수수료수익 및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

구분	2017 (A)	2018	2019	2020	2021 (B)	2022.6	증 감 (B-A)	증감율 (B-A)/A
수수료수익	2,006	2,098	2,640	3,218	4,037	1,360	2,031	101.2
기본수수료	1,950	2,098	2,396	2,698	3,172	1,360	1,222	62.7
성과수수료	56	-	243	520	865	-	809	1,444.6
당기순이익	333	374	611	967	1,680	522	1,347	403.9

주: 2022년 6월 말 현재 손익 현황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함  
자료: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는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의 2<sup>4)</sup>에 따라 매년 결산 결과 이익발생 시, ① 이월손실금의 보전, ②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③ 국고예의 납입, ④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의 순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공사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연도별로 당기순이익 발생액의 60~80%를 기획재정부(외국환평형기금)에 배당하고 있다. 해당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2016년 80%에서 2020년 60%까지 하락하였다가 2021년 70%로 일부 상승하였다. 한국투자공사 당기순이익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연도별 당기순이익 발생액 중 외국환평형기금에 배당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한 금액은 2017년 66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 504억원으로 동 기간동안 438억원 증가하였다. 즉, 2017~2021년간 당기순이익 총 발생액 3,965억원 중 외국환평형기금 배당액 2,652억원을 제외한 1,313억원을 내부에 유보하였으며, 그 결과 이익잉여금(배당금차감후)은 2021년 말 기준 2,235억원으로 2017년 대비 1,247억원 증가하였다.

4)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예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

(단위: 억원, %, %p)

구 분	2017(A)	2018	2019	2020	2021 (B)	증감 (B-A)	합계 (2017~ 2021)
당기순이익 (a)	333	374	611	967	1,680	1,347	3,965
배당금 (b)	267	262	367	580	1,176	909	2,652
(배당성향 (b/a))	(80.0)	(70.0)	(60.0)	(60.0)	(70.0)	(△10.0)	-
내부유보(a-b)	66	112	244	387	504	438	1,313
이익잉여금 (배당금 차감 후)	988	1,100	1,344	1,731	2,235	1,247	-

주: 1. 각 연도별 배당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금 처분으로 인한 배당금임. 따라서 실제 배당금 지급은 익년도에 발생함

2. 연도말 이익잉여금은 각 연도별 발생한 당기순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 중 배당금 지급액을 차감한 후의 수치임

자료: 각 연도별 한국투자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 결과, 한국투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계정 금융자산은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2006년 887억원에서 2021년 3,681억원으로 2,794억원 증가하였다. 2021년 말 현재 한국투자공사 유가증권 1,640억원의 대부분인 1,393억원(취득원가 1,100억원)은 한국투자공사가 위치한 본사 건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 대한 투자 금액이다.<sup>5)</sup>

5)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말 기준으로 고유계정 금융자산 중 일부를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간접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2014~2021년 간 한국투자공사는 본사 건물 및 신라스테이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에 총 1,37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1년 말 현재 공정가치(장부가액)는 1,640억원 규모이다.

(단위: 억원)

부동산 펀드 명		투자 건물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취 득 원 가	이지스사모부동산 투자신탁 43호	신라스테이	32	274	274	274	274	274	274	274
	미래에셋엠스코어전문투자형 사 모부동산투자신탁 2-3호	본사건물 (스테이트타워 남산)	0	0	0	0	0	1,100	1,100	1,100
	케이리얼티 제6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메이플타워	160	160	160	160	160	160	160	-
	합 계	-	192	434	434	434	434	1,534	1,534	1,374
공정가치 (장부가액) 합계		-	194	438	434	433	414	1,479	1,556	1,640

자료: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감사보고서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고유계정 금융자산]

(단위: 억원)

구분	2006 (a)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b)	증감 (b-a)
현금 및 예치금 (A)	887	730	743	704	1,151	1,401	1,497	1,176	1,357	1,341	1,469	1,567	1,700	801	1,135	2,041	1,154
유가증권 (B)	0	104	180	215	0	0	0	332	276	438	434	482	463	1,479	1,556	1,640	1,640
합 계 (A+B)	887	834	923	919	1,151	1,401	1,497	1,508	1,633	1,779	1,903	2,049	2,163	2,280	2,691	3,681	2,794

자료: 각 연도별 한국투자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투자공사는 위탁 받은 외화자산의 관리·운용을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인력 활용을 위주로 운영되며, 이익의 대규모 내부 유보 등을 통한 시설 투자 등은 크게 필요하지 않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발생 시 이를 내부 유보하기보다는 배당을 통해 재정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관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연례적인 외국환평형기금의 한국투자공사 관련 정부 출자수입의 과소계상 및 한국투자공사 위탁자산 증가 등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 기관 내부 유보 금융자산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에서 배당성향을 높이는 등 정부 배당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출자수입 적정 계획안 규모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교육위원회







교육부



## 가. 현 황

서울대학교병원의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sup>1)</sup>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4조<sup>2)</sup>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목적은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을 건립하여 경기 서남권 지역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의료공백 해소,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7 억원이 감액된 5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립대병원 지원	55,946	65,260	65,260	78,421	13,161	20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0	7,992	7,992	5,215	△2,777	△34.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2~2026년이며, 지하 2층~지상 12층(117,338㎡) 규모의 병원 건립 예정이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3,961억 2,400만원(국고 180,236백만원, 자체 215,88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교육부로부터 1,802억 3,600만원(45.5%)을 출연 방식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코드: 일반회계 2743-301의 내역사업

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지원 방법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규모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출연	서울대학교 병원	396,124 (정부지원 45.5%)	2022년~ 2026년	117,338㎡ (지하2층~ 지상12층)

자료: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3,263억원 (82.4%), 설계비 등 부대비 337억원(8.5%), 예비비 360억원(9.1%)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총액	비중	산출내역
<b>공사비</b>	<b>326,357</b>	<b>82.4</b>	
건축공사비	291,785	73.7	건축연면적 117,338㎡×2.49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22,111	5.6	주차장 제외 연면적 103,982㎡, 신재생 에너지 공급비율 16.67% 적용
녹색건축물인증공사비	11,392	2.9	건축공사비×3.89%(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물 인증 우수)
음압격리병상 구축비	1,069	0.3	표준병동 709㎡×1.51백만원
<b>부대비</b>	<b>33,755</b>	<b>8.5</b>	
설계비	21,664	5.5	공사비(VAT제외)×[5.01%(설계대가요율) ×112.5%(추가 설계비)+1%(측량 및 조사비)] ×1.1(부가세)
감리비	10,132	2.6	공사비(VAT제외)×3.1%(감리대가요율) ×1.1(부가세)
시설부대비	620	0.2	공사비(VAT제외)×0.19%(시설부대비요율) ×1.1(부가세)
설계경제성(VE)검토비	445	0.1	공사비(VAT제외)×[6.1%(기본설계요율)+ 7.4%(실시설계요율)]/100×1.1(부가세)
미술작품 설치비	894	0.2	(주차장 제외 연면적 103,982㎡ - 기전실, 공조 실 면적 9,878㎡)×95%×2백만원×5/1000
<b>용지보상비</b>	<b>-</b>		<b>총사업비 미포함</b>
<b>예비비</b>	<b>36,012</b>	<b>9.1</b>	<b>공사, 부대비의 10%</b>
<b>합계</b>	<b>396,124</b>	<b>100.0</b>	-

자료: 교육부

## 나. 분석의견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절차, 기본설계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의 2022~2023년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의 경우 설계비 62.8억원, 감리비 9.2억원 등 79.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예산안에는 설계비 10.4억원, 공사비 34.2억원 등 52.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2023년까지 설계 절차를 완료한 후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의 예산(안) 산출근거(2022~2023)]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예산	2023 예산(안)
· 설계비	6,287	1,044
· 감리비	922	255
· 시설부대비	56	16
· 예비비	727	474
· 공사비	-	3,426
<b>합계</b>	<b>7,992</b>	<b>5,215</b>

자료: 교육부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의 2022년 예산 집행현황(2022년 1~10월)을 살펴보면,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선금으로 30억원이 집행됨에 따라 실집행률은 37.5%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조한 집행률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사발주 방식을 변경함(설계·시공 분리발주에서 설계시공 일괄(턴키)입찰로 변경<sup>3)</sup>)에 따라 일정변경 및 총사업비 비목조정 등이 불가피해져 현재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현재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으나 설계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에

3) 서울대학교병원은 연약지반(매립지) 공사의 난이도, 공기단축 및 우수한 시공 품질 확보의 필요성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턴키발주로 변경하였다고 설명한다.

총사업비 조정절차 완료 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 설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발주 방식 변경(2022년 4월) 전 2023년 감리비 집행 예산은 9.2억 원 가량이었으나,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수행 중인 감리업체에 대한 선금(총 감리비101억원의 약 30%)으로 2022년 10월 24일, 30억원이 집행되었다. 동 감리업체는 2022년 4월 공사발주 방식 변경에 따라 추가된 업무인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2022년 10월 현재 수행 중에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예산 대비 실적현황(~2022.10)]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예산(안)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 설계비	6,287	0	0	1,044
· 감리비	922	3,000	- <sup>1)</sup>	255
· 시설부대비	56	0	0	16
· 예비비	727	0	0	474
· 공사비	0	0	0	3,426
<b>합계</b>	<b>7,992</b>	<b>3,000</b>	<b>37.5</b>	<b>5,215</b>

주 1) 2022년 예산 편성 시 계획되지 않은 예산의 집행임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는 통상적인 총사업비 조정절차의 경우 6개월가량 소요되는데, 동 사업의 조정절차는 2022년 4월 경 시작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의 조정심의만 남은 상황임에 따라 2022년 9월 기준, 2개월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의 타 사업에서도 2020~2021년 예산이 이월된 사례가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고, 이와 관련한 내부협의,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심의절차로 인해 실시설계 전까지 6개월가량 추가 소요(2020년 8월~2021년 2월)된 바 있다.<sup>4)</sup>

한편 서울대학교에 따르면 동 사업의 설계 및 공사는 ‘설계·시공일괄(턴키) 발

4)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교육위원회)」, 2022.10., pp.73~79 참조

주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따라 기본설계 심의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동시에 우선시공분 착공이 가능<sup>5)</sup>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병원은 2023년 1~6월 공사 입찰공고, 기본설계 진행 및 설계적격자 선정 단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 10월부터 우선시공분 착공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향후 일정(2022.10)]

구분	예상일정
총사업비 조정절차(교육부/기획재정부)	2022.4~2022.10(예상)
공사업체 입찰공고 및 설계적격자 선정	2023.1~6(기본설계 포함)
기본설계에 대한 사용자 확인, 우선시공분 인허가	2023.7~9
우선시공분 착공	2023.10~
실시설계	2023.10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은 우선시공분의 구체적인 공사금액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파악할 수 없으나, 타 의료기관 건립 사례 등에서 토목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참고하여 전체 공사비의 약 8.8% 수준으로 관리하며, 우선시공분 공사비를 301억원으로 추정<sup>6)</sup> 시, 2023년 내 집행될 우선시공분 선금 및 기성금으로 143억 원을 예상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선시공분 공사비 외에 2023년에 지급이 예상되는 비용으로 실시설계적격자 탈락자에 대한 기본설계 보상비 65억원, 책임감리비

5) 서울대학교병원은 동 발주방식에서는 기본설계 단계 시 발주처가 미리 지정한 우선시공분 공사범위에 대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 미리 제출한다고 설명하였다.

6)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관련 우선시공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공사비	우선시공분 공사비
건축비	공사비(음압병동 구축비 포함)	292,853	28,838 (전체 공사비의 8.8%)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22,111	
	녹색건축물인증 추가 공사비	11,392	
부대비	설계비	설계비	1,338 (전체 설계비의 8.8%)
		신재생에너지 등 추가 설계 대가	
		측량 및 조사비	
		합계	

자료: 교육부

16.6억원, 예비비((건축비+부대비)의 10%) 22억원 등이 있어 2023년 251억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동 사업의 정부지원 출연비율은 45.5%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2023년 집행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공사비	우선시공분 선금(30%)	9,053
	우선시공분 기성금(17.5%)	5,281
부대비	설계 경제성(VE) 검토비	223
	실시설계적격자 탈락자에 대한 기본설계 보상비	6,527
	책임감리비(건설사업관리)	1,669
	조달청 기본설계 심의비용 및 우선시공분 공사계약 수수료	70
예비비(건축비+부대비)의 10%		2,282
합계		25,102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은 현재 ① 부처 간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② 2022년 내 기본계획 확정·고시 완료, ③ 2023년 1월부터 6개월 내 설계·공사업체 입찰공고, 기본설계 진행 및 심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단계를 마무리하여야 우선시공분 공사 착수 및 17.5%의 기성률을 진행하여 143억원의 공사비를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동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연례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2~2023년 사업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 사업’<sup>1)</sup>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sup>2)</sup>에 근거하여 해산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운영비, 채무변제)을 용자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9,200만원 감액된 106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다.

사학진흥기금은 2021년 8월 「한국사학진흥재단법」<sup>3)</sup> 및 「사립학교법」<sup>4)</sup> 개정 에 따라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계정 내 재산 관리 주체로 두고 있다. 동 계정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용자를 수행 하여 효율적 청산절차 진행 및 폐교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 되었다.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코드: 사학진흥기금 2861-305

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제19조(기금의 사용)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 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4)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 정에 귀속되고, (이하 생략)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이하 생략)

[2023년도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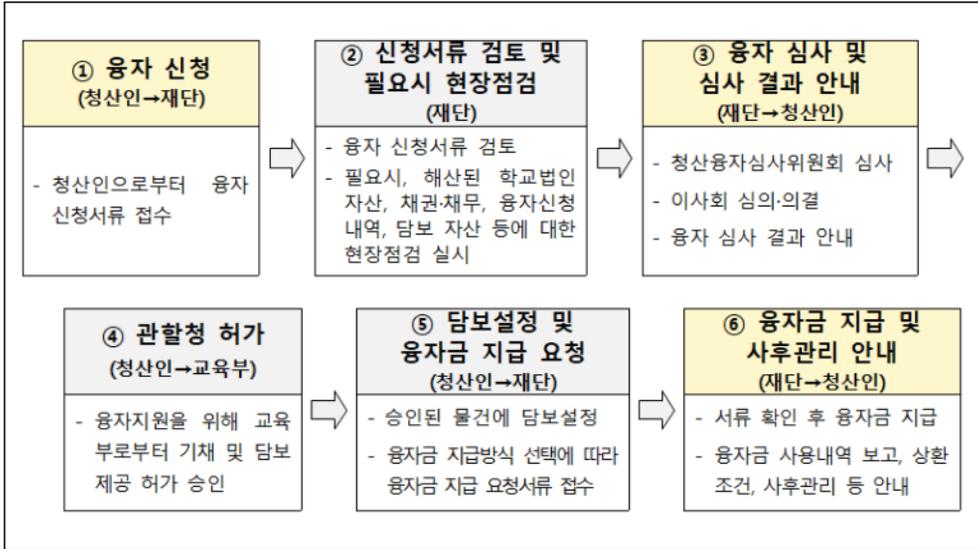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	0	11,442	11,442	10,650	△792	△6.9
청산절차 운영비	0	1,200	1,200	450	△750	△62.5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0	10,242	10,242	10,200	△42	△0.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미  
자료: 교육부

폐교대학 청산지원을 위한 용자금 지원은 ① 용자신청(청산인→재단), ②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5), ③ 용자심사 및 심사결과 안내(재단→청산인), ④ 관할청 허가(청산인→교육부) ⑤ 담보설정 및 용자금 지급 요청(청산인→재단), ⑥ 용자금 사용 및 사후관리(재단→청산인) 절차로 이루어진다. 즉 ①② 청산인으로부터 접수 받은 용자신청서류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검토 후, ③ 법률·금융·회계·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용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④ 관할청의 기채 및 담보제공 허가를 득한 후 ⑤ 담보설정을 거쳐 ⑥ 용자를 지원하게 된다. 해산된 학교법인인 용자금 사용 이후 집행내역을 재단에 반기별로 제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용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채무변제 완료 여부 등을 조사한다. 동 용자금 관련한 원리금은 청산 종결 전까지 일시상환(거치기간 10년 이내)해야 하며 공자기금 예탁금리에 연계된 고정금리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5) 필요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해산된 학교법인 자산, 채권·채무, 용자신청 내역, 담보 자산 등에 대한 현장점검 절차를 거친다.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금 지원 및 회수 절차]



자료: 교육부

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의 2023년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수입 예산안은 폐교대학 청산지원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으로부터의 111억 2,400만원 예수금과 전년도 예산으로부터의 이월 예상금액 8억 5,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지출은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 예산안 사업비 106억 5천만원과 공자기금예수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액 4억 7,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 수입지출안(2023)]

(단위: 백만원)

수입	금액	지출	금액
정부내부수입 - 공자기금 예수금	11,124	사업비 -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	10,650
		정부내부지출 - 공자기금 이자상환	474
여유자금회수	851	여유자금운용	851
합계	11,975	합계	11,975

자료: 교육부

## 나. 분석의견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 관련하여 면밀한 용자수요 예측과 지원의 필요여부를 바탕으로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 사업은 ① 청산절차 운영비와 ②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의 세부 산출근거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해산된 학교법인 중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법인 3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에 대해 ① 청산절차 운영비 1억 5천만원과 ② '2022년 3개 폐교대학의 평균 채무액'인 34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구분	2023 예산안(계획안)			
청산절차 운영비	150백만원* × 3교** = 450백만원			
	* 청산 절차 운영비 산출기준			
	(단위: 백만원)			
		항목	단가	산출기준
		용도변경 수수료	20	청산인 개별확인
		감정평가 수수료	3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수수료
		관계자 소송비용	30	청산인 개별확인
		매각공고 광고비	30	청산인 개별확인
		채권·채무확인 수수료	20	청산인 개별확인
	청산지원 컨설팅	20	'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합계	150	-	
	** 지원대상교 산출기준: 해산된 학교법인 중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법인(신규 폐교 포함)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3,400백만원* × 3교** = 10,200백만원			
	* 2022년 3개 폐교대학 평균 채무액(10,242백만원/3개교)			
	** 해산된 학교법인 중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법인(신규 폐교 포함)			

자료: 교육부

6) 교육부는 동 사업비를 활용하여 향후 발생하는 신규 폐교 대학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3년 채무변제 사업의 산출근거가 되는 ‘2022년도 3개 폐교대학의 평균 채무액’의 적정성을 2022년 집행실적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2022년 예산에서는 ① 해산법인 중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청산절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각 학교 당 1억 5천만원 씩 1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② 8개 대학 중 청산인이 선임되어 재산 및 채무규모 확인이 가능하고, 교직원 임금체불이 있는 3개 대학(대구외국어대, 성화대, 서해대)을 대상으로 102억 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당초 2022년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사업 예산 편성 시, ‘최근 3개월 임금, 청산인 보수, 조세·공과금, 임금채권을 포함한 채무’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이 산정되었으며, 대구외국어대, 성화대, 서해대에 각각 8억 2,700만원, 12억 9,200만원, 81억 2,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 사업 예산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 편성근거	미집행 사유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	11,442		
청산절차 운영비	1,200	법인 청산 진행 중인 8개교*1.5억원	청산인 미선임 및 재산 매각을 통한 청산 업무 수행으로 용자수요 감소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sup>1)</sup>	10,242	① 대구외국어대 8.27억원 ② 성화대 12.92억원 ③ 서해대 81.23억원	① 용자 신청 예정 법인의 보유 재산 매각 으로 지원 불필요 ② 용자 신청 접수 이후, 재단의 청산용자 심사위원회 심사 및 이사회 심의의결 을 거쳐 심사 결과를 신청 법인에 통 지, 이후 용자금 지급을 위해 관할청의 기채 및 담보제공 허가와 담보(근저당 권) 설정 진행 중

주 1) 채무는 최근 3개월 임금, 청산인 보수, 조세·공과금, 임금채권을 포함  
자료: 교육부

한편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의 내역사업인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사업의 2022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3개 학교의 채무변제를 위해 2022년 편성된 예산은 102억원인데, 2022년 9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1개 학교(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한 16억 5,700만원 집행에 그치고 있다. 이에 성화대학과 서해대학에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성화대학(세림학원)의 경우, 청산용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이사회 심의·의결(22.9.30.)을 거쳐 용자지원 여부가 확정되었고, 연내 48억원 수준의 용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서해대학(군산기독교학원)의 경우 재산 매각으로 인해 예산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에 대해 2022년 예산 편성 당시 해산 법인의 자산 매각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예산에 포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은 ① 청산인 선임 이전 또는 소송 중인 경우는 변제가 필요한 채무가액 전액 확인이 어렵고 ② 보유재산 매각여부에 따라 용자신청이 결정되는 사업의 특성 상, 예산안과 집행액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임에 따라 2022년 예산과 실제 집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7) 재단 제220회 이사회(9.30.)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한 용자지원 여부가 확정되었고 2022년 12월까지 용자금 지급이 완료되면, 2022년 집행액은 총 6,603백만원, 예산 대비 집행률은 57.7% 수준으로 높아진다.

[2023년도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2년도 예산액 (A)	9월 말 집행액		집행 예정액		총 집행(예정)액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금액 (B+C)	비율 (B+C/A)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	11,442	1,775	15.5	4,828	42.2	6,603	57.7

자료: 교육부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사업 대상 폐교대학 지원현황(2022.9)]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A)	실집행액 (2022.9) (B)	차이 (B-A)	비고
대구외국어대학교 (경북교육재단)	827	1,657	830	-
성화대학(세림학원)	1,292	0	△1,292	청산용자심사위원회 심사 및 이사회 심의 확정(9.30.)
서해대학 (군산기독교학원)	8,123	0	△8,123	재산매각으로 지원 불필요
합계	10,242	1,657	△8,585	-

자료: 교육부

한편 2022년 1~2월에 수행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용자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결과’에 따르면 청산진행 중인 해산법인 5개 중 4개 법인으로부터 용자수요를 수렴하였으며, 동 조사를 통하여 총 3개 대학에서 78억 6,124만원의 용자지원 수요(청산절차 운영비 1.5억원 제외)를 확인하였다. 서해대학은 2021년 폐교된 대학으로, 2022년 예산 편성 시에는 재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지원액이 2022년 예산에 포함되었고, 2021년 하반기 중 보유재산 매각이 진행됨에 따라 2022년 용자수요 조사 시 용자 불필요에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청산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정확한 채무와 재산매각여부, 매각가액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참고로 동 조사에서 용자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개혁신학교의 경우 2022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득함에 따라 별도의 용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용자수요 조사 및 의견수렴결과(2022.1~2)]

(단위: 백만원)

구분	용자지원수요	채권채무현황	답변
대구외국어대학교 (경북교육재단)	2,561	2,536 (‘22.3.31 기준)	청산절차 운영비(25,000천원) 포함 용자지원 필요
성화대학 (세림학원)	4,893	4,869 (‘21.12.20 기준)	청산절차 운영비(24,764천원) 포함 용자지원 필요
서해대학 (군산기독학원)	0	480 (확정되지 않은 채권)	<b>재산 매각을 통한 채무변제 가능</b>
개혁신학교 (개혁신학원)	560	455 (‘22.1.28 기준)	청산절차 운영비(104,281천원) 포함 용자지원 필요
합계	8,014	8,340	-

자료: 교육부

이와 같이 2022년 집행내역을 통하여 2023년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폐교대학 평균 채무액 34억원’(3개교, 총 102억원)은 실제 지원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2년 예산 102억원 중 일부 예산의 미집행 가능성이 있고, 각 폐교대학마다 채무변제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폐교대학의 채무, 담보 등 예상가액과 청산인 선임 예정여부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2023년 예산안을 편성<sup>8)</sup>하였다.

또한 2023년 예산안 지원대상인 청산이 미완료된 3개 학교는 아시아대, 선교청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인데, 모두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담보가액이 될 자산 및 변제해야 할 채무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중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교육부의 해산명령에 불복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2023년 예산안 지원대상 학교 중 일부는 소송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학 역시 청산절차 진행여부가 불확실함에 따라 2023년 예산안 집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8)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인 해산법인의 채무 및 용자신청 여부를 확인하였고, 청산인 미선임 법인의 경우 기존의 법인(대학)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각 대학별 채무변제액과 보유재산 매각 진행 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정확한 예산안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2023년 예산안 상 지원대상 학교 현황]

해산대학	해산일	청산인 선임	자산 및 채무 확인	청산인 미선임 사유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13.12.17.	×	×	교육부와 소송 진행 중
선교청대 (대정학원)	'12.8.23.	×	×	관계자 연락되지 않음
아시아대 (아시아교육재단)	'08.2.29.	×	×	관계자 연락되지 않음

자료: 교육부

한편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폐교대학 발생과 청산지연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만약 청산 지연이 장기화될 시 폐교대학 재산 노후화 및 가치 하락, 체불임금 등의 채무 규모 증가, 주변 상권 붕괴로 지역경제 슬럼화 등 사회적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직원 체불임금 및 다양한 부채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본 사업만이 유일하고, 향후 폐교대학 발생 시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원이 불가하면 사회적 문제로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설명과 같이 동 사업은 폐교대학의 교직원 임금 체불 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3년 청산 절차를 진행할 폐교 대학의 용자수요를 좀 더 면밀한 방식으로 추정하고, 현재 지원대상 학교의 청산절차 진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전문인재양성 사업은 구체적인 성과평가 후 예산안 검토 필요 등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sup>1)</sup>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 32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R&D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 기관은 ICT R&D 사업관리, 성과관리 등 기금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서 ICT연구개발전담기관인건비<sup>2)</sup> 사업으로부터 인건비를, ICT연구개발전담기관 운영비<sup>3)</sup> 사업으로부터 경상경비를 보전받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ICT연구개발전담기관 인건비는 126억 3,300만원이, ICT연구개발전담기관 운영비는 71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ICT연구개발전담기관 인건비	11,890	12,315	12,315	12,633	318	2.58
ICT연구개발전담기관 운영비	6,770	6,873	6,873	7,176	303	4.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 「한국연구재단법」 제3조의2(부설기관)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2)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7176-104  
3)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7176-204

## 1-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전문인재양성 사업은 구체적인 성과평가 후 신규 컨소시엄 예산안 검토 필요

### 가. 현황

SW전문인재양성<sup>1)</sup> 사업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SW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주도하고 대학이 협력하는 교육과정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주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다<sup>2)</sup>. 동 사업은 2022년 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은 77억 800만원이고, 2023년 예산안은 169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9.9% 증액하여 편성되었다.

[2023년도 SW전문인재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SW전문인재양성	-	7,708	7,708	16,951	9,243	119.9
캠퍼스SW아카데미	-	3,070	3,070	7,675	4,605	150
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	-	4,638	4,638	9,276	4,638	1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은 ‘캠퍼스SW아카데미’와 ‘네트워크형 캠퍼스SW아카데미’의 2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고, 각 내역사업의 2022년도 예산은 30억 7,000만원, 46억 3,800만원이다. 2022년 9월 기준 협약이 체결된 참여 컨소시엄에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어 실적행률은 99%이고, 2023년도 예산안은 내역사업별로 각각 46억 500만원, 46억 3,800만원이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2232-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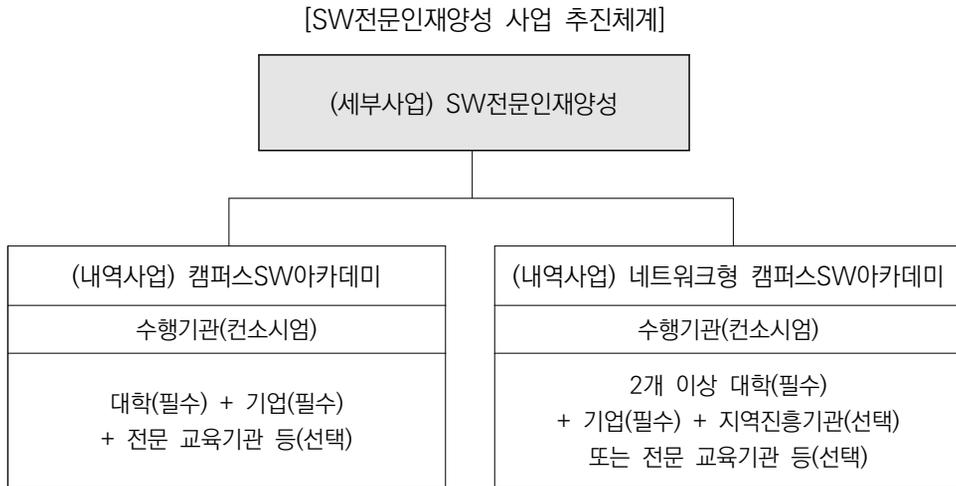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기술기획,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정책연구, 정보 조사·분석 및 서비스, 정보통신·방송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반조성, 표준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나. 분석의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SW전문인재양성 사업은 컨소시엄별 교육생 수료와 취업 연계 등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점검한 후 신규 컨소시엄의 선정을 위한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W전문인재양성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sup>3)</sup>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내역사업별로 사업을 실제 수행할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컨소시엄을 통하여 대학 재학생, 졸업예정자 등에 SW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내역사업에 따라 살펴보면, 캠퍼스SW아카데미 사업은 기업이 대학 내에서 수요에 맞는 SW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기업+전문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네트워크형 캠퍼스SW아카데미 사업은 지역 대학이 기업수요 SW이론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기업+지역진흥기관<sup>4)</sup>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의 전략수립·기획·정책연구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연구기반 조성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예를 들어 2022년 동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진흥기관은 포항테크노파크, (재)부산경제진흥원의 2개 기관이 있다.

2022년 컨소시엄 선정 결과 각 내역사업별로 4개, 총 8개의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캠퍼스SW아카데미 사업의 교육생 목표 인원은 200명(컨소시엄별 50명), 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 사업의 목표 인원은 6개월간 352명(컨소시엄별 88명)으로 2022년 예산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어 편성되었다(총 77억 800만원). 2023년 예산안의 경우, 내역사업별 산출단가는 동일하게 산정하였다. 다만 컨소시엄별 목표 인원이 2배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2022년의 경우 신규 컨소시엄 구성에 따라 하반기에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것을 2023년도에는 상·하반기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캠퍼스SW아카데미 사업에서 신규 컨소시엄 2개를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다.

따라서 2022년 대비 2023년도 예산안에서의 증액분은 총 92억 4,300만원으로, 이 중 기존 컨소시엄의 상·하반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증액분은 77억 1,000만원, 컨소시엄 확대(신규 컨소시엄 선정)를 위한 증액분은 15억 3,300만원이다.

[예산(안) 산출 내역]

내역사업	2022년	2023년	예산 단가 산출
캠퍼스SW아카데미	<신규> 3,070백만원 - 15.35백만원 × 50명 × 4개 컨소시엄	<계속> 6,140백만원 - 15.35백만원 × 4개 컨소시엄 × 100명 <신규> 1,535백만원 - 15.35백만원 × 2개 컨소시엄 × 50명	교육장 운영비, 강사 인건비, 교육생 지원비, 집중교육 운영비 등
네트워크형 캠퍼스SW아카데미	<신규> 4,638백만원 - 13.25백만원 × 88명 × 4개 컨소시엄	<계속> 9,276백만원 - 13.25백만원 × 4개 컨소시엄 × 175명	강의실 운영비, 교원 인건비, 강사 인건비, 교육생 지원비, 기업 교육장 운영비, 취업연계 추진비 등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2022년 컨소시엄 구성 결과 선정된 컨소시엄과 주관기관, 공동기관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2022년 SW전문인재양성 사업 컨소시엄 현황]

내역사업명	과제명(컨소시엄명)	주관기관	공동기관
캠퍼스 SW아카데미	티맥스 아카데미: TABA (Tmax AI Bigdata Academy)	(주)티맥스티베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소합
	조선대-NHN 아카데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NHN아카데미
			(사)스마트인재개발원
	가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SW아카데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주)디케이테크인
(주)엑스투			
지능정보 SW아카데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티쓰리큐(주)	
		(주)한국경제신문	
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	(경북) 경북 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	포항 테크노파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티에듀(주)
			(주)범일정보
			(주)유라클
			(주)휴비즈ICT
	(대전·충남) 아이티센-티맥스 충남대 SW 아카데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아이티센
			(주)티맥스티베로
			(주)소프트아이텍
	(경기) K-Software Empowerment BootCamp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SK주식회사
			(주)MDS테크
			한컴아카데미
	(부산)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신세계아이앤씨			
(주)비앤케이시스템			

내역사업명	과제명(컨소시엄명)	주관기관	공동기관
			(주)핀인사이트
			(주)소나무정보기술
			(주)에스티리서치
			(주)에스씨티
			(주)투그램시스템즈
			(주)인타운
			(재)부산경제진흥원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그런데 동 사업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 컨소시엄을 선정하기 위한 증액분 15억 3,300만원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 분석을 거쳐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동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업의 참여 하에 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의 성과 역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육성되어 취업에 성공하였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에서는 컨소시엄 선정 심사 시 채용수요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8개 컨소시엄에서 총 565명의 채용연계 계획이 제출되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컨소시엄에 따라 채용연계 인원의 편차가 크고, 선발인원 대비 채용연계인원의 비율도 서로 달라 현재로서는 동 사업에 따른 취업 성과의 예상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sup>5)</sup>

예를 들어 조선대-NHN 아카데미 컨소시엄의 경우 58명의 선발 인원 대비 채용연계(예상) 인원은 139명이나 되어 이론상으로는 교육과정 수료생 전원이 49개 기업에 나누어 채용이 될 것 같지만, 실제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몇 명이 취업시장에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는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지능정보 SW아카데미의 경우 교육생 59명 대비 채용연계 (예상)인원은

5)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성과 적극성, 의지 등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기 위한 취지에서, 인원 수를 단순 정량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수료자에 대한 채용연계계획을 제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컨소시엄은 협력기업의 수료자 채용 수요조사 결과를 합산한 수치를 제시하였으나, 이것은 의무채용 수치가 아닌 수요조사에 따른 결과이므로 양성 인원수보다 큰 인원이수가 제출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명, K-Software Empowerment BootCamp 컨소시엄은 108명의 교육생 중 26명만 예상 인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교육생 선발 인원 대비 채용연계 인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컨소시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도 SW전문인재양성사업 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개)

내역사업	컨소시엄명	참여 대학	모집 기간	선발 인원	채용연계 기업 수	채용연계 인원
캠퍼스 SW아카데미	티맥스 아카데미: TABA	단국대	06.17.~09.08.	50	13	63
	조선대-NHN 아카데미	조선대	06.13.~08.07.	58	49	139
	가천 카카오펀터프라이즈 SW아카데미	가천대	06.08.~08.10.	58	12	30
	지능정보 SW아카데미	고려대	07.19.~08.21.	59	2	20
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	경북 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	대구가톨릭대	05.31.~07.19.	93	48	49
		안동대				
		경일대				
		금오공과대				
	아이티센-티맥스 충남대SW 아카데미	충남대	06.01.~08.31.	102	36	177
		선문대				
		목원대				
	K-Software Empowerment BootCamp	성균관대	06.15.~09.16.	108	6	26
		인하대				
		경기대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	부경대	06.27.~09.20.	94	45	81
		동아대				
동의대						
합계				622	213	585

주1: 캠퍼스SW아카데미 사업의 목표인원은 컨소시엄별로 50명이고, 네트워크형 캠퍼스SW아카데미 사업의 목표인원은 컨소시엄별로 88명임

주2: 채용연계 기업 수란 채용연계 계획을 제출한 기업의 수를 의미하는 것임

주3: 현황은 2022년 9월 19일 기준임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이와 같이 213개의 기업이 채용연계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인 것은 아니다. 각 기업은 동 사업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인력을 얼마든지 신입사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제출되어 있는 채용연계 계획은 결국

내년도 각 기업의 일반적인 SW분야 채용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 사업의 컨소시엄 선정 시 채용연계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2점의 가점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채용연계 인원이 실제 수요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②다음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에 따르면 참여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과 교육과정의 수요 반영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사업에서는 참여 기업의 수와 기업으로부터의 교육과정 참여 재직자 수도 한정되어 있어 종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8개 컨소시엄에서 채용연계 계획을 제출한 기업의 수는 213개에 달하지만, 이 중 대다수 기업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참여기업)이 아니고 단순히 채용수요를 제출한 기업인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컨소시엄에서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은 아래 교육과정 운영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기업에 국한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인력은 컨소시엄별로 10~14명 수준이다. 재직자 참여를 통해 직접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내역사업별로 약 20여 개 정도이다.<sup>6)</sup>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서로 다른 내역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기도 한다.

---

6)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경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이나 진흥기관, 전문교육기관이 행정적인 업무나 전문 강사 등은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 인력은 주로 멘토나 일부 강사 위주로 편성 되어 있다고 밝혔다. 즉, 팀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 되는 교육에서 10~14명의 재직자가 멘토 등으로 참여한 것은 적은 수준의 참여 인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2년도 SW전문인재양성사업 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내역 사업	컨소시엄명	채용연계기업 수	참여교원 수	참여재직자 수	기업 재직자 참여 세부 현황
캠퍼스 SW 아카데미	티맥스 아카데미: TABA	13	6	14	(주)티맥스티베로 8명, (주)KT NexR 3명, (주)신한AI 1명, o9solutions 1명, 딥바이오 1명 등
	조선대-NHN 아카데미	49	10	10	NHN 아카데미 5명, NHN Cloud 1명, NHN Dooray 3명, NHN(주) 1명 등
	가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SW아카데미	12	14	11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4명, (주)디케이테크 인 4명, (주)마인즈랩 1명, (주)더존비즈온 1명, (주)엠로 1명 등
	지능정보 SW아카데미	2	3	12	티쓰리큐(주) 9명, 데이원컴퍼니(주) 1명, (주)이듬 1명, (주)아이엘아이티 1명 등
네트워크형 캠퍼스 SW 아카데미	경북 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	48	23	14	(주)유리클 3명, (주)범일정보 5명, (주)휴비즈 ICT 2명, (주)리소프트 2명, (주)나노아이티 2명 등
	아이티센-티맥스 충남대SW 아카데미	36	20	15	(주)티맥스티베로 7명, (주)소프트아이텍 4명, (주)Endowus 1명, (주)두나무 1명, (주)우아한형제들 1명, (주)엔코드 1명 등
	K-Software Empowerment BootCamp	6	50	12	SK(주) 8명, (주)MDS테크 2명, (주)자앤 1명, (주)에듀테크 1명 등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	45	24	14	(주)신세계아이앤씨 5명, (주)BNK시스템 2명, (주)핀인사이트 1명, (주)소나무정보기술 3명, (주)에스티리서치 1명, (주)에스씨티 2명 등
합계		213	150	102	

주. 채용연계기업 수는 채용연계계획을 제출한 기업의 수를 의미하고, 내역사업에 따라 일부 중복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그런데 동 사업은 위와 같이 채용연계 계획의 이행 가능성, 교육생 수료율과 기업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성과 분석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3년도 예산 안에 2개의 신규 컨소시엄을 추가하는 증액분을 편성하였다.

내역사업 중에서도 특정 내역사업에서 컨소시엄을 확장하려고 하거나 교육생의 인력을 크게 늘리는 것은 동 사업의 철저한 성과 분석과 수료생에 대한 추적 관리, 취업 연계, 내역 사업 간의 실적 비교 등이 선행된 이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동 사업에서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경우 2년간 사업을 수행하고 단계평가를 거쳐 추후 2년, 최대 총 4년(2+2)을 지원받게 되는데, 2022년 최초로 선정된 8개 컨소시엄의 첫 단계평가가 시작되기 전인 사업 1차연도에 신규 컨소시엄 선정을 위한 증액 예산(15억 3,3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기에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1차연도 또는 2차연도 사업수행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완료한 이후, 신규 컨소시엄 확대를 위한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2.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기업멤버십SW캠프 사업방식 개선 필요

### 가. 현 황

기업멤버십SW캠프<sup>1)</sup> 사업은 기업 수요가 높은 중·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및 채용 연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sup>2)</sup>이 동 사업을 시행하는 전문 기관이다.

동 사업의 2022년 예산은 124억원이고, 2023년도 예산안에는 동일하게 124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기업멤버십SW캠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업멤버십SW캠프	-	12,400	12,400	12,400	-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분석의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행 시, 기업멤버십SW캠프 사업의 수혜 대상에 대한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업멤버십SW캠프 사업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SW 청년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으로, SW 관련 단체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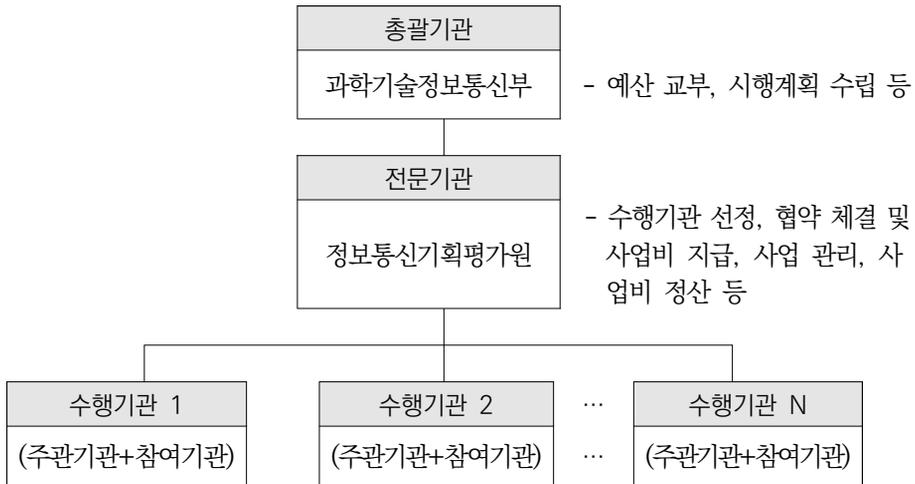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2232-30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기술기획,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정책연구, 정보 조사·분석 및 서비스, 정보통신·방송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반조성, 표준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컨소시엄(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컨소시엄에서 사업비를 지급받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기업과 협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업멤버십SW캠프 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의 수혜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로, 교육 목표 인원은 600명, 1인당 교육비 단가는 약 2,060만원으로 124억원의 예산을 산출하였다. 2023년도 산출내역은 동일하다.

[기업멤버십SW캠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요구) 기업 수요가 높은 중·고급 청년인재 양성 및 채용 연계를 통한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 등을 위한 '23년 계속사업비 12,400백만원 요구
- (산출) 교육비: 600명 × 인당 교육비 20.6백만원 = 12,400백만원
-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600명 × 1인당 교육비 20.6백만원(2022년) → 600명 × 인당 교육비 20.6백만원(2023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현재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4개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멤버십기업은 총 162개이다.

[기업멤버십SW캠프 사업 컨소시엄 구성 현황]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멤버십기업
1	IT여성기업인협회	스마트인재개발원	한국비전기술, 굿모니터링, 디딤365, 위치스, 레드윈테크놀로지 등 56개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현대IT&E, 더존비즈온, KCC정보통신, 날리지큐브,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25개
3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한국인공지능협회,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 유비씨	메가존클라우드, 노브레이크, 톨론, 티맥스 인공지능개발센터 등 53개
4	디엠씨코넷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웍스, 컴트루테크놀로지, 멀틱스, 유클리어소프트, 엑소텍 등 28개

주. 2022년 9월 기준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4개의 컨소시엄에서 28개의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교육과정이 개설된 지역이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기업멤버십SW캠프 사업 교육과정 현황]

구분	주관기관	교육과정	교육 일정(안)	교육지역
1	IT여성기업인협회 (6)	데이터분석 처리 고급 SW 클라우드 개발자 양성과정	'22.07.18~'23.02.28	서울
		클라우드 기반 MSA SW 고급 개발자 양성과정	'22.07.28~'23.02.28	서울
		Full Stack SW융합 실무부트캠프	'22.08.01~'23.03.13	광주(전남)
		고객경험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비즈니스 분석가 과정	'22.08.08~'23.03.20	서울
		데이터디자인 엔지니어 양성 과정	'22.08.08~'23.03.20	광주(전남)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개발자 과정	'22.08.01~'23.03.13	광주(전남)
2		MSA기반 FullStack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1)	'22.07.07~'23.02.10	서울

구분	주관기관	교육과정	교육 일정(안)	교육지역
	한국 소프트 웨어 산업협회 (11)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공공프로젝트 개발 전문가 양성과정	'22.07.20~'23.02.23	서울
		클라우드 기반 ERP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1)	'22.07.25~'23.02.28	서울
		C++기반 영상 처리 개발전문가 양성 과정	'22.07.27~'23.02.28	서울
		클라우드 기반 ERP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2)	'22.08.18~'23.03.02	서울
		Android,iOS 모바일 앱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1)	'22.08.19~'23.03.27	서울
		디지털트윈 전문가 양성과정	'22.08.19~'23.03.27	서울
		클라우드 기반 ERP 개발 전문가 양성과 정(3)	'22.09.19~'23.04.21	서울
		MSA기반 Full Stack 개발 전문가 양 성 과정(2)	'22.09.20~'23.04.24	서울
		Android,iOS 모바일 앱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2)	'22.09.21~'22.04.25	서울
3	한국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조합 (6)	DevOps & SRE 엔지니어 부트캠프	'22.07.25.~'23.02.27	서울
		MLOps 플랫폼 전문인력 부트캠프	'22.09.13.~'23.04.24	서울
		인공지능 실무형 dx 개발자 부트캠프	'22.09.01.~'23.04.17	광주(전남)
		인공지능 활용 멤버십 기업 데이터 기반 개발자 부트캠프	'22.08.29.~'23.04.14	부산
		멤버십기업 도메인 특화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자 부트캠프	'22.09.19~'23.04.27	서울
		디지털 트윈 IT 개발자 부트캠프	'22.07.18~'23.02.27	서울
4	디엠씨 코넷 (5)	빅데이터 예측분석과 모델링을 활용한 서비스개발자 양성과정	'22.07.25~'23.04.07	서울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XR콘텐츠 프로그 래밍 과정	'22.08.01~'23.04.14	서울
		지능형 로봇 서비스 개발을 위한 SW 개 발자 양성과정	'22.07.25~'23.03.10	대전
		AI 기반 응용SW 개발자 양성과정	'22.07.25~'23.03.10	대전
		빅데이터 분석 기반 비즈니스 개발자 양 성	'22.08.01~'23.04.14	세종

주. 2022년 9월 기준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 사업에서 개설된 교육과정의 경우 일부 온라인·비대면 수업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멤버십기업은 교육생 멘토링, 교육 수료생의 채용 등 교육 운영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교육과정은 교육생 간 동료 학습이나 대면 실무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학습은 교육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동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우선 2년간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원을 받고, 향후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최대 4년간 사업을 수행(2+1+1)할 수 있다. 현재 선정된 컨소시엄이 내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커리큘럼을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현재 28개 교육과정 중 20개 과정의 개설 지역이 서울이고, 그 외에는 광주 4개, 부산 1개, 대전 2개, 세종 1개인 것은 지역 청년 인재의 SW 교육에서 사업 수혜 대상 집단의 불균형한 분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각 컨소시엄에서 서울 외 지역의 교육장 개설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도권 외 여러 지역에서도 미취업 청년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육장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1-3.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사업의 운영 보완 필요

#### 가. 현 황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sup>1)</sup> 사업은 국군 병사 및 전역예정자에게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AI·SW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자기개발과 전역 이후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sup>2)</sup>이 동 사업을 시행하는 전담기관이다.

동 사업의 2022년 예산은 40억원이고, 202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원 감액한 36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	4,000	4,000	3,600	△400	△1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분석의견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사업은 교육과정 또는 업체 간 수수료율의 편차가 존재하고, 신규로 추진된 사업이므로 성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사업은 국군 장병과 전역예정자에게 맞춤형 SW·AI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2년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 5년(2022년~2026년)에 걸쳐 5만명의 교육생을 육성하려는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2232-30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기술기획,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정책연구, 정보 조사·분석 및 서비스, 정보통신·방송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반조성, 표준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목표를 갖고 있다.

동 사업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병사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SW, AI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이하 “맞춤형 온라인 교육”이라 한다)과 ②장병들이 데이터분석, 정보처리기사 등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①에 대하여 3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②에 대해서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2년 예산까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부대 순회 특강 등을 위하여 14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해당 부분은 국방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2023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22년 예산		'23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0 백만원	(병사 및 전역예정자 교육) 2,100백만원 -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 10만원 × 10명 × 50시간 × 12개 모듈 = 600백만원 -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2,000명 × 75만원 = 1,500백만원	3,600 백만원	(병사 및 전역예정자 교육) 3,100백만원 -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 10만원 × 10명 × 25시간 × 8개 모듈 = 200백만원 -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3,867명 × 75만원 = 2,900백만원
	(동기부여 및 자격증 취득지원) 500백만원		(동기부여 및 자격증 취득지원) 500백만원
	(전 장병 교육) 1,400백만원 - 국방부 승진자(간부급) 교육 : 100회 × 3일 × 0.8백만원 = 240백만원 - 부대 순회 특강 : 1,000회 × 0.8백만원 = 800백만원 - 온라인 소양교육 콘텐츠 개발 : 1식 × 360백만원 = 360백만원		2023년부터 국방부 이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맞춤형 온라인 교육 사업의 경우, 교육과정을 듣고자 하는 군 장병이 나라사랑 포털(<https://www.narasarang.or.kr/>)로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레벨테스트를 거쳐 입문·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누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병사들은 일과 후 가용시간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수강하게 되고, 수업 이수 후에는 이수 테스트를 거쳐 수료 확인을 받게 된다. 수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율적으로 수강하게 되므로 개인마다 교육기간이 다르게 되지만, 약 48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상 2개월에서 최대 4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는 분량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맞춤형 온라인 교육 사업의 수행 기업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엘리스'를 선정하고,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347명, 엘리스는 1,839명을 모집하였으나, 해당 신청 인원 중 레벨 테스트(코딩 역량평가)에 1,594명이 미응시하여 실제 선발 인원은 2,592명이다.

레벨 테스트에 응시한 2,592명은 교육기간(22.6.13~22.12.31) 동안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9월 말 기준 수료 인원은 982명으로, 수료율은 37.9%이다.

사업수행 기업에 따라 현황을 비교해 보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경우 총 1,319명의 장병 중 348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율은 29.3% 수준이다.<sup>3)</sup> 또한, 수행주체 뿐 아니라 교육 난이도에 따라 수강생이 지나치게 적거나 수료율이 낮은 교육과정도 존재하고 있다.

---

3)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초 기준 사업 전체의 수료 인원은 1,238명(수료율 47.8%)으로, 연말까지는 수료 목표인원인 2,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기업 간 수료율 편차에 대해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이 더 긴 측면도 있지만, 해당 사업수행자 역시 교육생 수료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온라인 교육 수료 세부 현황]

(단위: 명, %)

수행자	교육 난이도	교육과정명 (커리큘럼)	수강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엘리스	입문	[입문] 프로젝트 교육	368	166	45.1
		[입문] 프로그래밍 입문			
	초급	[초급] 프로젝트 교육	624	468	75
		[초급] 파이썬 기초			
		[초급] 파이썬 데이터 분석			
	중급	[중급] 프로젝트 교육	162	162	100
		[중급] 인공지능 수학 기초			
		[중급] 인공지능 활용			
	고급	[고급-자연어처리] 프로젝트 교육	119	94	79
		[고급-이미지처리] 프로젝트 교육			
		[고급] 딥러닝 입문			
		[고급] 딥러닝 심화			
		[고급] 알고리즘			
소계			1,273	890	72.5
카카오 엔터 프라이즈	입문	비전공자 과정	132	56	42.4
	초급	인공지능 기본과정	893	210	23.5
		웹개발 기본과정			
	중급	인공지능 중급과정	281	79	28.1
		웹개발 중급과정			
	고급	인공지능 고급과정	8	1	12.5
		웹개발 고급과정	5	2	40
소계			1,319	348	29.3
합계			2,592	1,238	47.8

주: 1) 자료는 2022년 10월 초 기준 조사에 따른 것임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 사업의 수료 현황을 계급별로 살펴보면, 장교, 부사관 등 병사 외 교육 수강 인원의 수는 227명으로, 105명이 교육과정을 이수(46.2%)하였다. 병사는 2,365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수료 인원은 1,123명이다(47.5%).

[맞춤형 온라인 교육 계급별 수료 현황]

(단위: 명, %)

구분	병사	부사관	위관급	소령 이상	기타	합계
수강인원	2,365	61	141	5	20	2,592
수료인원	1,123	24	79	3	9	1,238
수료율	47.5	39.3	56	60	45	47.8

주: 1) '기타'는 군무원 또는 사관생도 등이 포함됨  
 2) 자료는 2022년 10월 초 기준 조사에 따른 것임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동 사업의 경우 군부대의 보안 이슈로 인해 교육생의 부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 부대별 수강 인원 및 수료 실적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대에 따른 편차의 유무, 시설 및 가용시간의 격차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비교·분석할 만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sup>4)</sup>

동 사업의 경우 교육기간 내라면 별도의 일정 제한 없이 신청 이후 자유롭게 접속하고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에 따라 교육 집중도나 수료율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간의 수강신청 또는 수료율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어, 향후 교육과정을 수요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 추가로, 정보의 공개 유무와는 별개로 부대에 따른 내부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내역사업의 경우 체계적인 성과 평가 및 면밀한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국방부와 협업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년도부터는 소속부대, 학력, 보직 특기 등 다양한 분석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성과분석 및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수료율 독려를 위하여 수료생 이벤트, 문자 알림 등의 유인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1-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이관 필요

### 가. 현 황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sup>1)</sup> 사업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주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sup>2)</sup>이다. 동 사업의 2021년 결산액은 373억 800만원, 2022년 예산은 199억 2,900만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에 6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정밀의료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시티 사업은 2022년에, 정밀의료 사업은 2021년에 사업이 종료되어 2023년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내역사업의 예산만 반영되었다.

[2023년도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37,308	19,929	19,929	6,346	△13,583	△68.2
인공지능	26,677	12,924	12,924	6,346	△6,578	△50.9
스마트시티	9,282	7,005	7,005	-	-	-
정밀의료	1,349	-	-	-	-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158-41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기술기획,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정책연구, 정보 조사·분석 및 서비스, 정보통신·방송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반조성, 표준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나. 분석의견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인공지능사업단의 기획평가관리비는 별도조직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획평가관리비 통합의 취지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2022년부터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국가연구개발(R&D)에 소요되는 기획평가관리비(360-06목)를 전문기관<sup>3)</sup>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이하 “통합 기평비”라 한다)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열거된 전문기관은 아니나, 통합 기평비 제도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별도의 기획평가관리비를 세부사업으로 보전받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7602-301)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 74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	7,043	7,043	7,496	453	6.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인공지능 내역사업의 수행과 기획, 평가 또는 관리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단의 기획·평가·관리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한 기획평가관리비는 2022년에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에 미편성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으로 통합되었다가, 2023년에는 1억 5,000만원이 다시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에 별도로 편성되었다.

3)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 평가, 관리 등 업무의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23년도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비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37,308	19,929	19,929	6,346	△13,583	△68.2
연구개발활동비(360-05)	36,392	19,929	19,929	6,196	△13,733	△68.9
기획평가관리비(360-06)	916	-	-	150	순증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통합된 기획평가관리비의 경우, 기획비, 평가비, 관리비, 인건비, 간접비의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이중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성과관리비, 시스템관리비, 별도조직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중 관리비 항목의 유형]

관리유형	의미
일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사업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업진도관리', '과제정산', '법률자문', '기타 일반관리' 등으로 세부구분</li> <li>- 사업진도관리: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소모품 등), 마일스톤관리, 실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li> <li>- 과제정산: 회계위탁 등 과제정산에 소요되는 예산</li> <li>- 법률자문: 사업·과제의 수행 및 운영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예산</li> <li>- 기타: 일반관리 내 세부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내역 (예: 시설장비 도입 심의비)</li> </ul>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사업의 성과확산 및 성과관리를 위해 집행하는 예산이며, '성과확산 목적의 행사개최', '성과확산을 위한 특허분석', '기술료 징수', '중료사업 사후관리', '기타 성과관리' 등으로 세부구분</li> </ul>
시스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관리사업 및 사업군에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시스템구매', '시스템유지', '시스템관리보수비'로 세부유형 구분</li> <li>- 시스템구매: 기관의 자산이 되는 시스템·프로그램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li> <li>- 시스템유지관리: 프로그램, 장비의 수리·개선 및 임차에 대한 소요예산</li> <li>※ 평가회의장, 콜센터 운영 등은 고정된 시스템으로 '시스템관리' 유형에 해당</li> </ul>

관리유형	의미
별도조직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평가관리비(360-06비목) 중 사업단 등 R&amp;D 사업의 별도관리 목적 예산으로 전문기관과 별도조직의 사업관리를 위해 집행하는 예산을 구분</li> <li>- 별도조직 관리비: 사업단 등 별도의 R&amp;D사업 관리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집행하는 예산</li> <li>- 별도조직 기평비: R&amp;D사업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기평비 목적으로 별도조직이 집행하는 예산</li> </ul>

자료: 기획평가관리비 요구서 작성요령

실제로 통합 기획평가관리비가 편성된 전문기관을 살펴보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운영비를 관리비 중 별도조직 운영비로 편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별도조직 운영비를 2023년도 기획평가관리비 세부사업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경우 2022년 예산과 2023년도 예산안에 별도조직 운영비를 편성하지 아니하였다.<sup>4)</sup>

4)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동 사업은 2017년~2023년 수행된 사업으로 2023년 종료 도래 및 사업의 중요도(정부 국정과제 관련 사업), 사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기획평가관리비와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중 관리비의 전문기관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전문기관명	2022					2023				
	일반 관리	성과 관리	시스템 관리	별도 조직 운영비	소계	일반 관리	성과 관리	시스템 관리	별도 조직 운영비	소계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2,160	4,663	6,604	1,765	15,192	1,580	3,924	7,957	1,731	15,192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4,874	3,413	5,630	10,195	24,112	4,552	3,483	5,202	10,856	24,093
농림식품 기술기획 평가원	664	1,676	600	950	3,890	664	1,456	600	1,120	3,840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2,811	3,956	485	420	7,672	2,365	3,658	434	509	6,966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	-	-	-	-	697	299	180	170	280	1,346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1,499	2,897	1,767	-	6,163	1,600	2,946	1,757	-	6,313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따라서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에서 인공지능사업단이 사용하는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은, 별도조직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획평가관리비를 통합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에서의 기획평가관리비 1억 5,000만원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세부사업으로 이관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sup>1)</sup>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블록체인, 3D프린팅 등 SW분야의 전문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해 실무형 전문 AI·SW개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ICT이노베이션스퀘어<sup>2)</sup>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시행주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sup>3)</sup>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 수행, 평가 및 보고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21년 결산액은 342억 800만원, 2022년 예산은 387억 800만원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에 2023년도 예산안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38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34,208	38,708	38,708	38,708	-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6,108	6,858	6,858	6,858	-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25,600	29,350	29,350	29,350	-	-
3D프린팅혁신성장거점 조성	2,500	2,500	2,500	2,500	-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분석의견

**ICT콤플렉스는 일부 장비의 이용률이 낮거나 권역별 격차가 존재하므로, 구축**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32-310

2) 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ICT콤플렉스(개발자 지원공간)과 교육장(AI·SW복합교육공간)으로 구성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된 장비를 재조사하여 적정 장비를 구축하고 이용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인 ICT이노베이션스퀘어운영,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 3D프린팅혁신성장거점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운영 사업은 '서울' 권역에 구축된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이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 사업은 '서울 외 지방'에도 이노베이션스퀘어를 확산시킨다는 취지 하에 4개의 권역별로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이다<sup>4)</sup>. 3D프린팅 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은 서울 권역의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3D프린팅 교육을 실시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권역별 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총 5개이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권역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콤플렉스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수도권	충청권	동북권	동남권	호남권
소재지	서울 마포구	대전 유성구	경북 김천시	부산 해운대구	광주 동구
관할지역	서울	대전·충남·충북·세종	강원·경북·대구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북·전남·제주
시설면적 <sup>1)</sup>	1,988㎡ (602평)	958.64㎡ (290평)	829㎡ (251.2평)	1,995.76㎡ (604평)	2757.57㎡ (834평)
운영예산 <sup>2)</sup>	6,858	6,325	6,325	6,325	6,325
		지역인센티브 및 운영관리비 <sup>3)</sup> 4,050			
운영인력 <sup>4)</sup>	20	82	89	85	80

주: 1) 권역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연면적 기준

2) 2023년 정부제출 예산안 기준. 수도권은 내역사업(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그 외 권역은 내역사업(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에 해당됨

3)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內 지역인센티브(3,800백만원, 연차평가 후 차등지급) 및 운영관리비(250백만원)는 구분이 어려우므로 합쳐서 표기하였음

4) 2022년 기준 본 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참여인력 기준(참여율 10%미만 제외)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동 사업은 2019년 서울 이노베이션스퀘어 구축으로 시작되었으며(19년 3월 개소), 이후 2020년 말 4개 권역의 이노베이션스퀘어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 사업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역별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①회원(멤버십 이용자) 등이 시설(SW개발실, 회의실, 라운지)과 장비(PC, 모바일기기, VR, GPU 서버, 노트북, AI스피커 등)를 대여할 수 있고, ②전문가와와의 만남, 네트워킹 행사, 세미나, 공모전 등을 기획·제공하며, ③인공지능, SW, 블록체인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제공한다. 이와 같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387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708	<p><b>○ 사업출연금(350-02): 38,708백만원</b></p> <p>①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6,85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T복합교육: 1개소x2,058백만원=2,058백만원</li> <li>AI복합교육: 1개소x4,050백만원=4,050백만원</li> <li>온라인코딩교육: 50명x15백만원=750백만원</li> </ul> <p>②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29,3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T복합교육: 4개거점x1,500백만원=6,000백만원</li> <li>AI복합교육: 4개거점x3,500백만원=14,000백만원</li> <li>지역인센티브 및 운영관리비: 지역인센티브 3,800백만원+운영관리비250백만원=4,050백만원</li> <li>온라인코딩교육: 4개거점x75명x15백만=4,500백만원</li> <li>기업 프로젝트과정: 4개거점x5백만원x20명x2개소=800백만원</li> </ul> <p>③ 3D프린팅 혁신성장 거점조성 (2,5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소x2,500백만원=2,500백만원</li> </ul>	38708	<p><b>○ 사업출연금(350-02): 38,708백만원</b></p> <p>①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6,85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T복합교육: 1개소x2,058백만원=2,058백만원</li> <li>AI복합교육: 1개소x4,050백만원=4,050백만원</li> <li>온라인코딩교육: 50명x15백만원=750백만원</li> </ul> <p>②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29,3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T복합교육: 4개거점x1,500백만원=6,000백만원</li> <li>AI복합교육: 4개거점x3,500백만원=14,000백만원</li> <li>지역인센티브 및 운영관리비: 지역인센티브 3,800백만원+운영관리비250백만원=4,050백만원</li> <li>온라인코딩교육: 4개거점x75명x15백만=4,500백만원</li> <li>기업 프로젝트과정: 4개거점x5백만원x20명x2개소=800백만원</li> </ul> <p>③ 3D프린팅 혁신성장 거점조성 (2,5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소x2,500백만원=2,500백만원</li> </ul>

주: 'ICT복합교육' 내역은 이노베이션스퀘어 내 개발자 지원공간의 운영비용(임차료, 장비구입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함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런데 콤플렉스별 보유 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권역별 보유 기기에 편차가 있고, 기 보유한 장비의 이용 실적에서도 편차가 크다. 수도권과 동남권의 경우 200대가 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장비의 종류도 AI스피커, VR, 드론 등으로 다양하지만, 충청권의 경우 장비는 노트북과 태블릿PC 2종류에 불과하며, 각각의 이용실적도 장비 보유대수보다도 적은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동북권의 경우 139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각 장비의 이용률은 매우 낮아, 3D스캐너, 3D프린터, 드론, 디지털타이저 등의 장비는 2021~2022년 8월까지 1회도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태블릿PC나 VR HMD 등의 장비도 거의 사용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sup>5)</sup>

보유한 장비의 종류와 이용실적 뿐 아니라 신규 장비의 도입과 보유 장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 장비 보유목록을 살펴보면,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021년 도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장비를 2022년에도 거의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별 보유 대수 역시 거의 동일하다. 모바일기기나 PC, 스마트기기 등은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시장 환경의 변동성도 크므로, SW개발자 등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매년 수요 조사에 따라 적정 기기를 도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6)</sup>

[2021~2022년 권역별 ICT콤플렉스 장비 이용 현황]

(단위: 대, 건)

권역	장비 유형	2021년 보유기기	2021년 대여실적	2022년 보유기기	2022년 대여실적
수도권	AI스피커	12	20	12	7
	iMac	5	568	5	272
	VR	9	46	9	106
	고성능PC	15	1,264	15	699
	노트북	29	1,631	29	1,752
	모니터	44	5,280	44	3,256
	스마트워치	8	25	8	16
	스마트폰	81	3,403	81	4,118

5)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동북권에서는 시설 내에서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예약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은 이용 실적으로 산정할 수 없게 되어,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6) 실제 보유 기기별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 등일수록 대여실적이 더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으며, 2015년 이전에 출시된 구형 모델의 경우 이용 실적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권역	장비 유형	2021년 보유기기	2021년 대여실적	2022년 보유기기	2022년 대여실적
	일반PC	2	240	2	148
	태블릿PC	22	493	22	722
	<b>소계</b>	<b>227</b>	<b>12,970</b>	<b>227</b>	<b>11,096</b>
충청권	노트북	42	13	42	33
	태블릿PC	24	5	24	5
	<b>소계</b>	<b>66</b>	<b>18</b>	<b>66</b>	<b>38</b>
동북권	3D 스캐너	1	0	1	0
	3D 프린터	2	0	2	0
	VR HMD	5	0	5	1
	고성능PC	6	13	6	4
	노트북	34	2	34	13
	드론	5	0	5	0
	디지털타이저	5	0	5	0
	스마트폰	47	4	47	14
	태블릿PC	31	1	31	1
	회의 미러링	3	0	3	0
<b>소계</b>	<b>139</b>	<b>20</b>	<b>139</b>	<b>33</b>	
동남권	PC	24	12	24	12
	노트북	10	10	10	10
	모니터	24	12	24	12
	스마트폰	105	2,653	112	1,952
	웨어러블	12	89	12	54
	태블릿PC	33	490	37	274
	화상회의 시스템	3	30	3	20
	기타	-	-	2	7
<b>소계</b>	<b>211</b>	<b>3,296</b>	<b>224</b>	<b>2,341</b>	
호남권	5G기반 스마트기기	16	30	16	28
	노트북	24	92	24	76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3	15	3	8
	시스피커	15	11	15	7
	태블릿PC	15	60	15	30
	<b>소계</b>	<b>73</b>	<b>208</b>	<b>73</b>	<b>149</b>
<b>총합계</b>		<b>716</b>	<b>16,512</b>	<b>729</b>	<b>13,657</b>

주. 2022년 이용실적은 8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수도권이나 동남권 콤플렉스는 상대적으로 다른 권역에 비하여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권역에서 출연금예산으로 구축된 장비가 거의 사용되지 못하거나 혹은 이용자의 수요에 적절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에서의 권역별 장비 구입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동남권역만 2022년 새로운 장비 구입비를 지출하였고 수도권역과 동북권역은 장비 구입비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청권과 호남권은 기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7)

[2019~2022년 권역별 콤플렉스 장비 구입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권역	2019	2020	2021	2022	소계
수도권	223,772	45,100	8,835	(7,000)	277,707
충청권	-	9,125-	15,166	-	106,423
동북권	-	179,240-	87,274	(20,000)	266,514
동남권	-	211,058-	59,695	13,567	284,320
호남권	-	84,414-	-	-	84,414

- 주: 1) 표의 금액은 실제 장비를 실구매한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2)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3) ( )는 2022년 말 구입예정인 신규 장비 구입비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향후 권역별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운영하면서 각 콤플렉스의 장비 수요와 현황을 분석하여 과잉 또는 과소 보유 여부, 그리고 SW개발자 등 수요에 맞는 적정 장비 구축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콤플렉스나 이용률이 지나치게 낮은 장비를 조사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장비를 도입하거나 ICT콤플렉스에서 운영하는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 장비를 활용(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비 구축(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8)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충청권과 호남권은 2020년 ICT콤플렉스 장비 구축 이후 2021~2022년에는 교육장 기자재 중심으로 보강하였고, 연내 장비구축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2023년에는 신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콤플렉스의 경우 권역별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어 장비 이용실적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 장비의 도입 계획을 2022년 말까지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가. 현 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sup>1)</sup> 사업이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대형기초연구시설 구축, 기능지구 지원 및 거점지구 인프라 구축 등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결산액은 1,523억 9,700만원이고, 2022년 예산은 407억 6,900만원이며 2023년 예산안은 521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1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다.

[2023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152,397	40,769	40,769	52,132	11,363	27.9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53,986	14,855	14,855	33,461	18,606	25.3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	5,206	-	-	-	-	-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79,662	-	-	-	-	-
<b>중이온가속기 선행 R&amp;D</b>	-	<b>4,206</b>	<b>4,206</b>	<b>2,230</b>	<b>△1,976</b>	<b>△47.0</b>
기능지구 지원	11,144	9,883	9,883	9,889	6	0
거점지구 인프라 구축	1,000	10,725	10,725	5,452	△5,273	△49.1
과학벨트 기획·관리	1,400	1,100	1,100	1,100	0	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안에서 동 세부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기능지구 지원’, ‘거점지구 인프라 구축’, ‘과학벨트 기획·관리’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은 한국형 중이온가속기(Rare isotope Accelerator complex for ON-line experiments; 이하 “RAON”이라 한다)의 건설·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다. 중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일반회계 1640-300

이온가속기의 시설건설 및 장치구축과 관련된 내역사업은 2021년까지 예산에 편성되었고, 2022년부터는 편성되지 아니하였다.

## 나. 분석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향후 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위험 관리를 실시하고, 가속관 타입을 결정하는 등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 경과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AON 사업은 200MeV/u 빔에너지, 400kW 빔을 출력 가능한 대형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는 세계 최초로 ISOL과 IF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희귀동위원소(RI; Rare Isotope)<sup>2)</sup> 가속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sup>3)</sup>. ISOL로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한 뒤 이를 초전도선형가속기로 다시 가속하여 IF로 전달하면,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기존 방법보다 더 희귀한 동위원소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중이온가속기연구소<sup>4)</sup>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지 952,066㎡(약 29만평), 연면적 116,298㎡(약 3.5만평)에 2011년부터 가속기 및 관련 시설을 구축해 오고 있다. 총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는 1조 5,183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부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에 RAON의 시설 건설비 및 장치구축비가 2021년 예산까지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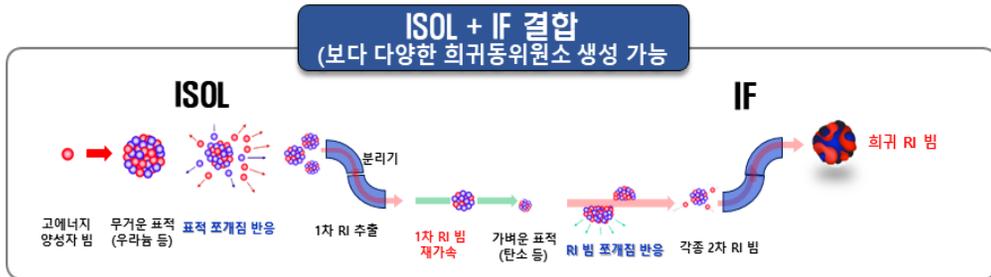
---

2) 원소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원소들 중 양성자의 수가 같아 원자번호가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달라 질량이 다른 쌍둥이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고, 동위원소 중 희귀하고 수명이 짧아 미발견된 동위원소를 희귀동위원소라고 하며 자연적으로 발견이 어려워 인공적으로 생성·발견하여야 한다. (중이온가속기연구소, <https://risp.ibs.re.kr/>, 2022.9.20.)

3) 2011년 2월에 완성된 초전도 중이온가속기의 개념설계보고서에서는 순수 한국과학자들의 아이디어로 세계 최초 온라인 동위원소분리 (Isotope Separation On-Line: ISOL)와 비행파쇄 분리 (In-flight Fragmentation: IF)방식을 결합한 독창적인 희귀동위원소 발생방식을 제안하였으며, 국제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실험장치의 독창성과 설계를 검증받았다고 한다. (김재홍·손형주·조용범, “초전도 중이온가속기 진공시스템의 최신 기술동향”, 한국진공학회, 진공이야기 2017-3, 2017, 4면.)

4) 종전에는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단’이었으나, 예산 사업의 종료로 사업단이 기초과학연구원 내 연구소로 개편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중이온가속기의 희귀동위원소 생성 방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최초 사업 계획 수립 당시의 목표와는 달리 RAON의 구축 과정에서 사업 기본계획이 4차에 걸쳐 변경되면서 사업이 순연되었다. 2021년 5월의 계획 변경에서는 기존 사업 목표를 변경하고 RAON의 최종적인 완성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일단 기술이 확보된 저에너지 구간을 중심으로 장치를 우선 구축하고, 빔인출과 시운전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RAON 구축 관련 기본계획 변경 경과]

구 분	기본계획 ('12.1)	1차 변경 ('13.9)	2차 변경 ('15.4)	3차 변경 ('19.5)	4차 변경 ('21.5)
주요 내용	사업 범위	장치구축 사업	장치구축 사업	장치구축사업 및 시설건설사업 <sup>1)</sup>	장치구축사업 및 시설건설사업 <sup>2)</sup>
	사업 일정	'11~'17년	'11~'19년	'11~'21년	1단계: '11~'21년 (일부장치 22년) 선행R&D: '22~'23년 2단계: 착수 시점으로부터 4년
	사업 예산	4,604 억원	4,604 억원 <sup>3)</sup>	1조 4,445억 원	1조 4,875억 원

- 주: 1) SCL1 제외 등 시설건설 및 장치구축 일부 조정  
 2) 장치구축 단계구분: 1단계 - 선행R&D - 2단계  
 3) 1차변경 시점까지의 4,604억원에는 건설비와 부지매입비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2차 변경 시점의 1조 4,445억원에는 장치구축비 4,602억원, 시설건설 6,243억원, 부지매입 3,60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3차 변경 시점의 1조 4,443억원에는 시설 건설 E/S 등 장치구축 5,028억원, 시설건설 6,276억원, 부지매입 3,571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4차 변경 시점의 1조 5,183억원에는 장치구축비 5,228억원, 시설건설비 6,384억원, 부지매입비 3,57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단계 사업비는 현재 미정 상태임

자료: 기초과학연구원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따라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에 2022년부터 신규로 편성된 ‘중이온 가속기 선행R&D’ 사업은 중이온가속기 고에너지 가속장치(SCL2)<sup>5)</sup>의 본제품 구축 전에 선행R&D를 실시, 필수 요소기술을 개발·검증하고 핵심 공정설비(후처리·조립)를 확충하여 기술 구현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2 단계 사업에서의 고에너지 구간 구축이 수월해지고, RAON이 당초 구상했던 궁극적인 형태를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동 사업의 중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RAON 단계별 사업 현황]

구분	1단계	선행R&D	2단계
기간	'11 ~ '22년	'22 ~ '25년	선행R&D 성과 및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
예산	1조 5,183억원 · 부지매입 3,571억원 · 시설건설 6,384억원 · 장치구축 5,228억원	126억원	미정
내용	- 저에너지장치 구축완료 - 고에너지구간 가속관 시제품 제작 및 성능 시험 - 고에너지구간 가속관 타입결정	- 결정된 타입의 가속관 시제품 성능구현 - 본제품 설계완료 - 성능검증 시설 확충 - 본제품 제작 공정 최적화	- 고에너지구간 본제품 제작/설치 - 전체 장치 설치 완료 및 시운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의 2022년도 예산 42억 600만원은 현재 (2022년 9월)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행률은 0%이다. 집행행이 부진한 사유는, 기초과학연구원 내부 연구소인 중이온가속기 연구소에 따르면 시험 시설 용량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1단계 사업에서의 저에너지구간 가속관(124개) 본제품 성능시험에 시험시설과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했던 것에 기인하고 있다.

결국 현재 고에너지 구간의 경우 이미 제작된 고에너지 가속관 시제품의 성능 시험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2년 9월 초 기준 10개의 시제품 중 2개만 1차 테스트(Vertical Test)를 통과한 상태이다. 중이온가속기 연구소는 본래 1단계

5) 가속기 후단부에서 중이온빔을 고에너지(200MeV/u)로 가속시키는 장치이다.

사업에서 마무리하였어야 할 고에너지 구간에서의 가속관 타입 결정을 아직 완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2022예산	2023예산안
중이온 가속기 선행 R&D	4,206백만원 - 초전도가속모듈 초도양산품 제작 및 성능검증 2,794백만원 - 가속관, 가속모듈 후처리·조립시설 확충 1,412백만원	2,230백만원 - 초전도가속모듈 초도양산품 제작 및 성능검증 914백만원 - 가속관, 가속모듈 후처리·조립시설 확충 1,316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국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동 부처 간 협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 지금까지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에너지 가속관 시제품 개발 현황]

구분	전단부 가속관 (모듈 23기, 가속관 69기)		후단부 가속관 (모듈 25기, 가속관 144기)	
	SSR1	HWR	C-SSR2	B-SSR2
제작 기관	비츠로테크	양성자 과학 연구단	IHEP	비츠로테크
개발 현황	가속관 4기 중 2기 VT 통과	공학 설계 완료	가속관 6기 VT 통과 ※ 모듈 조립 중(~9월)	가속관 6기 ※ VT 성능시험 미통과
형상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선행 R&D사업에서의 이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당초 계획액 42억 3,000만원보다 감액한 2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향후 가속관 타입 결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 말까지 본제품 가속관 타입을 결정할 계획이며, 이후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선행R&D에 착수(22년 12월)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순연되어 왔던 RAON 1단계 구축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사업기간 2년, 총 사업비 86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이듬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4년으로 확대되고 총 사업비도 126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이미 사업 추진계획에서의 변경을 겪은 바 있다. 향후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경우, 연쇄적으로 2단계 RAON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의 순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중이온가속기연구소와 협의하고,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의 가속관 타입 결정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sup>1)</sup> 사업은 뇌과학, 바이오, AI·로봇, 융복합 등 과학기술분야 종합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KIST"라 한다)에 기관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세부사업의 2021년 결산액은 1,895억 6,800만원, 2022년 예산은 2,019억 4,500만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2,22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89,568	201,945	201,945	222,796	20,851	10.3
초격차 기술 확보 민간- 출연연 개방형 R&D 사업	-	-	-	5,000	5,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초격차 기술 확보 민간-출연연 개방형 R&D 사업'(이하 "개방형 R&D 사업"이라 한다)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의 내역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과제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5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2241-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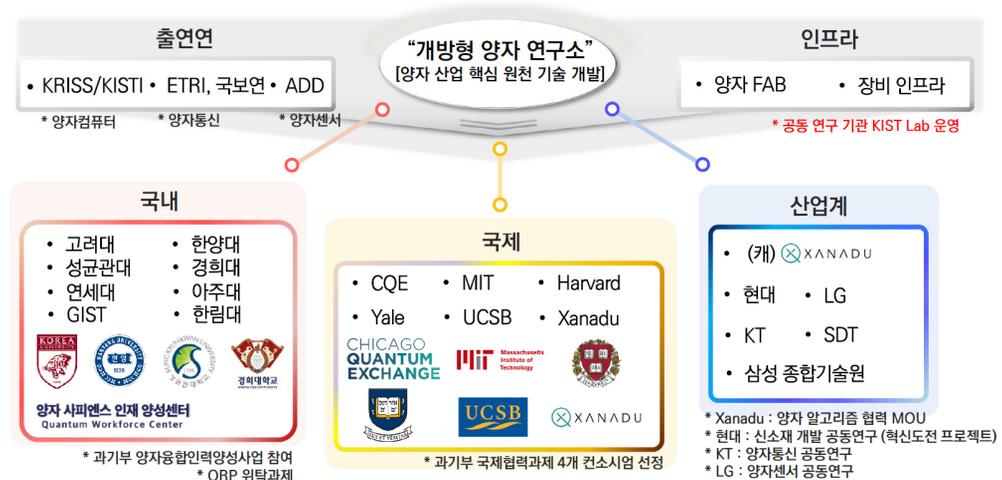
## 나. 분석의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신규 과제인 초격차 기술 확보 민간-출연연 개방형 R&D 사업은 민간 기업과의 매칭 및 연구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나, 현재까지 기업 매칭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R&D 사업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양자기술 도약을 위해 민간·대학·출연(연)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세계 최초·최고 원천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방형 양자기술 공동연구소를 설립 추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동 사업의 내용이다.

‘개방형 연구소’란 새로운 형태의 산-학-연 연구체계로서, 출연연구기관 최초로 내부 조직 개방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를 꾀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즉, 대학과 산업계의 외부 인력에게 KIST의 겸직연구원 자격을 주고, 실제로 KIST의 연구원과 같은 공간에서 직접 함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연구 질적 수준 제고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기존의 위탁연구 방식에서는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연구는 위탁을 받은 당사자가 따로 수행한 후 결과물만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개방형 연구소의 개념에서는 연구 자체가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수행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개방형 양자연구소 협력체계(안)]



자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러한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T는 2023년도 개방형 R&D 사업의 신규 과제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초전도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 과제 30억원, ‘차세대 양자통신 기술 개발’ 과제 2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소과제는 민간매칭 6억원과 4억원, 총 10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3년~2027년 총 5년이며, 연간 50억원의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50 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 민간-출연연 개방형 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요소기술	예산	예산 세부내역
① 초전도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 - 신약신소재 개발 응용을 위한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 신약차세대 배터리 소재, 수소 생산 및 저장 소재 개발에 적용 가능한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 및 산업계 적용	3,000 (600)	· 외부인건비: 480 - 전담연구원 6인 * 60 = 360 - 연구보조원 4인 * 30 = 120 · 연구시설장비비: 612 · 재료비: 545 · 연구활동비: 742 · 위탁연구비: 621 (민간매칭(인건비, 장비운용 등): 600)
② 차세대 양자통신 기술 개발 - Chip 기반 초소형/저비용 양자암호 시스템 등 실용적인 양자암호시스템 및 응용 서비스 개발 - 양자 얽힘을 이용한 양자암호 핵심 기술 등 차세대 양자암호 핵심기술 개발	2,000 (400)	· 외부인건비: 330 - 전담연구원 4인 * 60 = 240 - 연구보조원 3인 * 30 = 90 · 연구시설장비비: 408 · 재료비: 352 · 연구활동비: 516 · 위탁연구비: 394 (민간매칭(인건비, 장비운용 등): 400)
계	5,000 (1,000)	

주. ( ) 은 기업 매칭에 따른 민간 부담금을 의미함  
 자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와 같이 개방형 R&D 사업의 경우, 양자기술 산업화의 초석이 되기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면서 산업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제 기업

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민간 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 등 직원이 KIST에서 연구자들과 함께 양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장래 기업이 목표로 하는 사업을 위하여 우선추진과제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개방형 R&D 사업을 통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자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기업의 참여와 매칭 부담금 등의 협의내용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매칭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동 사업의 연구인력 또는 예산이 여러 기업의 수요에 따라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선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참여 기업 수를 확정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T는 개방형 R&D 사업에서의 기업 매칭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업과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sup>1)</sup> 사업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관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1년 결산액은 1,479억 2,500만원, 2022년 예산은 1,547억 6,900만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에 1,58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47,925	154,769	154,769	158,106	3,337	2.2
원자력시설폐기물 종합관리시설	4,088	-	-	1,000	-	순증
원자력시설폐기물 감용실험동 구축	3,432	9,265	9,265	7,000	△2,265	△24.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시설폐기물 종합관리시설 사업과 원자력시설폐기물 감용실험동 구축 사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의 내역으로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이다. 두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각각 10억원과 70억원이 편성되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241-401

## 나. 분석의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시설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등 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계획 재조정이 있었고, 규제기관의 인·허가 심사 등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향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시설폐기물 종합관리시설(“이하 종합관리시설”이라 한다)이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방사성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저장하는 시설이다. 종합관리시설의 구축을 위한 ‘원자력시설폐기물 종합관리시설’ 사업은 2018년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초기에는 사업기간 4년(2018년~2021년), 총 사업비는 167억원<sup>2)</sup>으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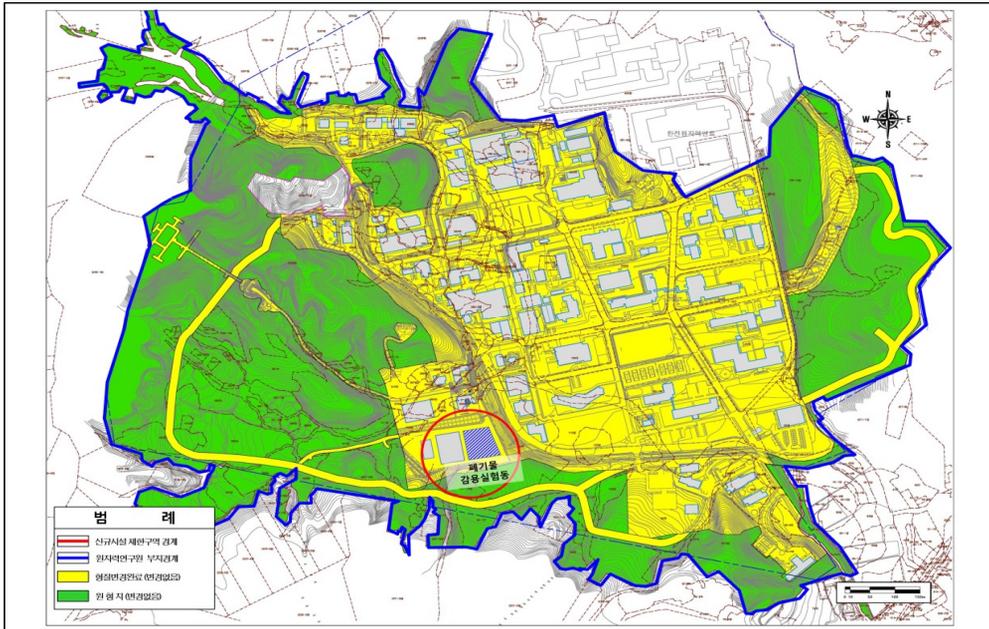
원자력시설폐기물 감용실험동(이하 “감용실험동”이라 한다)은 종합관리시설과 유사하게 고체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나, 종합관리시설과 비교하여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감용실험동의 구축을 위한 ‘원자력시설폐기물 감용실험동 구축’ 사업은 2020년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초기에는 사업기간 4년(2020년~2023년), 총 사업비는 407억 9,900만원으로 계획되었다.

종합관리시설과 감용실험동은 모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같은 위치에 건설될 예정이다.

---

2) 167억원은 출연금 사업비만을 포함한 것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체재원 30억원을 포함하는 경우 총 사업비는 197억원이 된다.

[원자력시설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및 감용실험동 건설 위치]



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런데 두 사업의 경우, 착공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등 건설·운영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허가를 위한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특히 2021년 「원자력안전법」 제68조의3 제2항4)이 개정되면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체계획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하는 과업이 발생하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게 된 측면이 있다.

종합관리시설의 경우 2020년 9월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안전심사를 받고 있다.

3) 「원자력안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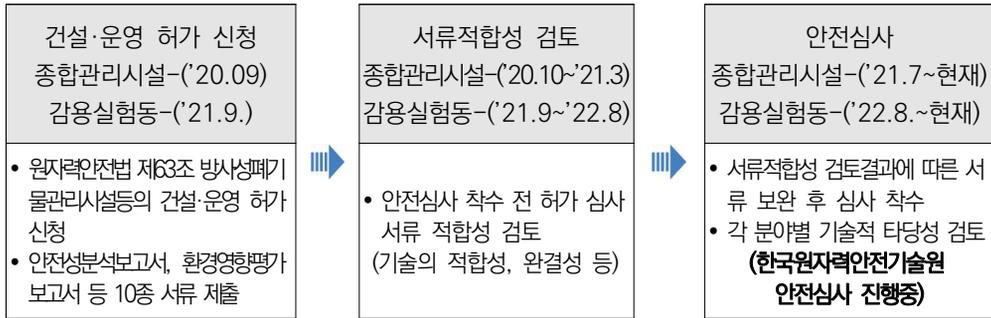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 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원자력안전법」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시설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및 감용실험동 건설·운영허가 심사]



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용실험동 역시 2021년 9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올해 8월 서류적합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서 편성된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종합관리시설 사업의 경우 3차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차년도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감용실험동 사업의 경우에도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고 연차별 예산 소요에서 감액하여 예산액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종합관리시설의 경우 사업기간이 총 4년 늘어났고, 감용실험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증가하였다.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요구액 감액 현황]

구분	원자력시설폐기물 종합관리시설	원자력시설폐기물 감용실험동 구축
2020	'21년 정부예산요구 당시 사업기간 연장(1년) 및 '21년 예산 일부 (△4,042백만원) 사전 감액	-
2021	'22년 정부예산요구 당시 사업기간 연장(2년) 및 '22년 예산 전액 (△9,539백만원) 사전 감액	'22년 정부예산요구 당시 '22년 예산 일부(△3,199백만원) 사전 감액
2022	'23년 정부예산요구 당시 사업기간 연장(1년) 및 '23년 예산 일부 (△5,639백만원) 사전 감액	'23년 정부예산요구 당시 사업기간 연장(3년) 및 '23년 예산 일부 (△18,103백만원) 사전 감액

주. 연도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관리시설 사업은 2022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인·허가 심사만 계속되면서 실집행액은 없고, 감용실험동 구축 사업도 2022년 예산 92억 6,500만원 중 실집행된 금액이 없는 실정이다.

[원자력시설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및 감용실험동 구축 사업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종합관리시설			감용실험동 구축			
연도	비목분류	예산	예산현액	실집행액	예산	예산현액	실집행액	
2018	합계	340	340	340	<b>2020년부터 사업 시작</b>			
	설계비	340	340	340				
	감리비	-	-	-				
	시설부대비	-	-	-				
	공사비	-	-	-				
	부담금등	-	-	-				
2019	합계	2,733	2,733	1,568				
	설계비	366	366	706				
	감리비	-	-	-				
	시설부대비	907	907	862				
	공사비	1,460	1,460	-				
	부담금등	-	-	-				
2020	합계	-	-	706		2,200	2,200	2,129
	설계비	-	-	185		735	735	624
	감리비	-	-	-		-	-	-
	시설부대비	-	-	173		365	365	510
	공사비	-	-	348		1,100	1,100	995
	부담금등	-	-	-		-	-	-
2021	합계	4,088	4,088	7		3,432	3,432	635
	설계비	185	185	-	581	581	335	
	감리비	132	132	-	165	165	-	
	시설부대비	129	129	1	666	666	300	
	공사비	3,142	3,142	-	2,020	2,020	-	
	부담금등	500	500	6	-	-	-	
2022. 8	합계	-	-	-	9,265	9,265	-	
	설계비	-	-	-	-	-	-	
	감리비	-	-	-	734	734	-	
	시설부대비	-	-	-	32	32	-	
	공사비	-	-	-	7,999	7,999	-	
	부담금등	-	-	-	500	500	-	

주. 부담금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부담하는 보전 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23년 1월에는 종합관리시설 및 감용실험동의 부지정지 공사를 발주하고,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종합관리시설의 경우 2025년까지, 감용실험동은 2026년까지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시설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및 감용실험동 구축 사업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종합관리시설 (’18~’25)	340	2,733	-	4,088	-	1,000	3,778	4,761	-	16,700
감용실험동 (’20~’26)	-	-	2,200	3,432	9,265	7,000	6,773	7,998	4,467	40,799

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그러나 두 시설 모두 아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심사 종료 후에도 원자력안전규제 총괄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위원 심사를 다시 거쳐 최종적인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사 절차에 대해서도 향후 예상되는 구체적인 심사 기간 소요를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력시설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및 감용실험동 구축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사업 지연이 있었고 현재도 인·허가 심사의 장기화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의 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동 사업의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5)</sup>

5) 이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정부 예산 요구 시 사업 지연일정을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및 차기 예산을 이미 감액한 바 있으며, 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인·허가 획득 시기가 약 3개월 지연되어도 부지정지 공사 일정을 단축하는 등으로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별성과급 사업비의 지급 대상 및 집행계획 명확화 필요 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sup>1)</sup> 사업은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및 기술선도·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1년 결산액은 1,109억 9,600만원, 2022년 예산은 1,244억 8,700만원이었으며 2023년 예산안은 1,18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10,996	124,487	124,487	118,190	△6,297	△5.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코드: 일반회계 2241-415

## 6-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별성과급 사업비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명확화 필요

### 가. 현황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기관운영비(577억 2,800만원), 주요사업비(517억 6,600만원)와 시설사업비(86억 9,600만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주요사업비로 편성된 2023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특별성과급' 사업비 42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 나. 분석의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특별성과급 사업은 지급대상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내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집행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 확보를 위하여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개발해온 결과<sup>1)</sup>, 2022년 6월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한 것을 포상하기 위한 성과급으로 설명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시험발사 연혁]

일자	주요 내용
'10. 3	사업 착수
'10.12	발사체 시스템요구조건 검토회의(SRR)
'11.12	국가우주위원회(4차) 심의/확정
'12. 6	발사체 시스템설계 검토회의(SDR)
'13.11	국가우주위원회(6차) 조기개발 확정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누리호 사업은 201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9,572억원이다.

일자	주요 내용
'14.12	발사체 예비설계 검토회의(PDR)
'15. 8	1단계 사업 완료 및 2단계 사업 착수
'16. 7	75톤급 액체엔진 145초(임무시간) 연소시험 달성
'16.10	7톤 액체엔진 580초(임무시간) 연소시험 달성
'16.12	국가우주위원회(11차) 향후계획(안) 심의/확정
'17.12	발사체 상세설계 검토회의(CDR)
'18. 2	국가우주위원회(14차) 일정검토 및 향후계획(안) 심의/확정
'18.11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19.12	한국형발사체 시스템 상세설계검토회의(CDR) 수행
'20.12	국가우주위원회(18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심의/확정
'21.10	누리호 1차 발사(위성모사체 궤도 미안착)
'22.06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성능검증위성 등 궤도 안착)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은 국내에서 위성을 자국의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고, 우주발사체 관련 인프라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특수한 의미의 성과급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예산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42억 4,170만원을 편성한 체계적인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다누리 연구 참여자 및 미 참여자 약 1,086명이 지급 대상이며, 누리호·다누리 성과 유공자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별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할 것이고, 그 외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지급(90만원)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산출내역에서는 아래와 같이 S등급 45명(1,000만원), A등급 135명(880만원), B등급 180명(800만원), C등급 45명(720만원), D등급 45명(600만원)으로 하고, 그 외 연구에 미참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들(636명)은 정액 지급(90만원)으로 하여 42억 4,170만원을 도출하고 있다.

[특별성과급 사업의 산출내역(안)]

구분	산출내역	비고
S등급	45명 × 1,000만원 = 4억 5,000만원	
A등급	135명 × 880만원 = 11억 8,800만원	
B등급	180명 × 800만원 = 14억 4,000만원	
C등급	45명 × 720만원 = 3억 2,400만원	
D등급	45명 × 600만원 = 2억 7,000만원	
그 외	633명 × 90만원 = 5억 6,970만원	22년 8월 기준 기관 총 직원 수 1,086명에서 위 S~D등급 인원을 차감한 숫자임(633명)
합계	42억 4,170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앞서 연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누리호 개발 사업은 12년에 걸친 장기간의 사업인 만큼 고려사항이 많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어느 수준까지 기여한 것인지, 참여율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리호 사업에서의 각 연구자별 개인 성과 평가 등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등 판단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내년도에 S등급 45명에게 지급될 것인지(혹은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몇 명에게 얼마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내부 의사결정과정 및 참여자 성과 평가 등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경우, 해당 사업의 단년도 시행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안 요구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누리호’ 발사 성공 외에도 검토할 다른 성과가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총 사업비 2,367억원을 투입한 달탐사 개발 사업을 통하여 2022년 8월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및 전이궤도 진입에 성공하였다. ‘다누리’의 성공 역시 우주탐사를 위한 국내 기술 발전과 2단계 달 착륙선 개발 사업 착수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누리’의 성공에 대해서도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다누리’에 대해서도 위 ‘누리호’에서와 유사한 지급 범위, 내용 등의 명확화 등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해당 예산안의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혁신본부의 심의 과정에서는 편성되지 아니하였다가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촉박한 심의 일정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의 종합적인 의견수렴, 노사협의, 체계적인 세부계획안 등이 선행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하여 특별성과급이 별도의 사업비로 편성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42억 4,170만원을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해당 금액이 과소한 것인지, 과대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관 구성원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수행하고, 특별성과급의 지급 대상자와 선정 기준, 규모와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6-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의 예산안 적정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시설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137억원이고 2023년도 예산안에는 42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10,996	124,487	124,487	118,190	△6,297	△5.1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1,800	13,700	13,700	4,200	△9,500	△69.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나. 분석의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은 2022년 예산 137억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적정 공사기간에 비하여 계획된 공사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형발사체란 탑재 중량 500kg 수준의 소형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발사체를 의미한다<sup>1)</sup>. 소형발사체 시장에 진출하려는 민간의 수요가 존재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민간 소형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주변에는 일본을 비롯한 대만, 중국, 필리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8월 2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경우, 1.5톤급 실용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로, 소형발사체 발사 시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발사방위각(170°)으로 발사가 가능한 나로우주센터에 발사장이 구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나로우주센터의 기존 발사장 인근 마치산 너머에 위치한 청석금<sup>2)</sup>이 부지로 선정되었다<sup>3)</sup>.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 부지 개념도]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체 발사를 위해서 발사체 이송로(약 3.4km, 폭 10m)와 전력·용수·통신 등의 기반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총 사업기간은 2021년~2024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는 492억 7백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동 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 18억원(설계비, 감리비 및 부대비) 중 7억 5,689만원만을 집행하여 10억 4,311만원이 이월되었고, 2022년 현재 예산현액 147억 4,311만원 중 1백만원만을 집행하여 실질행률은 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지연은 발사장의 구축 위치인 청석금이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해당하여, 발사장 구축을 위하여는 행위허가<sup>4)</sup>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2)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청석금

3) 민간 소형발사체는 기존 발사체(나로호, 누리호)와 제원 및 규격이 상이하여 제원에 맞는 신규발사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입장이다.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환경부와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 10월 중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기타 인·허가 및 협의도 10월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2022년 예산 137억원에는 공사비 130억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본래 계획대로라면 2022년 공사 발주 및 계약까지 연내 완료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인·허가를 받고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예산의 이월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의 연도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1년				'22년		'23 예산안	'24 (계획)
		예산	결산	실집행	이월	예산	예산 현액		
A 설계비	1,736	1,690	1,690	652	1,038	41	1,079	-	-
B 공사비	45,100	-	-	-	-	13,014	13,014	3,760	28,326
부지조성 및 이송로	37,456	-	-	-	-	11,250	11,250	2,060	27,626
부대공사	7,644	-	-	-	-	1,764	1,764	1,700	700
C 감리/부대비	2,371	110	110	105	5	645	655	440	1,181
감리비	2,271	100	100	100	-	600	600	420	1,151
부대비	100	10	10	5	5	45	50	20	30
합계 (A+B+C)	49,207	1,800	1,800	757	1,043	13,700	14,743	4,200	29,507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고려하여 당초

4)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계획에 따른 2023년도 연차 소요 예정액<sup>5)</sup>보다 감액된 42억원을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그러나 인·허가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4년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일정 역시 촉박한 실정이다.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의 2023년도 월별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 공사비	-	-	-	-	-	14,530	-	-	-	-	2,220	-	16,750
2. 시설 부대 경비	설계비	-	150	-	-	-	-	-	-	-	-	-	150
	감리비	-	11	-	-	-	615	-	-	-	-	255	881
	시설 부대비	-	-	-	-	-	10	10	10	-	-	7	44
합 계	-	161	-	-	-	15,155	10	10	-	-	2,482	7	17,825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 사업 계획 당시 연차별 소요 계획 및 현 시점에서의 연차별 집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당초 계획은 2021년도 예산 요구 당시 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 계획은 연차별 예산(요구)액을 말하고, 집행 계획은 현재까지의 실적행을 고려하여 향후 집행하려는 계획(안)이다.

[연차별 소요 예산 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비	2021	2022	2023	2024	계
당초 계획	1,800	13,700	22,000	12,000	49,500
변경 계획	1,800	13,700	4,200	29,507	49,207
집행 계획	757	1,044	17,825	29,581	49,207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실제로 2021년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가 신설됨<sup>6)</sup>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sup>7)</sup>되게 되므로, 2021년 10월 21일에 설계용역이 입찰공고<sup>8)</sup>된 동 사업의 경우도 동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동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여 도출한 실적 공사기간은 최소 9년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sup>9)10)</sup>. 이는 현재 동 사업의 사업기간에 비하여 예상되는 공기가 비교적 촉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건설기술 진흥법」부칙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45조의2, 제62조의3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

8) 입찰명은 ‘소형발사체 발사장 및 이송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2021년 10월 21일 공고되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80일, 추정금액은 13억 6,708만원이다.

9)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4조는 발주청이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2)에서는 실적 공사기간을 이용한 적정성 검토를 할 때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공사(동종 공사가 없는 경우 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거나,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10) 물론 이는 실적 공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정 공사기간’으로서의 정확한 결과값은 아니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작업일수 도출 시 설계물량에 공종별 1일 작업량을 적용, 산정하여야 하지만 동 사업의 경우 아직 설계가 미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해당 값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회귀분석 모델에 따라 계산된 값이다. 실제 동 사업에서의 공사기간은 실시설계 후 설계물량을 적용하여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적 공사기간 산정(안)]

구 분	계산기준	기간 (일)	비 고	
준비 기간	공사유형별 준비기간(포장공사(시설)) 적용	50	도로 연장	3km
작업 일수	$Y = - 160.855 - 14.288 \times W + 164.473 \times \ln(L) - 1.474 \times BL + 0.052 \times C$ W: 도로폭원(m), L:도로연장(m), BL:교량연장(m), C: 총공사비(백만)	2,594	도로 폭원	16m
비 작업 일수	법정공휴일 수 + 기후여건 불가능 일수 - 월별 중복 일수 (월별 8일보다 작은 경우 8일 적용), 여기서는 8일/월 적용	692	총 공사 비	32,045 백만원
정리 기간		30		
합 계		3,365		
약 9.2년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3년도 6월에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 및 선급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년 6개월 안에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향후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인·허가 결과 및 보완사항, 적정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예산안분석시리즈 Ⅲ

###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

---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9-11-6799-100-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8-001576-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